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외교학 석사 학위논문

# 제30차 유엔총회 북한의 한국문제(Question of Korea) 결의안 통과에 관한 연구

: 북한의 대중·소 교섭 레버리지와 비동맹외교를 중심으로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최익제

# 제30차 유엔총회 북한의 한국문제(Question of Korea) 결의안 통과에 관한 연구

: 북한의 대중·소 교섭 레버리지와 비동맹외교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신 욱 희

이 논문을 외교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최 익 제 (성명)

최익제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위 원 장 전 재 성 (인)

부위원장 조 동 준 (인)

위 원 신 욱 희 (인)

# 국 문 초 록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에서 힘(power)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생각된다. 강대국들은 힘으로 약소국들을 통제하고, 강대국 간의 타협/합의를 통해 국제정치 질서를 형성한다. 필연적으로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의 압력과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많은 경우 강대국의 요구대로 순응할 수밖에 없다.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갈등에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 하지만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강대국 간의 제휴가 이뤄지면,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의 이익은 무시되기 쉽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통념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약소국이 국제관계를 이용하여 강대국과의 힘의 격차를 상쇄시키고 자신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외교사례를 분석한다. 궁극적으로 약소국이 강대국과의 마찰 속에서도 자신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안 3390B호의 통과사례를 다룬다. 당시 한반도의 현상유지라는 강대국들의 이해가 일치하는 미소, 미중 데탕트 상황에 약소국인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유엔총회에서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한국문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외교적 자율성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데탕트 상황에서 약소국인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한국문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1975년 유엔의 한국문제 결의안을 둘러싼 외교전에서 북한 외교의 정치적 승리는 1970년대 전반기 북한의 대중소 레버리지와 비동맹외교가 유엔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결과였다. 한국문제는 1947년 제2차 유엔총회에서 미국에 의해 처음 유엔에 상정되었으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유엔군사령부(UNC)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을 통해 유엔의 개입이 제도화되었다. 1972년까지 유엔 내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 한국문제에 대한 친북결의안 통과는 번번이 실패했다.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된 북중소 삼각관계에서 중소의 협력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족쇄로 작용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중소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중소의 통제력이 느슨해지게 된다. 하지만 1960년대 북한은 이내 중소분쟁에 연루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시기 소련, 중국의 제재를 번갈아 경험한 북한은 중소 사이에서 꾸준히 자주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결국 1970년대 중소분쟁이 첨예화되는 중에 북한은 중국, 소련 양측과 우호관계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공산권 외교문서와 미국의 기밀해제문서를 보면 당시 북한이 중소분쟁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과 소련은 북한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외교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북중소 삼각관계의 변화는 저비스와 디트머가 제시한 삼각관계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북한의 자주성 강화는 북한외교가 1950년대 진영외교의 한계를 벗어나 1960년대 후반 자주적인 외교를 확대하면서 어떻게 비동맹외교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리고 북한 문헌과 대한민국 외교문서는 1970년대 전반기 북한이 비동맹 운동의 좌경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면서, 알제리와 쿠바 등 우호국들의 지원을 받아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비동맹운동에 가입하는 데 성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1970년대 전반기 신국제경제질서 수립을 둘러싼 미국과 비동맹권 간의 대립은 북한이 유엔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비동맹 국가들의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한 공간을 마련했다. FRUS 자료는 당시 미국이 비동맹세력과의 대립 가운데 유엔 내에서 느끼던 고립감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안 표결에서 대다수 비동맹 국가들이 북한을 지지했다.

요약하면 미중소는 한반도의 평화와 현상유지라는 공동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1974~1975년 유엔에서 벌어진 한국문제 토의에서 치열한 표대결을 펼쳐야만 했다. 이들이 한국문제에서 서로 타협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북한이었다. 북한은 북중소 삼각관계에서 중국과 소련이 서로 화해할 수 없는 현실을 이용해서 제3로서 외교적 이점을 누릴 수 있

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협상시도를 북중소 삼각관계 속에서 봉쇄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북한의 자주성은 데탕트기 비동맹 외교에서 많은 결실을 맺었다. 북한의 비동맹 외교는 비동맹운동의 좌경화와 빈부갈등처럼 국제사회의 흐름을 잘 이용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에게 반제투쟁을 연결고리로 비동맹과 제3세계에게 다가가는 전략적 선택과 노력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북한은 지속적인 평화공세와 비동맹외교를 통해 유엔에서 미국을 고립시켰다. 결국 1975년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를 자신이 적대하던 유엔의 이름으로 발표함으로써, 유엔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압박할 수 있었다.

주요어: 한국문제, 데탕트, 삼각관계, 중소분쟁, 북한, 비동맹외교, 제30차 유엔총회, 주한미군

학　번: 2017-22441

# 목 차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선행연구 검토 4
1 ) 데탕트기 북한외교와 한국문제 토의에 관한 연구 4
2 )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관한 연구 6
3. 연구방법 및 자료 ····· 7
1 ) 삼각관계의 개념과 적용 7
2 ) 자료의 활용 11
4. 논문의 구성 ····· 12

Ⅱ. 한국문제의 기원 및 전개과정 ····· 14
1. 한국문제의 역사적 기원 ····· 14
1 ) 카이로 선언과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 14
2 ) 한국문제의 유엔개입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15
3 ) 한국전쟁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설치 16
4 ) 제네바 회담의 실패 17
5 ) 소결 19
2. 한국문제의 토의과정 ····· 19
1 ) 유엔총회와 UNCURK의 연례보고서의 자동상정 19
2 ) 한국문제 토의와 남북한 동시초청안 논쟁 20
3 ) 한국문제의 장기화와 UNCURK 보고서의 재량상정 21
4 ) 데탕트 초기 한국문제 토의 쟁점 23
5 ) 1971년 중공의 대표권 문제와 한국문제 토의연기. 24
6 ) 1972년 한국문제 토의연기와 북한의 좌절 26
7 ) 소결 .27

Ⅲ. 1950~60년대 북중소삼각관계 형성과 비동맹외교 추진배경 ····· 29
1. 북중소 삼각관계의 형성 및 변화 ····· 29
1 ) 한국전쟁과 북중소 초기 협력관계 29
2 ) 중소의 대북 내정간섭 30
3 ) 중소갈등과 북중, 북소관계의 변화 32
4 ) 중소분열과 북한의 자주성 확대 36
5 ) 북소관계 악화와 북중연대 39
6 ) 북소관계 복원과 북중 경색 41
7 ) 북소협력의 지속과 북중관계 복원 44
8 ) 소결 47
2. 비동맹운동의 발전과 북한 외교 ····· 49
1 ) 비동맹운동의 태동과 북한의 진영외교기 .49
2 ) 반둥회의(아시아·아프리카회의)와 북한외교의 확대 51
3 ) 비동맹 운동의 출현과 북한의 제3세계 외교 53
4 ) 1~2차 비동맹 정상회의와 내부분열. 56
5 ) 북한의 제2반둥회의(친중) 노선과 좌절 59
6 ) 비동맹의 침체기와 북한의 자주외교노선 62
7 ) 소결 64

Ⅳ. 북한의 외교전술과 제30차 유엔총회에서의 성과 ····· 66
1.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 미중소 삼각관계 ····· 66
2. 데탕트기 북한외교의 전략와 목표 ····· 69
3. 한국문제에 관한 미중대화와 소련의 입장 ····· 74
1 ) 한국문제에 관한 미중대화 74
2 ) 한국문제에 관한 소련의 입장과 북소관계 77
4. 비동맹 운동의 재개와 제3세력화 ····· 80
1 ) 비동맹운동의 부활 80
2 ) 비동맹 운동의 좌경화와 진영화 현상 82

5. 북한의 비동맹외교와 한국문제 ····· 87
1 ) 국제혁명력량의 연대성 강화전략 87
2 ) 1972~73년 비동맹회의와 한국문제 결의 90
6. 북중공조의 파열 ····· 94
7. 북한의 대중소 레버리지와 비동맹외교의 성과 ····· 98
1 ) 유엔 내 비동맹 세력의 응집력 강화와 미국의 고립 98
2 ) 북한의 자주성 강화와 비동맹 가입 102
3 ) 제30차 유엔총회와 국제적 연대성 강화의 성공적 결과 109
4 ) 북한의 남북대화 중단과 공세적 전환 115
5 ) 북한의 중립정책과 대중·소 레버리지 116
6 ) 미국의 유엔군사령부 해체 협상안과 북중소 삼각관계의 작용 ····· 118
7 ) 소결 161

Ⅴ. 결론 ····· 164

참고문헌 ····· 167

Abstract ····· 193

# Ⅰ. 서론

## 1. 문제제기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에서 힘(power)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생각된다. 강대국들은 힘으로 약소국들을 통제하고, 강대국 간의 타협/합의를 통해 국제정치 질서를 형성한다. 필연적으로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의 압력과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많은 경우 강대국의 요구대로 순응할 수밖에 없다.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갈등에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 하지만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강대국 간의 제휴가 이뤄지면,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의 이익은 무시되기 쉽다. 이러한 통념에 비춰볼 때 한반도의 현상유지라는 강대국들의 이해가 일치하는 미소, 미중 데탕트 상황에 약소국인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한국문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외교적 자율성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다.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데탕트 상황에서 약소국인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한국문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데탕트기 중국은 소련의 대외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문화대혁명의 강경노선을 수정하고 교전국인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추진했다. 동시에 중국지도부는 대소견제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북한의 지지를 얻고자 했으며, 대북지원을 강화하여 문혁기에 냉각된 북중관계를 빠르게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중국은 정상회담과 비밀외교를 통해 국제 현안에서 미국과 원만한 타협을 추구했으며,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인 한국문제를 가지고 굳이 미국과 대립각을 세울 생각이 없었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남북한 분쟁이 미중관계 정상화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현상유지를 원했다. 1973년 제28차 유엔총회에서도 중국 공산당은 한국문제에서 미국과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만 해체하는 타

협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려고 애썼다.

데탕트기 소련도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았다. 이미 흐루시초프 집권기부터 소련은 세계혁명의 중심지보다는 세계 초강대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공존을 전제로 자국의 이익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1960년대 소련의 전략적 대미외교는 마오가 이끄는 중국공산당과의 이념적 갈등을 부추기는 단초가 되기도 했었다.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미접근을 견제하고자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1970년대 전반기 소련은 미국과의 정상회담과 정기적 회담을 통해서 전략무기제한협상(SALT)을 포함한 국제적인 현안들에 원만하게 합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소련지도부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갈등이 확대되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소련의 태도는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에서도 잘 드러난다. 결국 소련은 한반도 문제로 인해 미국과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 처하거나 자국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했고, 자연스레 한반도의 급진적인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북한에 자제를 요청하는 입장이었다.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논의된 것은 1947년 9월 미국이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2차 유엔총회에 한국의 독립문제를 안건으로 제기했던 것이 계기였다.[1] 제3차 유엔총회에서는 미국의 주도하에 남한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선언하는 결의를 채택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제5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2]의 연례보고서가 매해 자동으로 유엔총회 의제에 포함되면서 유엔에서 한국문제를 계속해서 토의하게 되었다.[3][4] 미국이 남한 정부의 정통성을

1) 제2차 유엔총회에서는 찬성 43, 반대 0, 기권 6의 결과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하고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A/RES/112(II))했다.

2) 1950년 제5차 유엔총회에서 유엔한국위원단을 대체하여 한국문제에 대해서 유엔을 대표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A/RES/376(V): 찬성 47/반대 5/ 기권 7)

3) 1968년 제23차 유엔총회에서 미국과 남한에 의해 한국문제를 자동상정에서 사무총장의 재량상정으로 바꾸는 결의(A/RES/2466(XXIII))가 채택되었으나 공산 측에서 지속적으로 한국문제를 거론하면서 실제적으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매해 상정됐다.

4) 1971년(제26차), 1972년(제27차) 유엔총회에서는 데탕트의 흐름 속에서 남북대

지지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공산권은 매해 반복되는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토의에서 소수 입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1972년 제27차 유엔총회까지 미국과 남한 측을 대변하는 총회 결의안이 항상 압도적 지지로 채택되었다.[5)]

그러나 1974년 제29차 유엔총회에서는 북한 측의 한국문제 결의안이 가부동수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될 정도로 2년 만에 국제여론에 큰 변화가 있었다. 결국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는 미국과의 대립 속에서 유엔군사령부의 무조건적 해체, 남한에 주둔한 모든 외국군대 철수,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북한 측의 결의안이 사상 최초로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6)] 정전협정 유지,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실질적인 현상유지를 원하는 미국 측의 한국문제 결의안도 동시에 채택되었지만[7)], 북한의 한국문제 결의안이 28년 만에 통과된 사실로 인해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면서 당시 '한국문제의 한국화'를 위한 조용한 해결을 원했던 미국에게 외교적으로 타격을 주었다는 점, 북한의 이해를 반영한 한국문제 결의안이 통과했던 최초의,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약소국인 북한의 외교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8)]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북한은 제31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결의안을 스스로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가 중단되면서 제30차 유엔총회 결의는 그 빛이 바래게 됐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1972년 제27차 유엔총회까지만 해도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참석조차 할 수 없었던 북한[9)]이 1973년 옵서버 자격으로 제28차 유엔총회

---

화를 환영하고 사태를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한국문제 토의를 연기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당시 공산 측에서 남북대화를 방해하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과 유엔군사령부의 제거하자는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당시 한국문제의 한국화를 추구하는 미국 행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5) 역대 한국문제 결의안의 투표결과는 https://library.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찬성: 54, 반대: 43, 기권: 42

7) 찬성: 59, 반대: 51, 기권: 29

8) 미국 정부문서는 북한의 결의안 통과를 'at least quaified victory'라고 평가했다.

9) 1960년(제15차 유엔총회)부터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건(북한이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용한다)을 걸고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

에 참석해서, 불과 2년 만에 미국과 남한의 조직적인 방해,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공세적인 외교정책으로 자국의 입장을 관철하는 유엔총회 결의를 통과시킨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다.

본 연구는 1973년 남북대화가 중단된 후 약 2년간 북한 측의 공세적인 외교정책이 어떻게 1975년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에 대한 친북결의안 통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전체적으로 한국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처음 논의되었던 1943년 카이로 선언부터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까지의 한국문제 논의를 포괄하지만, 주로 마지막 2년에 해당하는 1973~1975년에 초점을 맞춘다. 세부적으로는 북중소 삼각관계의 프레임으로 북한이 중국과 소련을 상대로 교섭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요인을 밝히고, 당시 비동맹권의 지지가 결의안 통과에 크게 기여했던 점에 주목하여 북한이 비동맹권(제3세계)을 대상으로 한국문제에 관한 지지를 공고화하는 과정을 미국과 비동맹권의 관계에 유의해서 살펴볼 것이다.

## 2. 선행연구 검토

### 1) 데탕트기 북한외교와 한국문제 토의에 관한 연구

1970년대 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미중화해로 인해 급변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북한외교의 변화를 다룬다. 당시 북한 지도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중국의 대미정책에 협력하면서 남북대화를 시작했다고 본다(홍석률, 2012). 데탕트기 중국공산당의 대미접근은 문화대혁명기 혁명외교와 대비되면서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유독 북한만은 중국의 대미정책을 지지하는데, 중국의 중재를 통해서 미북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철수와 한국문제 해결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최명해, 2009). 그

---

에 북한 대표의 초청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북한이 끝까지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부정하면서 1973년 유엔이 북한을 한국문제 토의에 조건 없이 초청할 때까지 북한은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러나 1972~1973년 중국은 비밀리에 미국과 한국문제 토의연기와 UNCURK 해체를 논의하면서 타협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북한의 급진적인 태도와 거리를 두었다(홍석률, 2020). 결국 북중공조에 따른 남북대화가 주한미군 철수를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가자, 1973년 박정희 정권이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공론화하는 6.23선언과 김대중 납치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유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홍석률, 2004). 1973년 제28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은 유엔군사령부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한국문제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했으나, 중국은 미국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일단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만 해체하자는 미국 측의 결의안을 수용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이상숙, 2008). 결국 파리평화협정에서 북베트남의 성공과 북중공조에 대한 회의감은 북한이 대미직접협상과 적극적인 비동맹외교를 펼치는 계기가 된다(이용주, 2018). 하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대미접촉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과 양자관계를 구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대신 평화의 구조(Structure of Peace)라는 강대국 중심의 데탕트 정책에 따라 중국이나 소련을 통해 북한을 관리하려고 했다(홍석률, 2004, 2012).

기존연구는 북한이 유엔에서 한국문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동맹국인 중국과 이견이 존재했으며 미국과의 직접교섭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강화하게 되는 배경을 보여준다. 당시 북소관계는 북중관계보다 더 냉랭했던 것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소련의 외교적 지원도 중국의 지원수준을 넘지 않았다. 한편 최명해(2009)는 1960년대 문화대혁명으로 이완된 북중관계가 데탕트기 다시 복원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대소위협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힌다. 소련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에 처했던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동맹이탈은 지정학적으로 소련의 대중 포위망을 완성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데탕트기 한반도의 현상유지에 동의하는 중국과 소련을 통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자신의 한국문제 결의안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었는지, 즉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북한이 어떻게 자신의 외교력을 발휘했는지를

부분적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System Effects』(Robert Jervis, 1997)에서 제시하는 삼각관계(triangle relationship) 개념과 Lowell Dittmer(1981)가 제시한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의 유형 중 '낭만적 삼각관계(romance triangle)'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한국문제 결의안 통과과정에서 나타난 북한, 중국, 소련의 관계를 북중소 삼각관계라는 프레임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이를 통해서 북한이 데탕트가 주는 제약(한반도의 긴장완화/현상유지에 대한 중공과 소련의 압박)을 어떻게 극복하고 중국과 소련을 상대로 교섭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관한 연구

주로 역사적으로 한국문제가 결의가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를 다루며,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한국문제 결의의 내용과 표결결과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특히 1960년대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국가들이 대거 유엔에 가입하면서 유엔 내에 비동맹·제3세계 국가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박치영, 1994; 이한기, 1976; 김선경, 1975; 박영희, 1974). 1972년 제27차 유엔총회에서 비동맹·제3세계 국가들이 북한을 대변하는 한국문제 결의안을 제기한 것에서 북한에 대한 비동맹국가들의 지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본다(이한기, 1976). 또한 1973년 제4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 한국문제에 관해서 북한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한다(박영희, 1974). 제29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에서 나타난 유엔회원국들의 투표 성향[10]을 분석하면서 북한의 한국문제 결의안에 대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비동맹·제3세계 국가들의 지지가 실제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김선경, 1975). 북한이 제30차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기세를 몰아 1976년 제31차 유엔총회에서 재차 북미평화협정,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10) 미국 측의 결의안: 찬성61/반대43/기권31 (통과), 북한 측의 결의안: 찬성48/반대48/기권38 (부결)

인한 국제여론의 악화로 포기한 것으로 분석한다(박치영, 1994).

기존연구는 북한의 한국문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으로 비동맹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했던 점을 꼽는다. 그러나 대개 유엔에서의 토의결과를 통해 드러난 현상기술에 그치고 있다. 즉 유엔에서 비동맹국가들이 수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북한에 대한 그들의 지지가 늘어난 현상을 기술하고 있을 뿐 그동안 한국문제에 관망하던 비동맹국가들이 북한을 지지하게 된 국제정치적 배경과 이러한 변화를 이끈 데탕트 시기 북한의 외교적 노력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고찰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실제 한국문제 결의안을 둘러싼 표결이 격화되는 1974, 1975년에 북한이 어떻게 비동맹국가들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보충될 필요가 있다. 결정적으로 이전까지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를 주도하던 미국이 친북결의안에 대한 비동맹국가들의 움직임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도 함께 규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과 비동맹권의 관계에 유의하여 유엔에서 비동맹국가들의 영향력 확대가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국제정치적 배경을 검토하고 북한의 비동맹외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및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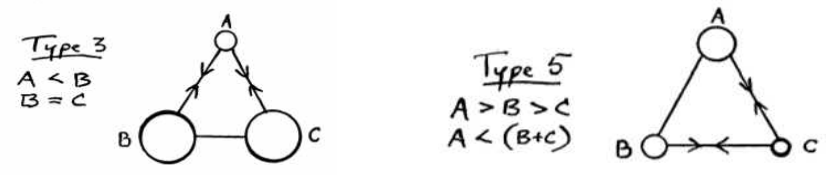
### 1 ) 삼각관계의 개념과 적용

테오도르 캐플로우(Theodore Caplow)는 힘의 배분에 따른 삼각관계의 여섯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11] 각 유형에서 A, B, C는 상대방의 통제를 거부하고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서로 다른 양태를 보인다. 이 중에서 '유형 3'[12]과 '유형 5'[13]는 서로 다른 힘의 배분 속에서 셋

11) 먼저 네 가지 가정을 제시한다. 첫째, 각 행위자들은 자신보다 약한 상대방을 통제한다. 둘째, 각 행위자는 더 많은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한다. 셋째, 두 행위자는 연합을 통해 각자의 힘을 합칠 수 있다. 넷째, 강한 행위자의 통제는 상대방이 제3자와 연합을 형성하게 만든다. T. Caplow, "A Theory of Coalitions in the Tria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21, No.4, 1956, pp.489~490.

중에서 힘이 가장 약한 행위자가 힘의 우위를 지닌 두 행위자 사이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1> 캐플로우의 삼각관계 유형 3번과 5번.




출처: T. Caplow, 1956, p.491.

로웰 디트머(Lowell Ditter)는 삼각관계 내에 존재하는 3개의 양자관계를 다루는데, 여기에 게임이론적 분석을 도입하고 있다.[14] 삼각관계의 한 행위자가 다른 두 행위자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역으로 두 행위자의 관계가 나머지 한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상정한다.

모든 행위자가 자신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길 원한다고 가정하면 각각의 행위자는 다른 두 행위자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둘 중 한 행위자와는 긍정적인 관계를 갖기를 선호한다. 또한 각각의 행위자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두 행위자 사이의 악의적 공모를 방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삼각관계에서 가장 유리한 역할은 낭만적 삼각관계[15]의 중심

12) A가 B, C보다 힘이 약하고, B와 C의 힘은 동등한 경우. B와 C는 서로 상대방의 통제를 거부하고 힘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AB 또는 AC의 연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A는 약하지만 둘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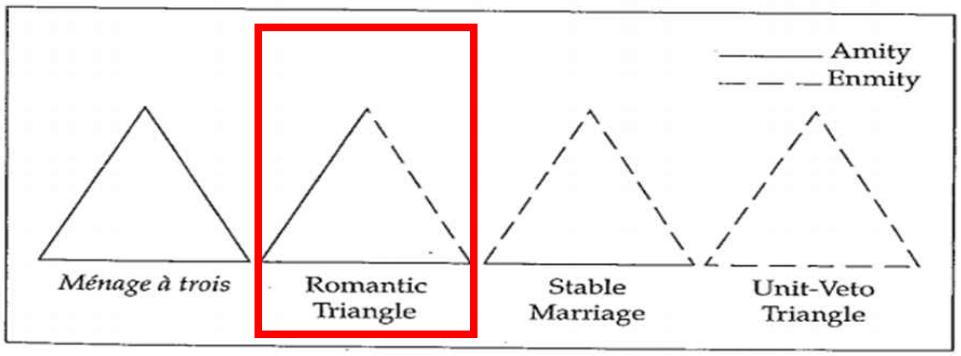
13) A가 B, C보다 힘이 강하지만, BC의 연합보다 약한 경우 (B가 C보다 힘이 강함). A와 B는 서로 힘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한다. 특히 B는 A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C와의 연수를 추구한다. 그 결과 AC 또는 BC의 연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C는 약하지만 둘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는다.

14) Lowell Dittmer, “The Stratef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Vol.33, No.4, 1981, pp.485-515; Lowell Dittmer, *Sino-Soviet Normalization and Its International Implications, 1945-1990*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2) 참조.

15) 낭만적 삼각관계(romantic triangle)는 중심(pivot) 행위자가 다른 주변 행위자와 각각 긍정적인 관계를 지니고, 주변 행위자는 서로 부정적인 관계로 보인다.

(pivot)이다. 이 때 중심적 행위자(pivot)은 서로 대립하는 주변 행위자들의 갈등을 이용해서 손쉽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양국 간의 적대적 관계가 제3국에게 자신의 국력과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림 3>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 유형 (4가지)




출처: Lowell Dittmer, 1992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는 역사적 사례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삼각관계에 대한 유용한 설명들을 제공한다.[16] 그는 삼각관계에서 행위자들(A, B, C)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양자관계는 제3자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았다. 즉 A-B 관계는 B-C 관계와 A-C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A는 C와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B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삼각관계라는 상황에서 저비스는 중심(pivot)[17]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저비스가 제시한 삼각관계의 중심(pivot)은 두 행위자가 서로 갈등하는 삼각관계에서 이득을 얻는 제3

16) Robert Jervis, "Relations, Alternatives, and Bargaining", *System Effects: Complexity in Political and Social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pp. 177-209. 참조

17) 삼각관계에서 중심적 행위자(pivot)는 자국의 행위보다 주변의 다른 두 국가의 갈등이 격화되는 갈등으로 인해 갖게 된다. 양자 간의 관계악화는 제3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분쟁 중인 양국은 제3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제3자는 양자에 대한 협상력과 안보까지 확보한다. 중심적 행위자(pivot)은 갈등하는 양측이 자신에게 긴밀히 협력하도록 조정할 수 협상력을 얻고, 경제적, 군사적 자원에 비해 과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국을 말한다. 저비스는 일정 조건 하에서 약소국도 삼각관계의 중심(pivot)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했다.[18]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도 형식사회학의 측면에서 집단구성원의 숫자(또는 규모)가 사회집단의 질적인 성격과 형태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었다. 짐멜에 따르면 양자(dyad)는 상호작용의 최소단위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고, 삼자(triad)는 양자관계의 확장으로 상호작용에서 복잡화가 발생하면서 양자(dyad)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모습을 보인다.[19] 제3자의 존재는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방해하는 역할을 할 때도 있다.[20] 짐멜은 이런 삼자(triad) 간의 관계를 크게 3가지로 유형화했다. 짐멜이 제시한 삼자관계 중 '어부지리'[21]와 '분리를 통한 지배'[22] 유형에서 갈등하는 양자와 구별되는 제3자는 구조적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면에서

---

18) 많은 자원을 지녔지만 더 작고 더 약한 파트너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는 그것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그 상대가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있을 때에 더욱 그렇다. 상대방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에서 큰 이익을 얻는 국가는 상대방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가능성이 낮다. 반대로 동맹에서 잘 대접받지 않는 국가는 탈퇴 위협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선택권을 지닌 국가는 자신의 지지에 대해서 강한 교섭을 할 수 있고, 다른 대안이 없는 국가는 애원자가 될 수 밖에 없다.

19) Georg Simmel, "The Number of Members as Determining the Sociological form of the Group Ⅰ,"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8, No.1, 1902; pp.1~46; Georg Simmel, "The Number of Members as Determining the Sociological form of the Group Ⅱ,"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8, No.2, 1902; pp.158~196.

20) Nooteboom, Bart. "Simmel's Treatise on the Triad," *Journal of Institutional Economics,* Vol.2, No.3, pp.365~383.

21)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양자(dyad)관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초당파적 제3자는 양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면서 집단의 단일성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어부지리를 취하는 제3자는 양자(dayd) 간의 갈등을 방치하고 구경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22) 제3자는 다른 두 행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양자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 어부지리를 취하는 제3자가 수동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과 다르게, 양자(dyad)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 둘이 상잔한 후에 손쉽게 양자 모두를 지배하려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지닌다. 궁극적으로 제3자는 삼자(triad)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추구하게 된다.

디트머의 낭만적 삼각관계의 중심(pivot)과 유사성을 지닌다. 특히 '어부지리' 유형은 적극적으로 양자를 분열시키고 지배하려는 의도가 없는 약소국의 경우에도 강대국(또는 유력한 연합세력) 간의 갈등 사이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 ) 자료의 활용

본 논문는 공산권·미국·북한·한국·유엔의 1차 사료를 통해서 한국문제에서 국제정치상 삼각관계의 작용을 읽어내고자 한다. 주로 활용하는 1차 사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냉전기 공산권 국가들의 외교문서다. 구체적으로 우드로 윌슨센터 디지털 아카이브(Wilson Center Digital Archive)에서 영어로 번역해서 제공하는 공산권 국가들(불가리아, 동독, 헝가리, 루마니아 등)의 외교문서를 활용했다. 특히 1970년대 전반기 '북소관계', '북중관계', '한국문제'의 주제와 관련된 문서들을 사용했다. 해당 자료들은 중소갈등과 데탕트기 북중소 삼각관계의 역학관계를 드러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미국정부의 공개문서다. 미국 국무부에서 발행하는 "미국 외교사료집(FRUS: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과 2010~2012년 대통령기록관이 미국 닉슨도서관(Richard Nixon Library), 포드대통령도서관(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에서 수집한 해외기록물을 활용했다. 특히 FRUS 자료는 1969~1976년 닉슨 행정부과 포드 행정부 시기의 기록을 사용했으며, 대통령기록관의 해외기록물 수집자료는 『대통령기록관 해외기록물 수집목록집: 미국편 2』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 위 자료들은 데탕트기 한국문제와 관련한 미중대화, 미국의 대외정책 등의 기록을 잘 보여준다.

셋째, 북한 공간문헌이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보관 중인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 『근로자』와 북한에서 발행한 『김일성저작선집』, 『조선중앙년감』 등 북한문헌들을 활용했다. 이 자료들을 통해 데탕트 시기 북한의 대외전략과 통일정책, 비동맹외교에 대한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대한민국 외교문서다. 외교부 외교사료관에서 공개된 마이크로 필름형태의 대한민국 외교문서를 활용했다. 시기적으로 1970년대 전반기 박정희 정부의 자료들을 사용했으며, 한국문제와 비동맹외교, 북한 및 주요 강대국의 동향에 관련된 기록들을 핵심적으로 다뤘다. 데탕트기 비동맹권의 동향과 북한의 비동맹외교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다섯째, 유엔문서다. 1973~195년 제28~30차 유엔정기총회와 1974~1975년 유엔특별총회에서의 결의내용, 회의기록, 표결기록을 핵심적으로 참고했으며, 유엔에서 발간하는 유엔연감(UN Yearbook)을 함께 활용했다. 이 자료들은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 진행과정, 미국과 비동맹의 갈등구도를 보여준다.

## 4. 논문의 구성

제1장 서론은 우선 문제제기에서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데탕트 상황에서 약소국인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한국문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연구질문을 제시한다. 선행연구 검토에서 '데탕트기 북한외교와 한국문제 토의에 관한 연구'와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관한 연구'를 정리했다. 연구방법과 자료는 '삼각관계 프레임의 내용과 적용'을 주된 분석방법으로 제시하고, 논문에서 참고한 1차 사료들을 설명한다.

제2장 한국문제의 기원 및 전개과정은 한국문제 토의가 시작되게 된 역사적 기원과 전개를 시계열로 다룬다. 우선 1943년 카이로 회담(한국 독립조항)에서부터 제네바 회담의 실패까지 유엔총회에서 정기적으로 한국문제를 다루게 된 배경을 다룬다. 이후 1950~60년대 유엔총회에서 진행된 한국문제 토의내용과 1970년대 초 한국문제 토의연기안 등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 전에 있었던 한국문제 토의의 진행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 1950~60년대 북중소 삼각체계 형성과 비동맹외교 추진배경은 먼저 데탕트 이전 북중소 삼각관계의 형성 및 변천과정를 다룬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형성된 북중소 삼각관계에서 중소, 북중, 북소관계가

각각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삼각관계 속에서 중소갈등이 북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탈식민주의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비동맹 운동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북한과 비동맹운동이 어떻게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지 요약한다.

제4장 북한의 외교전술과 제30차 유엔총회에서의 성과는 먼저 아시아에서 데탕트의 배경이 된 강대국(미중소) 간 이해관계를 검토하고, 데탕트기 북한의 외교전략과 목표, 한국문제에 대한 미중소의 입장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30차 유엔총회의 중요한 특징인 미국과 비동맹 간의 갈등구도와 그 틈을 파고든 북한의 비동맹 외교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북중공조의 파열 이후에 북한이 어떻게 북중소 삼각관계의 역학을 이용하여 미국을 상대했는지 확인한다.

제5장 결론은 삼각관계에 대한 분석적 논의가 데탕트 시기 북중소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제30차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결의과정에서 북한외교의 성공요인을 정리 및 확인한다.

# Ⅱ. 한국문제의 기원 및 전개과정

## 1. 한국문제의 역사적 기원

### 1 ) 카이로 선언과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

1943년 12월 카이로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제스 총통은 '적당한 시기에 한국은 해방되고 독립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일제식민지였던 한국의 독립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선언이었다. 1945년 7월 포츠담에 모인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영국의 애틀리 수상, 소련의 스탈린 서기장의 회담에서 카이로 선언의 실행을 재차 언급하면서 한국의 독립조항은 국제적으로 재확인되었다. 회담에 참석하지 못한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 총통도 전보로 포츠담 선언의 서명을 승낙했다.[23] 소련의 스탈린 서기장은 일본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았으나, 8월 8일 대일선전포고를 발표하면서 포츠담 선언에 대한 동의를 표시했다.[24] 이는 종전 후 한국의 독립에 대한 연합군 수뇌부들의 합의가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개국 외상회의는 한국통일문제를 토의했고, 5년 이내의 신탁통치에 합의하면서 한반도를 분할점령한 미소가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구체적인 실행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1946년 3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소련이 임시정부 수립에서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정당 및 사회단체를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미국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휴회를 한다.[25] 당시 한국 사회는 신탁통치 반대세력(대부분 민족주의 계열), 찬성세력(공산주의 세력)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소련의 주장은 사실상 임시정부를 자신에게 유리한 친공산 세

---

23) 신종훈. "1945년 여름, 포츠담."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vol.38, no. 1, 2016, pp.153, 159.

24) 신종훈. 2016, pp.151~153.

25) 기광서, "훈령으로 본 소련의 미소공동위원회 전략." 『역사문제연구』, vol. 24, 2010, p.314.

력으로 구성하겠다는 내용과 다름이 없었다. 1947년 5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신탁통치안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미소는 1차 미소공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 신탁통치 반대세력을 포함시키는 문제로 대립을 반복한다. 결국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되고, 미국은 모스크바 협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미, 영, 중, 소 4개국 회담에서 한국문제를 토의하자고 제안한다. 미국의 4개국 회담제안은 소련과의 합의가 난망한 상황에서 유엔의 지도 하에 남북한의 총선거를 실시하려는 구상을 담고 있었다.[26] 그러나 소련은 미국의 영향력이 막강한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논의를 꺼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소련은 미국의 4개국 회담제안을 거절하고, 기존의 합의대로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한국문제 해결을 고집한다.

2 ) 한국문제의 유엔개입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1947년 9월 17일 미국은 독자적으로 제2차 유엔총회에 한국문제 의제채택과 남북한 총선거를 감독할 위원회 설치를 안건으로 제출했다. 9월 21일 유엔 운영위원회는 찬성 12, 반대 2로 한국문제를 총회의제로 채택한다. 9월 23일 유엔총회는 찬성 41, 반대 6, 기권 6로 한국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할 것을 결정하고 제1위원회(정치위원회, 소총회)에서 한국문제를 토의 및 보고하도록 한다.[27] 9월 26일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 채널을 통해 한국에 주둔한 외국군을 동시에 철수한 뒤 한국인들이 자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것을 미국에 제안하고, 동시에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논의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제동을 걸었다.[28] 하지만 미국은 한국정부의 수립이 외국군 철수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

---

26) 최종기, “국제연합과 한국문제 - 소련 및 공산제국의 주장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vol.21, no.2, 1983, pp.38~39.

27) United Nations (eds.), *The Year of the United Nations, 1947~1948* (New York: United Nations, 1949), p.82.

28) 국가기록원, “정부수립과 유엔: 한국문제의 UN상정 및 총선거 결의”, 『한국과 유엔』. https://theme.archives.go.kr/next/unKorea/resolution.do(검색일: 2021년 7월 22일)

련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1947년 11월 14일 제2차 유엔총회는 총회결의 제112(Ⅱ)B호를 통해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하고, 위원단의 감시하에 한국에서 인구비례의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했다.[29]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은 소련의 비협조로 북한 지역에 들어갈 수 없었다. 임시위원단은 소총회의 결정에 따라 임무수행이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총회는 총회결의 195(Ⅲ)호를 통해서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선언한다. 또한 임시위원단의 임무를 계승하는 유엔한국위원단을 설치해서 한반도 내 외국군 철수를 감시하고 한국의 통일 및 민주정부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했다.[30] 1949년 6월 29일 위원단의 감시하에 남한에 주둔했던 미군은 전부 철수했지만 위원단은 유엔의 개입을 거부하는 북한으로 인해 소련군의 철수를 시찰할 수 없었다.[31] 1949년 10월 21일 제4차 유엔총회는 총회결의 293호(Ⅳ)를 통해 유엔한국위원단의 존속과 강화를 결정하고, 위원단이 남북한 간에 발생하는 모든 군사적 위협을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추가적인 임무를 부여한다.[32] 한편 1949년 4월 19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대한민국의 회원가입 안건을 찬성9, 반대2로 통과시켰지만,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대한민국의 유엔가입은 무산되었다.[33]

### 3 ) 한국전쟁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설치

---

29)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UNGA, A/RES/112(Ⅱ), 1947.

30)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UNGA, A/RES/195(III), 1948.

31) 유지아, "한국문제 유엔이관 이후: 유엔총회에서 미소양군 철수문제 논의과정", 『중앙사론』, vol. 46, 2017, pp.279~280.

32)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UNGA, A/RES/293(IV). 1949.

33) Untied Nations (eds.), *The Year of the United Nations, 1948~1949* (New York: United Nations, 1950), pp.381~382.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은 유엔이 한국문제에 더욱 깊숙이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주도로 북한의 침략행위를 규탄하고 북한군에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 제82호를 찬성9, 반대1, 불참석1(소련)로 채택했다.[34] 또한 6월 27일 안보리는 전투를 지속하는 북한군을 격퇴시키기 위해 유엔 회원국에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를 권고하는 안보리 결의 83호를 결의했다.[35] 그 결과 미국을 시작으로 여러 회원국들이 직접 자국 군대를 파병하는 등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안전보장조치에 가담한다. 잇따라 7월 7일에는 안보리에서 16개 참전국의 군대를 미군의 지휘 하에 통합해서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는 안보리 결의 84호가 채택되었다.[36]

10월 7일 제5차 유엔총회는 총회결의 376호에서 유엔군의 북진을 승인했으며 유엔한국위원단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의 구호와 재건을 담당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을 설치하고, 한반도에 독립적이고 통일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유엔의 목적을 달성하는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했다.[37] 사실상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한국문제에서 유엔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1951년부터 1970년까지 매년 한국문제를 유엔총회에 보고하게 된다. 1951년 2월 1일 유엔총회는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중공의 행위를 침략행위로 규탄하는 결의 498호(Ⅴ)를 채택하고, 그해 5월 18일에는 북한과 중공에 전략물자 금수조치를 취하는 결의 500호(Ⅴ)을 채택하기도 했다.

4 ) 제네바 회담의 실패

---

34) Untied Nations (eds.), *The Year of the United Nations, 1950* (New York: United Nations, 1951), pp.221~222.

35) "Complaint of aggression upon the Republic of Korea," UNSC, S/RES/83, 1950.

36) “Complaint of aggression upon the Republic of Korea”, UNSC, S/RES/84, 1950.

37)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UNGA, A/RES/376(V), 1950.

1953년 7월 27일 북한군 대표와 중공군 대표를 일방으로, 유엔군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는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조인된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휴전에 반대하면서 북한군과 중공군, 유엔군만 휴전협정에 서명했다.[38] 휴전협정 제4조 제60항은 90일 이내 고위급 정치회담을 개최해서 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토의할 것을 건의했다.[39] 1953년 8월 28일 제7차 유엔총회는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 개최를 환영하는 결의 711호를 채택한다. 중공 및 북한이 예비회담에서 중립국들의 회담 참여를 주장했지만, 유엔군 측은 사실상의 교전국인 소련을 포함한 참전당사국만이 회담에 참여해야한다고 대립했다.[40] 결국 12월 예비회담은 쌍방의 의견차이로 결렬된다.

1954년 2월 18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 외상들은 베를린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4월 26일 제네바에서 한국문제를 위한 고위급 정치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다. 제네바 고위급 정치회담은 공산 측(소련, 중공, 북한)과 남아공을 제외한 유엔군 측(15개 참전국)의 협상으로 진행되었다. 유엔군 측은 중공군이 먼저 철수하고 나서 유엔감시 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고, 유엔군 철수는 통일정부 수립 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1] 공산측은 외국군 철수가 선행되어야 하고, 교전당사자인 유엔의 관여를 거부하고 중립국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입장이었다.[42]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더 이상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유엔군 측은 일방적으로 1954년 6월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통일에 관한 유엔의 기본원칙을 공표한다.[43]

---

38)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협상전략과 지휘체계”, 『사학연구』, vol.90, 2008, pp.343~344.

39) 국가기록원, “휴전협정 원문”, 『한국과 유엔』.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Y&archiveEventId=0049272219#1(검색일: 2021년 7월 22일)

40) 홍용표, “1954년 제네바회의와 한국전쟁의 정치적 종결 모색”,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8, no.1, 2006, p.37.

41) 김보영,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과 외국군 철수 의제”, 『군사지』, vol. 95, 2015, p.72.

42) 김보영, 2015, p.72

43) 권오중, "제네바 한국평화회담(1954)의 진행, 결과, 그리고 의미: 한반도 6자회

핵심은 ①유엔이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조정역할을 수행할 정당하고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②한국의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정부의 수립은 인구비례에 따른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44] 결국 제네바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되면서 한국문제 토의는 다시 유엔으로 돌아오게 된다.

5 ) 소결

역사적으로 한국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미소냉전의 시작이라는 국제정세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1940년대 카이로 선언과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미소공동위원회는 냉전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한국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는 미국의 주도 하에 유엔의 한국문제 개입을 가져왔다.

1950년 유엔은 한국전쟁에 역사상 최초의 유엔군을 파병하는 결정을 통해서 한국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유엔군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북한, 중국과 함께 직접 서명했으며, 제네바 회담에서도 협상주체로서 소련, 북한 및 중공을 직접 상대했다. 1954년 제네바 정치협상의 결렬은 유엔이 남한에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을 통해 한국문제에 계속해서 개입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 2. 한국문제의 토의과정

1 ) 유엔총회와 UNCURK의 연례보고서의 자동상정

1954년 11월 제네바회담에 참가했던 유엔참전국들은 사무총장에게 제네바 회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12월 제9차 유엔총회는 결

---

담의 원형", 『통일정책연구』, vol.14, no.2, 2005, pp.176~177.

44) United Nations (eds.), *The Year of the United Nations, 1954* (New York: UNited Nations, 1955), p.31.

의 811호에서 제네바 회담에 대한 보고를 승인하고, 한국통일에 관한 유엔의 기본원칙(유엔감시하의 총선거 실시방안)을 재확인한다.[45]

유엔총회는 1950년 제5차 유엔총회 결의 376호에 따라서 1951년부터 UNCURK가 유엔총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를 토의하고 한국문제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었다. 1955년 11월 29일 제10차 유엔총회는 UNCURK의 보고서를 토대로 유엔에서 한국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는 결의 910호를 채택했다. 이후 1956~1959년 11~14차 유엔총회도 반복해서 한국문제 해결에 대한 결의(1010호, 1180호, 1264호, 1455호)를 채택했다. 당시까지 유엔의 한국문제 결의는 주로 남한정부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자신의 입장을 반영했다. 하지만 1960년부터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반서방적 성향의 신생국들이 비동맹의 기치 아래 대거 유엔에 가입하면서 미국의 유엔 내 영향력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도 이전과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46]

2 ) 한국문제 토의와 남북한 동시초청안 논쟁

1960년 10월 22일 북한은 유엔총회 의장과 사무총장에게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대표가 참석할 권리를 있다고 주장하는 전보를 보냈다. 이는 한국문제 토의에서 남북한 대표초청문제를 야기하고, 소련이 제안한 남북한 동시초청안과 미국의 남한단독초청안이 대립하게 된다. 비동맹 그룹에 속한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남한단독초청안을 일부 수정해서 북한도 초청하는 수정안을 제안한다. 그러자 미국은 북한이 '유엔헌장의 규정에 따라 유엔이 한국문제에 조치를 취할 권능과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확실하게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북한대표를 조건부로 초청하는 남북한동시초청안을 제시했다.[47] 결국 1961년 4월 12일 제1위원회에서

45) "The Korean question", UNGA, A/RES/811(IX), 1954.

46)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편, 『한국외교와 외교관: 이시영 전 주UN대사』 (서울: 국립외교원, 2015), p.47.

47) United Nations (eds.), *The Year of the United Nations, 1960*, (New York:

미국의 조건부 남북한동시초청안이 통과된다. 4월 17일 북한은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전보에서 조건부 초청안이 유엔헌장에 위배되며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조건부 초청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초청문제로 인한 논쟁이 장기화되면서, 제15차 유엔총회는 한국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를 하지 못한 채 4월 21일 회기가 마감일에 도래하자 별도의 결의를 채택하지 않은 채 지난 회기에 채택된 한국문제 결의내용을 재확인하고 관련 토의를 다음 회기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한다.[48]

제16차 유엔총회에서 속개된 한국문제 토의에서는 공산측의 무조건적인 남북한동시초청안과 미국이 제시한 북한의 조건부초청안이 또 다시 대립한다. 남한대표는 이미 지난 회기의 결정에 따라서 한국문제 토의에 옵서버로 참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비동맹인 인도는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을 조건부로 초청하는 제안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산권의 무조건적인 남북한동시초청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49] 1961년 12월 20일 치열한 논쟁 끝에 제1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북한을 조건부로 초청한다는 미국의 제안을 통과시킨다. 같은 날 제16차 유엔총회는 미국의 주도로 UNCURK의 연례보고서에 근거하여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유엔의 기존입장을 천명하는 결의 1740호를 채택했다.[50] 이후 제19차 유엔총회가 체납된 분담금 지불문제로 장기휴회에 들어간 경우를 제외하면, 매년 유엔총회는 한국문제 토의에서 남북한대표 동시초청안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된다.

### 3 ) 한국문제의 장기화와 UNCURK 보고서의 재량상정

유엔 내 여론변화는 한국문제 결의에 대한 투표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1961년 한국문제 결의(1740호)가 처음 50%대의 저조한 찬

---

United Nations, 1961), p.168.

48) 이한기, "한국통일문제와 UN의 권능", 『국제법학회논총』, vol.21, no.1·2, 1976, p.195.

49) United Nations (eds.), *The Year of the United Nations, 1961*, (New York: United Nations, 1963), p.134.

50) “The Korean question”, UNGA, A/RES/1740(XVI), 1961.

성율 기록한 뒤로, 미국이 주도했던 한국문제 결의는 계속해서 공산권 및 반서방적 탈식민지 신생국들의 반발(전체 10~ 20%)과 전체 20~30%에 달하는 기권표로 인해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51] 총회 표결에서 수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탈식민지 신생국 대다수는 비동맹을 추구했기 때문에 한국문제를 둘러싼 대립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지만, 일부 좌경화된 국가들은 공산권에 동조하며 미국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당시 한국문제 토의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공산권과 반서방적 성향의 비동맹 회원국들은 남북한대표 동시초청안 외에도 UNCURK 해체, 주한유엔군 철수 등을 요구했다. 이런 제안들은 모두 투표에서 부결되었지만, 유엔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표대결은 한국문제 토의에 대한 미국과 남한의 부담을 가중시켰다.[52]

1968년 제23차 유엔총회에서도 공산권의 주도 하에 한반도에 주둔 중인 모든 외국군 철수, 유엔군 사령부 해체,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의 개입중단을 요구하는 안건 등이 제기되었다. 비동맹에 속한 탈식민지 국가들의 지지표를 얻기 위한 외교전을 지속하면서, 미국과 남한 정부는 유엔의 한국문제 토의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외교를 피하기 위해 UNCURK 보고서가 총회안건으로 자동상정되는 조항을 수정하는 한국문제 결의 2466호를 통과시킨다.[53] 구체적으로는 UNCURK가 연례보고서를 총회에 곧바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총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한 것이었다. 이로써 UNCURK가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면 사무총장이 필요에 따라 한국문제의 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외국군 철수, UNCURK 해체, UN기 사용금지 등을 안건으로 제기하면서 한국문제를 둘러싼 진영간 외교전은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다.[54]

---

51) 최종기, 『국제연합과 한국: 한국문제 토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72, p.15.

52)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편, 2015, pp.48~49.

53) “The Korean question”, UNGA, A/RES/2466(XXIII), 1968.

54)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편, 2015, p.50.

4 ) 데탕트 초기 한국문제 토의 쟁점

1970년 8월 15일 북한을 지지하는 공산진영과 일부 제3세계 국가들이 유엔의 깃발 아래 남한에 주둔 중인 미군과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안건을 제25차 유엔총회의 의제로 제출했다.[55] 이들은 별개의 안건으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를 요구하는 안건도 함께 제출했다.[56]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한미도 불가피하게 유엔사무총장을 통해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보고서를 총회안건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1970년 9월 18일 유엔총회 운영위원회는 '한국문제(Question of Korea)'라는 이름으로 3가지 의제를 하나로 묶어서 총회 안건으로 채택했다.[57]

1970년 10월 26~30일 유엔총회(제1위원회)는 한국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한국문제 토의에 대한 남북한 동시초청문제를 논의했다. 공산 측은 공정한 토의 진행을 위해서 아무 조건없이 남북한 대표를 동시 초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1위원회는 표결을 통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미의 주장에 따라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북한대표를 초청하기로 결정한다.[58] 1970년 11월 19~24일 북한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남한 대표만 참석한 가운데 한국문제 토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문제 토의에서 소련을 포함해서 북한을 지지하는 24개국은 한

---

55) 공산 측은 외국군대의 남한점령과 이를의 대북 도발행위가 한국의 평화통일을 저해하고,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56) 공산 측은 과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설치 자체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원단이 사실상 미국에 복종하는 기구이고 미국의 호전적 대한정책의 도구로서 한국통일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7) 유엔총회 안건을 채택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안건을 채택하고 이를 총회에 건의한다. 그러면 총회 본회의에서 총회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보통 유엔총회의 안건 채택여부는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랐다. 따라서 총회안건을 올리기 위해서는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뜻을 관철할 만한 표세가 있는지가 첫번째 관문이었다. 총회 운영위원회는 회기마다 25개국으로 구성되었다.

58) 공산 측의 무조건 동시초청안은 찬성 40, 반대 54, 기권 25로 부결되었고, 미국 측의 조건부 초청안이 찬성 63, 반대 31, 기권 25로 채택되었다.

국에 주둔 중인 외국군 철수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를 각각 요구하는 두 결의안을 제출했다. 반대로 남한을 지지하는 미국을 포함한 21개국은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의 기존 입장대로 유엔군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활동을 유지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1970년 11월 24일 제1위원회의 표결에서 친북 결의안(외국군 철수,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해체)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고, 남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의안만 통과하게 된다.[59] 이 투표결과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유엔 내 한국문제 토의에서 친북결의안의 통과가 매우 난망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5 ) 1971년 중공의 대표권 문제와 한국문제 토의연기

제26차 유엔총회의 최대 화두는 중국의 대표권 문제였다. 1971년 7월 15일 알바니아, 쿠바 등 17개국은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인 권리회복을 요구하는 안건을 제26차 유엔총회 의제로 제출한다. 이는 기존에 대만이 가지고 있던 대표권을 박탈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정당한 대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맞서 미국은 1971년 8월 17일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권을 인정하되 동시에 대만의 대표권도 유지하자는 내용으로 의제를 제출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이 제출한 안건이 두 개의 중국을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중국의 대표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미국 정부는 자연스레 한국문제에 신경쓸 여유가 없었다.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대신해서 중국을 대표하게 될 경우 북한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한정부도 중국의 대표권 문제가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토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60]

59) 외국군 철수안은 찬성 32, 반대 60, 기권 30으로 부결되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해체안은 찬성 32, 반대 64, 기권 26으로 부결된다. 미국 측의 결의안은 찬성 69, 반대 30, 기권 23으로 통과했다.결국 1970년 12월 7일 미국이 주도한 21개국의 결의안만 25차 유엔총회에서 2668호 결의로 채택되었다.

1971년 8월 공산 측은 이미 19개국 공동명의로 '외국군 철수'와 'UNCURK 해체'를 유엔총회에 보충의제로서 제출한 상태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미도 UNCURK 보고서를 한국문제에 관한 의제로 제출했지만, 한국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외교전에 지친 한미는 가능하면 한국문제 결의안에 대한 직접적인 표대결을 피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유엔 총회의 관행상 회원국이 토의가 필요하다고 제출한 안건의 토의 자체를 거부하는 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한미는 '남북 적십자 회담도 있고 하니 한국 문제는 다음 총회 안건으로 넘기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기로 했다.[61] 이는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가 진행 중인 남북회담에 역효과를 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후 남북대화의 진전을 두고 보고서 토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당시 총회 초에 구성될 총회 운영위원회(25개국)의 구성이 한미에 유리하게 구성되면서 토의연기안에 대한 다수표 확보가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자, 전 회원국이 참가하는 본회의에서의 표세 확보가 관건이 되었다.[62] 한미는 부동층인 40여 나라의 태도를 확인하고 승산이 있다는 확신이 생기자 한국문제 토의 연기를 추진하기로 했다.[63]

1971년 9월 23일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영국 대표가 한국 문제 관련하여 공산 측이 낸 2개 안건과 우리 측이 낸 1개 안건에 대한 토의를 연기해서 이듬해 27차 총회 가의제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 이는 운영회원회에서 표결결과 13대 9로 가결된다. 9월 24일 본회의에서도 한국문제 3개 안건을 차기 총회 안건으로 넘기는 건의가 각각 외국군 철수안(찬성 68/반대 28/기권 22) UNCURK 해체안(찬성 68, 반대 25, 기권 22), UNCURK 보고서(찬성 70, 반대 21, 기권 21)로 가결되면서 최종적으로 한국문제 토의는 한미의 의도대로 1년 후로 연기된다.

한편 9월 22일 유엔총회 운영위원회는 중국문제(Question of

---

60) "대한민국 외교문서, "UN(유엔) 총회, 제26차. New York, 1971.9.21-12.22: 제1권 기본대책Ⅰ," (H-0015-04), 1970.

6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편, 2015, p.58.

62) 대한민국 외교문서, "UN(유엔) 총회, 제26차. New York, 1971.9.21-12.22: 제3권 한국문제 토의대비 전략 및 결과," (H-0015-06), 1970.

6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편, 2015, pp.62~63.

China)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대표권 문제를 총회 의제로 채택한다. 사흘 뒤 알바니아 등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23개국이 대만의 대표권을 박탈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 돌려주는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9월 29일 미국을 포함하는 22개국은 중국문제 결의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해당 안건을 유엔헌장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중요문제로 지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같은 날 미국 등 19개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권과 별개로 대만의 대표권을 유지할 것을 옹호하는 결의안도 제출했다.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지되, 대만도 회원자격도 유지하는 내용이었다. 중국 대표권 문제는 토의과정에서 특히 대만의 회원국 지위를 박탈하는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64]

격론 끝에 10월 25일 투표에서 중국문제를 중요문제로 지정하는 투표가 찬성 61, 반대 53, 기권 19로 통과되었다. 중요문제로 지정되면 결정투표에서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미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단독 대표권을 지지하는 결의 2758호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찬성 76, 반대 35, 기권 17)를 얻어서 채택된다.

### 6 ) 1972년 한국문제 토의연기와 북한의 좌절

1972년 제27차 유엔총회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연기된 한국문제에 관한 3개 안건이 의제로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미는 7.4 공동성명을 내세워서 다시 한 번 한국문제에 관한 토의를 연기하자는 전략을 세우고 일찍부터 제27차 유엔총회를 준비했다. 한국문제에 관한 3가지 가의제 중 하나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보고서는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유엔군이나 위원단의 활동 등 유엔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65]

---

64) United Nations (eds.), *The Year of the United Nations, 1971*, (New York: United Nations, 1974), pp.128~131.

한편 1972년 8월 공산측은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2개의 의제(외국군 철수, UNCURK 해체)를 철회하고, 새로운 의제로 '한국의 평화통일과 독립을 촉진하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의 조성'(Creation of Favorable Conditions to Accelerate the Independent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를 총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상 안건이 말하는 우호적인 환경이 남한에 주둔한 외국군 철수, UNCURK 활동정지, 주한미군의 유엔기 사용중단 등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었다. 북한이 소련과 지지세력을 통해 굳이 새로운 의제를 제출한 것은 외국군이 철수하고, UNCURK가 해체되어야 남북화해가 촉진된다는 인상을 회원국들에게 주고 자기들의 안건과 결의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려는 계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66]

1972년 9월 20일 총회 운영위원회는 공산 측이 철회한 2개 안건을 만장일치로 총회 안건에서 제외했다. 같은 날 영국 대표가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토의연기를 제안을 했는데, 이는 찬성 16, 반대 7, 기권 1로 채택되었다. 1971년보다 지지표가 더 많이 나온 결과였다. 9월 22~23일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알제리, 중화인민공화국, 소련, 유고슬라비아 등은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가 오히려 한국문제 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토의 연기안에 강하게 반대했다.[67] 하지만 미국의 주도 하에 9월 23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70, 반대35, 기권21로 1971년보다 토의 연기안에 대한 지지표가 더 많이 나오면서 한국문제 토의연기가 채택되었다.

7 ) 소결

유엔총회는 매년 UNCURK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과 남한에게

---

65) United Nations (eds.), *The Year of the United Nations, 1972*, (New York: United Nations, 1975), p.150.

66)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편, 2015, p.66.

67) United Nations (eds.), 1975, p.151.

유리한 한국문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1960년 반서양적 정서를 지닌 탈식민지 비동맹 국가들이 대거 유엔에 가입하면서 남북한 대표의 동시초청안 등 한국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점차 결의안 채택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에 외교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1961년 제1차 비동맹정상회의 개최 후 유엔에서는 탈식민지 신생국들이 주축을 이루는 비동맹 회원국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970년대에는 전체 정족수의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68] 이로 인해 한국문제 결의안 통과를 위한 외교적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자 미국은 1968년부터 UNCURK 보고서를 자동상정에서 재량상정으로 전환하면서 소모적인 한국문제 토의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재량상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UNCURK 해체, 유엔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1970년까지도 한국문제 논쟁이 지속된다. 그렇지만 유엔총회는 표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국과 남한의 입장에 유리한 UNCURK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문제 결의를 고수했다. 1971~1972년 두 차례의 한국문제 토의의 연기안도 모두 미국의 주도 하에 통과되었다. 비동맹에 속한 제3세계의 탈식민지 국가들의 수적 우위로 유엔 내 영향력이 감소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문제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1971년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중공이 대만의 대표권을 확보하면서 북한으로서는 유엔의 한국문제 토의에서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2년 제27차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토의연기안이 채택된 점은 북한에게 다소 실망스런 부분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1973년 북한은 한국문제 토의에 초청받게 되며, 1975년까지 약 2년간 미국을 상대로 한국문제 결의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게 된다.

---

68) 1961년 비동맹 세력은 104개 유엔회원국 중에서 25개국에 불과했지만, 1965년에는 유엔 내 117개국 중에서 47개국으로 비중이 증가했다. 또한 1970년에는 총 127개국 유엔회원국 중에서 60개국이 비동맹에 속했으며, 1975년에는 142개국 중에서 83개국을 속하면서 전체 5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보였다.

# Ⅲ. 1950~60년대 북중소 삼각관계 형성과 비동맹외교 추진배경

## 1. 북중소 삼각관계의 형성 및 변화

### 1 ) 한국전쟁과 북중소 초기 협력관계

1949년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은 내부적으로 온건파와 급진파 사이에서 외교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저우언라이의 온건파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미소 사이에서의 균형외교를, 류사오치의 급진파는 대소관계에 편향된 외교를 주장했다.[69] 애초에 소련은 국공내전에서 중공에 대한 지지에 소극적이었으며 때로는 중립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국공내전 시기 소련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의 후원자였던 미국을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판단하여 소련과의 동맹을 선택한다.[70] 스탈린도 중소동맹을 통해 미중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국을 단속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공산당이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처럼 독자노선을 걷게 되면 동아시아 지역의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71] 결국 중국과 소련은 미국과 대립하는 냉전적 사고에 따라 1950년 2월 14일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중소동맹)을 체결한다. 중소동맹의 체결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구도를 명확하게 만들면서 아시아의 냉전을 가속화했다.

이 시기 북한의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지속적으로 한국전쟁의 승인을 설득하고 있었다.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꺼리던 스탈린은 한국전쟁에 중국공산당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통제하고 동아시아에

---

69)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서울: 나남, 1996), p.226.

70) 이미경. “한국전 후 북한과 중국 , 소련의 관계 : 협력속의 균열.” 『중소연구』, Vol. 24, No. 4, 2000, p.150.

71) 박홍서, “냉전기 중국의 대소련 동맹딜레마와 군사 행태,” 『현대중국연구』, Vol. 15, No. 1, 2013, pp.12~13.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했다.[72] 마오쩌둥은 대만수복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한국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스탈린이 이미 김일성에게 한국전쟁을 승인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된다.[73] 3년 간의 한국전쟁은 미중 간의 적대관계를 고착시킴으로써 중국에 대한 소련의 의심을 해소시키고 중국이 소련에 더욱 밀착하게 만들었다.[74] 한국전쟁으로 냉전구도가 강화되면서 중소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협력관계를 지속해나갔다. 북한도 전후 복구과정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에 북중・북소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75] 결과적으로 한국전쟁은 미국라는 공동의 적을 둔 북중소 협력관계를 강화시켰다.

2) 중소의 대북 내정간섭

1956년 2월 14-24일 흐루시초프 총서기는 스탈린 사후 첫 소련공산당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이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강하게 비판하고[76] 자본주의 진영과의 평화공존론[77]을 새로운 정책노선으로 제시한다.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와 평화공존론은 오랫동안 스탈린식의 개인숭배와 전쟁불가피론을 추

72) 황동하, “스탈린과 한국전쟁의 발발 -중,소 관계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Vol. 79, 2003, p.118.

73) 안치영 “중소관계와 한국전쟁의 결정.” 『중앙사론』, Vol. 42, No. 42, 2015, pp.505~507.

74) 이미경, “1950-60년대 북한·중국·소련 삼각관계의 형성과 균열,” 『중소연구』, Vol.26, No.4, 2003(a), p.90.

75) 김보미, 『김일성과 중소분쟁: 북한 자주외교의 기원과 형성(1953~1966)』(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9), pp.65~69.

76)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는 스탈린의 신화를 파괴시킴으로써 공산주의 운동에서 소련의 절대적인 권위를 훼손하고, 사실상 다원적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스탈린 격하는 다른 사회주의 정당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데, 이는 소련의 탈스탈린화가 스탈린식의 독단적인 의사결정방식을 답습했다는 점에서 당시 소련지도부의 모순을 보여주었다. G. F. 허드슨, 리차드 로웬탈, 로데릭 맥화퀴, 『중소분쟁: 자료와 분석』, 김유 옮김 (고양: 인간과 사회, 2004), pp.10, 49.

77) 자세한 내용은 G. F. 허드슨, 리차드 로웬탈, 로데릭 맥화퀴, 2004, pp. 61~68 참고.

종해왔던 사회주의 진영에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왔다.

중국은 흐루시초프의 탈스탈린 노선이 사회주의 진영에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대소관계를 고려하여 흐루시초프의 신정책에 보조를 맞춘다.[78][79] 중국공산당은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숭배가 문제가 되자 당 규약에서 마오쩌둥 사상을 삭제하고 소련의 집단지도체제를 수용했다. 또한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대미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무력혁명 경험을 부정하는 평화공존론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80] 흐루시초프의 소련이 대규모 경제원조나 기술지원 면에서 중국에 많은 이익이 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81]

흐루시초프의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권력투쟁을 수반한 이데올로기 논쟁을 촉발시켰다. 북한에서도 반김일성 세력이 흐루시초프의 개인숭배 비판을 기회삼아 김일성을 축출하기 위한 '8월 종파사건'이 발생한다. 1956년 8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연안계가 주축을 이룬 반김일성 세력(소련계 일부 포함)이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를 빌미로 김일성을 정치적으로 실각시키려고 시도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사전에 대비하고 있던 김일성의 반격으로 인해 서휘, 최창익, 박창옥 등 종파사건의 주모자들은 모두 반당반혁명종파분자로 몰려서 역으로 숙청된다.

당시 중소는 북한문제를 긴밀히 협의하면서 1956년 9월 19일 미코얀 소련 부수상과 펑더화이 중국 국방부장이 이끄는 중소공동대표단을 평양으로 파견하여 북한 내정에 간섭한다. 결국 9월 23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중소의 압력에 굴복하여 8월 종파사건에서 숙청당했던 연안파와 소련파 인사들을 복권시키기로 결정한다.[82] 당시 중소

---

78) 김용서. "1960년대 중반 북한의 자주외교노선 채택에 관한 연구." 『세계정치』, Vol. 16, 2012, p.247.

79) 마오쩌둥은 스탈린에 대한 비판을 위기로 여기지 않고 되려 중소 간의 불평등 관계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이미경, 2003(a), p.91.

80)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서울: 오름, 2009), pp.99~100.

81) 김보미, 2019, p.177.

의 내정간섭에 불만을 품은 김일성은 이후 중소의 간섭을 차단하고 독자 노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당시 북중소 삼각관계 측면에서 원만한 중소관계는 약소국인 북한에 대한 강력한 통제로 나타났다.

3 ) 중소갈등과 북중, 북소관계의 변화

1957년 6월 흐루시초프는 당내 반대세력을 완전히 제압하고 당권을 공고히 했으며, 그 해 8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 10월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했다. 이런 대내외의 성공을 바탕으로 흐루시초프는 미국과의 평화공존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83][84] 1957년 10월 15일 소련이 중국에 핵기술을 제공하는 국방신기술협정을 체결하면서 중소 간의 밀월관계는 절정에 달한다.

1957년 11월 소련의 10월 혁명 40주년 경축행사 겸 각국 공산당 및 노동당 대표회의에서 평화공존론을 둘러싼 중소 간의 이념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소련은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을 강조하면서 평화적 공존을 사회주의 진영의 총노선으로 제시했지만, 중국은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에 반대했다.[85] 그러나 다수의 공산당이 소련의 노선을 지지하고, 중국 지도부도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 비판을 지양했다. 대신 '평화적 이행 문제에 관한 의견 제강'이라는 비망록의 형태로 자신의 유보적 입장을 소련에 피력했다.[86]

마오쩌둥은 회의기간 중 김일성을 만나 '8월 종파사건'에 개입했던

---

82) 박종철 "북한의 종파사건과 중국." 『민주주의와 인권』, Vol. 9, No. 3, 2009, pp.220~223.

83) 박종철, "중소분쟁 초기 북한·중국의 연대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1, 2008, pp.43~44.

84)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 정책은 미국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인 열세에 기인한 부분도 있다. 도지인, "의도하지 않은 휴전: 중소분열에서의 미국요인과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LTBT), 1962-1963." 『중소연구』, Vol. 37, No. 4, 2014, pp.188~189.

85) 중국 중앙공산당사연구실, 『중국공산당역사 (중)』, 홍순도・홍광훈 옮김 (서울: 서교출판사, 2014), p.175.

86) 최명해, 2009, p.117.

일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중국인민지원군 철수 요구를 수용한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전후복구사업을 위한 소련과 동구권의 대북지원이 대부분 종료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대북원조와 경제교류를 확대했다.[87] 이는 점점 가시화되는 소련과의 갈등을 대비한 것이었다. 중국으로서는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주변 사회주의 형제국들의 지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악화된 대북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귀국 후 김일성은 1957년 12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치에서의 자주'를 선포하며 북한이 중소의 내정간섭에서 벗어나 독자노선을 추구할 것을 대내외에 알린다. 이는 중소관계가 벌어지면서 둘 사이에서 북한의 재량권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958년부터 중소관계는 안보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발단은 흐루시초프의 장파무선국 설치와 중소 연합잠수함 함대 구상이었다. 두 가지 모두 인도양과 태평양에 배치된 소련 잠수함을 위한 것으로서 미국에 열세인 소련의 해군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88] 중국은 자국 내 소련의 미사일 기지 및 무선국 건설, 연합함대 설치 등의 요구가 중국을 소련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라고 의심하면서 소련의 대국주의적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89] 1958년 7월 31일 - 8월 3일 흐루시초프는 베이징을 방문하여 마오에게 소련이 중국을 통제할 의도가 없다고 해명해야만 했다.[90]

1958년 8월 23일 중국이 대만의 진먼(金門), 마쭈(馬祖)에 포격을

---

87) 김보미, 2019, pp.184, 209~210.

88) 김보미, 2019, p.215.

89) 리 즈수이, 『모택동의 사생활 ②』, 손풍삼 옮김 (서울:고려원, 1995), pp.94~95; Zhang Shu Guang and Chen Jian, "The Emerging Disputes between Beijing and Moscow: The New Available Chinese Document, 1956-1958,"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No.6/7 (Winter 1995~Spring 1996), pp.154-159.

90) Chen Jian and Yang Kuison, "Chinese Politics and the Collapse of the Sino-Soviet Alliance," in Odd Arne Westad (eds.), *Brothers in Arms: the rise and fall of the Sino-Soviet alliance, 1945-1963*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269.

가하면서 제2차 대만해협 위기를 촉발시킨다. 대내적으로 '대약진 운동'[91]에 필요한 군중동원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외적으로 대만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중국의 반미투쟁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92] 하지만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던 소련은 중국의 갑작스런 무력도발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93] 당시 제2차 대만해협 위기는 미국과의 평화공존정책을 추진하는 소련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연루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었다. 소련은 위기상황이 어느정도 수습된 후에 9월 7일이 되어서야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다.[94] 중국은 소련의 과학기술발전에 고무되어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평화공존론과 대미유화정책을 이해할 수 없었다.[95] 제2차 대만해협 위기에서 소련의 소극적인 모습은 중국에게 실망감을 주었다. 반면 소련은 중국의 모험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북한은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이 철수하면서 정치적으로 자주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천리마운동을 통해 소련과 동

---

91) 1958~1962년 인민공사와 마오쩌둥이 중국의 사회주의 근대사회 건설을 위해 추진한 대표적 경제개발정책. 대규모 대중동원을 통해 급진적인 증산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소련식의 단계적인 경제발전정책과 대비되었다. 1957년 11월 모스크바에서의 10월 혁명 40주년 경축행사 겸 각국 공산당 및 노동당 대표회의에서 흐루시초프가 15년 이내 공업 및 농업 생산 면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소련에 자극받은 마오쩌둥은 중국이 15년 이내에 영국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1958년 5월 중국공산당 제8차 대회 2차 회의에서 7년 이내에 영국을, 15년 이내에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더욱 급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당시 중국식 경제발전모델인 대약진운동은 인민공사와 함께 소련에 반하는 것으로 비춰졌으며, 급진적인 성격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반대가 심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국내외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약진운동을 강행했다. 중소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으며, 1960년대 중국경제가 파탄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92) Chen Jian and Yang Kuison, 1998, pp.270~271.

93) 1958년 8월 마오쩌둥은 흐루시초프와의 회담에서 대만공격은 중국의 내정문제이기 때문에 소련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당시 마오쩌둥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소련의 대중공약을 시험해보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Zubok, et al. *Inside the Kremlin's Cold War : from Stalin to Khrushchev*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p.221.

94) 김보미, 2019, p.219.

95) 도지인, 2014, pp.188~190.

구권의 원조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다. 1958년 11 -12월 김일성은 중국을 방문하여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에게 현대수정주의와의 투쟁을 계속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념적으로 중국을 지지한다.[96] 1959년 8-9월 북한은 중인국경분쟁이 발생하자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에 우호적인 북한의 행동은 소련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1959년 2월 5일 흐루시초프는 소련공산당 제21차 전당대회 직후 김일성에게 북한의 친중국적인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방북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97] 북한은 소련의 원조가 중요했기 때문에 소련의 입맛에 맞게 경제정책을 일부 수정하면서 소련을 달래야만 했다. 북한은 이념적으로 반수정주의인 중국에 가까운 입장이었지만, 중소 양측의 원조가 모두 중요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중소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했다.

1959년 중소 간의 우호관계는 사실상 끝장나게 된다. 6월 20일 소련은 미영소의 핵실험 금지조약에 대한 협상과 이를 위한 국제적 긴장완화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핵기술 지원을 중단한다. 소련의 핵기술 지원중단은 제2차 대만해협 위기에서 비롯된 중국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다.[98] 소련이 군사적으로 미국보다 우세하다고 믿었던 마오쩌둥은 소련의 평화공존정책을 이해할 수 없었고, 따라서 소련의 핵기술 지원중단도 중국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였다.[99]

1959년 9월 30일 - 10월 3일 흐루시초프는 중국건국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여 마오쩌둥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의 실패와 이로 인한 국내정치적 위기로 인해 대외적 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장하던 상황이었다.[100] 흐루시초프가 제2차 대만해협 위기에서 중국의 모험주의적 태도를 비난하자. 마오쩌둥은 오히려 소련이 중국을 배신하고 미국이 추구하는 '두개의 중국'에 동의한다고 반

---

96) 박종철, 2008, p.50.
97) 김보미, 2019, pp.249-257.
98) Zubok, et al. 1996, pp.227~228.
99) Chen Jian, *Mao's China and the Cold War*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p.79.
100) 이미경, 2003(a), pp.96-97.

박했다.[101] 중소 지도자는 대만 해협위기, 중인분쟁, 대미 평화공존 정책, 핵무기 기술이전 보류, 대약진 운동과 인민공사 등의 현안에서 상호 입장차만 확인한다.[102] 이것이 중소의 마지막 정상회담이었다.

중소관계의 균열은 소련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를 보인 중국의 회유적인 태도로 이어졌다. 이는 기존의 견고한 중소협력에서 작용했던 북한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느슨해지는 변화를 가져왔다. 김일성으로서는 중소갈등이 자신의 자율성을 확대할 좋은 기회를 이용되었다.

4 ) 중소분열과 북한의 자주성 확대

1959년 10월 중소 정상회담이 파탄나고 중소는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1959년 12월 1일 흐루시초프가 헝가리 공산당 대회에서 마오쩌둥이 주도하는 중국식 경제발전정책인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1960년 4월 20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홍기는 레닌 탄생 90주념을 기념하는 '레닌주의여 영원하라'라는 논설을 게재한다. 이 논설은 현대 수정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유고슬라비아를 언급하지만, 레닌과 마르크스의 자료를 통해 전쟁불가피론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노선을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103] 당시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흐루시초프와의 이념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104]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라고 비난하고, 소련은 급진적인 중국을 교조주의라고 공격했다.

1960년 5월 1일 미국의 U-2 정찰기가 소련영공에서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소련의 강경대응에도 미국이 사과를 거부하면서 5월 16일로 예정되었던 미・소・영・프 4개국의 파리정상회담이 취소된다. 사건 직후 중국은 소련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지만, 흐루시초프는 되려

101) Chen Jian, 2001, p.81.
102) 김용서, 2012, p.262.
103) G. F. 허드슨, 리차드 로웬탈, 로데릭 맥화퀴, 2004, pp. 119-165.
104) 황장엽, 『황장엽 :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시대정신, 2010), p.153.

마오쩌둥이 막후에서 국제정세의 악화를 조장한다고 의심했다.[105] 그는 중국이 국제정세 악화를 기회삼아 소련의 외교정책을 반대한다고 생각했다. 마오는 소련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북한, 베트남과 연대를 강화하는 등 독자적으로 미제의 위협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106] 중소의 상호불신은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로 이어졌다.

1960년 6월 5-9일 세계노동조합연합 일반위원회가 58개국 64개 대표단의 참석으로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중국공산당은 소련의 평화공존론과 미소 군비축소협상을 강하게 비판했고,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다수의 대표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107] 1960년 6월 20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열린 12개국 공산당 회의에서는 알바니아를 제외한 모든 동유럽 공산당이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을 지지하며 중국을 공격했다.[108] 또한 소련은 1960년 7월 중국에 머물던 모든 소련전문가들의 철수를 지시하고, 원조규모를 줄이면서 대중 경제제재에 나선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소련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경제실패의 책임을 소련에 떠넘기면서 내부적으로 대규모 반소운동을 조직한다.[109] 중소분쟁이 당내 이념논쟁을 넘어서 국제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징후였다.

중립을 표방한 북한의 지지를 얻기 위해 중소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중소와 국경을 접한 국가였고,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가 소련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지지가 매우 절실했다.[110] 1959년 9월 17일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을 비판하던 펑더화이를 실각시키고, 김일성에게 종파사건에 개입했던 펑더화이의 실각을 대북관계를 위한 우호조치로 포장한다.[111] 1959년 11월 흐루시초프는 북중관계를 흔들기 위해 과거 마오쩌둥이 김일성을 비방했던 내용

---

105) 최명해, 2009, p.129.
106) 최명해, 2009, pp.130~132.
107) 김보미, 2019, pp.234-236.
108) 박종철, 2008, p.47.
109) 김보미, 2019, p.241.
110) 김용서, 2012, p.263.
111) 시모토마이 노부오, 『북한 정권 탄생의 진실』, 이혁재 옮김 (서울: 기파랑, 2006), p.144.

을 김일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112]

중소는 막대한 원조를 통해 북한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다. 1960년 5월 중국은 북한에게 중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대가로 4억 위안의 원조를 약속했다.[113] 그 해 6월 소련은 김일성에게서 중국의 접근을 거부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북한이 요청했던 9-10억 루블, 면화 1.5톤, 식량 10만톤에 더해서 북한의 7개년 경제계획(1961- 1967)에 소요되는 200만톤의 원유와 정유공장 건설 지원 등 막대한 경제원조를 제안했다.[114] 중국은 대약진운동 실패로 인해 경제난을 겪었지만, 소련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장기차관 제공, 공장건설 지원, 각종 설비 제공, 기술인력 파견 등 대규모 대북지원에 나서야만 했다.

북한은 중소 간의 경쟁구도를 이용하여 북소동맹조약, 북중동맹조약까지 체결했다. 당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미국정부의 개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남한에 반공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미일 신안보조약까지 체결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련은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군사동맹을 꺼렸지만, 북중관계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의 요청에 따라 북소동맹조약을 체결한다.[115] 1961년 7월 6일 북소동맹의 체결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긴장고조로 북중동맹을 늦추던 중국을 재촉하는 효과를 발휘했다.[116] 중소는 북한이 상대편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8월 종파사건 때처럼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없었다. 북한이 중소경쟁 속에서 자신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하여 강대국인 중소를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저비스가 제시한 삼각관계의 설명[117]은 1956년 8월 종파사건 당

---

112) 최명해, 2009, pp.147-148.

113) 임방순, 한 마크 만균. “중,소 분쟁 격화기 중,소의 대북한 원조경쟁과 북한의 자주노선: 1961~1967.” 『사회과학연구』, Vol. 24, No. 1, 2016, p.56.

114) 임방순, 한 마크 만균, 2016, pp.56-57.

115) 김보미, "중소분쟁시기 북방삼각관계가 조소,조중동맹의 체결에 미친 영향(1957~1961)," 『북한연구학회보』, Vol.17, No.2, 2013, p.183.

116) 최명해, 2009, p.158-159.

117) 양자 간의 관계악화는 제3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분쟁 중인 양국은 제3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제3자는 양자에 대한 협상력과 안보까지

시만 해도 일방적인 통제의 대상이던 북한이 1950년대 후반 중소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는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준다.

5) 북소관계 악화와 북중연대

1962년 북한은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하자 중국과 함께 쿠바와 소련을 지지하고, 중인국경분쟁에서 소련과 함께 중국을 지지하면서 북중소의 협력을 추구했다. 그러나 소련이 미국과의 비밀협상에 따라 쿠바에 설치한 모든 미사일을 철수시키자, 중국은 즉각 소련의 결정이 미제국주의에 대한 굴복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118] 이에 대한 보복으로 소련은 중인국경분쟁에서 중국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인도에 헬기와 수송기를 제공하고 전투기 공급협상을 진행하는 등 인도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119] 북한은 중소 사이에서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김일성은 1962년 11월 1일 모스코프스키 소련대사와의 면담에서 쿠바미사일위기에 대한 소련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한다.[120] 하지만 불과 사흘 후인 11월 17일 북한 로동신문 사설(맑스-레닌의 혁명적 기치를 한층 높이들자)은 쿠바미사일위기에서 소련이 보여준 행동을 강하게 비난하며 중국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121]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에 실망한 소련은 1964년 10월 흐루시초프가 실각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군사원조를 대부분 중단한다.

북소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은 소련의 지지세력이 대부분인 공산주의 진영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된다. 그러나 1960년대 북한 내부는 이

---

확보한다. Pivot은 갈등하는 양측이 자신에게 긴밀히 협력하도록 조정할 수 협상력을 얻고, 경제적, 군사적 자원에 비해 과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적대적인 양자의 관계개선은 제3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제3자는 서로 화해한 양자에 대한 협상력을 잃는다. 양자가 연합하면 자유가 제한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그로 인해 자신의 독립성을 상실할 수 있다.

118) 모춘흥, 은용수, “1960년대 북한의 병진노선 채택과 군사적 모험주의에 관한 역사적 분석.” 『통일문제연구』, Vol. 28, No. 1, 2016, p.211~212.

119) 정진위, 『북방삼각관계』(서울: 법문사, 1985), p.84.

120) 최명해, 2009, pp.207-208.

121) 『로동신문』, 1962년 11월 17일,

미 김일성 중심의 단일지도체제가 공고했기 때문에 대소관계의 악화에도 내부적으로 흔들리기 않았다.[122] 중국은 1962년 2-10월 북한 지도부와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북중국경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123]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대북원조에 나서면서 북중관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124] 자연스레 쿠바미사일위기 이후 북한은 대중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과 밀착하게 되었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포기한 소련은 미국과의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 합의에서 중국공산당의 급진주의와 모험주의를 견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125] 중국은 미소 간의 긴장완화와 핵실험금지조약에 대한 협력을 지켜보면서 소련 수정주의와 미국 제국주의가 반중국동맹으로 연대했다고 판단했다.[126] 이후 중국은 '두 개의 중간지대론'[127]을 통해 대소일변도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미제국주의와 소련수정주의의 위협에 동시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128]

북한은 소련과 흐루시초프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면서 외교적으로 중국을 지원했다. 1962년 12월 17일자 로동신문 사설(전체 인민이 무장하며 온나라를 요새로 만들자)에서 소련의 내정간섭을 비난한 것이 시작이었다.[129] 1962년 12월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제12차 전당대회에서 북한 대표단은 중국을 공격하는 20여 개 국가에 맞서 중국을 옹호하다

---

122) 이미경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자주노선 정립: 1960년대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Vol. 43, No. 2, 2003(b), p.286.

123) 中共中央文献研究室 编,『周恩来年谱 1949-1976(中)』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7), pp.468-502.(박종철, "중소분쟁과 북중관계(1961~1964년)에 대한 고찰," 『한중사회과학연구』, Vol.9, No.2, 2011, p.55에서 재인용).

124) 임방순, 한 마크 만균, 2016, pp.60-61.

125) 도지인, 2014, pp.192-204.

126) 도지인, 2014, pp.192-204.

127) 제1중간지대는 유럽,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발전 자본주의 국가들, 제2중간지대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저개발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 두 개의 중간지대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놓여있으며 미소와 갈등관계에 있다. 따라서 중국은 두 개의 중간지대에 속한 국가들이 국제적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미국과 소련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8) 최명해, 2009, p.217.

129) 『로동신문』1962년 12월 17일.

가 다른 사회주의 정당들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다.[130]

그렇지만 북한의 이해관계가 중국과 완전히 일치했던 것은 아니었다. 비록 북한은 소련의 평화공존론에 반대했지만, 마오가 말하는 '두 개의 중간지대론'처럼 소련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131] 북한이 문제삼는 것은 소련의 수정주의적 경향이지 소련 자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중국의 대북원조는 군사·경제·외교적으로 소련과 동구권의 공백을 메우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따라서 북한은 외교적으로 소련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지만 소련과의 동맹관계를 완전히 청산할 수는 없었다. 1963년 8월 김일성은 루마니아 대사와의 면담에서 중국에 비난을 퍼붓는 소련과 중국의 극단적인 태도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북한의 답답함을 표현했다.[132] 소련도 대북원조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했지만, 일반 무역관계와 원자력 기술협력은 이어나갔다.

정리하면 쿠바미사일사건을 기점으로 북한은 중국과 함께 소련과 보다 직접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다. 중립적 위치를 상실하고 직접 분쟁에 연루된 북한은 1960년 북중, 북소 동맹을 체결할 당시에 중소갈등 사이에서 누리던 외교적 이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133]

### 6) 북소관계 복원과 북중 경색

1964년 10월 14일 흐루시초프가 실각하면서 북소관계, 북중관계의 변화가 시작된다. 북한대표단은 소련 지도부와의 회담에서 북소동맹

---

130) 吴冷四, 『十年论战1956-1966: 中苏关系回忆录』,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9), pp.511-512(박종철, 2011, p.57에서 재인용).

131) 최명해, 2009, pp.220-227.

132)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Soviet Ambassador to North Korea Vasily Moskovsky and Romanian Ambassador to North Korea [M.] Bodnaras [1]," August 22, 196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0497

133) 디트머는 낭만적 삼각관계에 대한 설명에서 pivot의 위치가 불안정하다고 말한다. 안정성은 다른 역할에 대한 구조적인 이익의 부당한 분배와 관련이 있다. 즉 낭만적 삼각관계에서 중심(pivot) 행위자는 서로 대립하는 두 행위자 사이에서 이익을 얻는다.

의 안전보장을 확인하고. 평화공존 등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내정불간섭이나 반미투쟁의 측면에서 북소 간의 갈등요소를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134] 12월 3일 로동신문 사설(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고 반제혁명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자)은 소련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을 과거문제로 언급하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다시금 주장하기 시작했다.[135] 이것은 소련에 대한 북한의 인식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1965년 2월 코시긴 소련 외무상은 베이징, 하노이, 평양을 순방했다. 코시긴은 하노이에서 군사경제협정을 체결하고, 평양에서 북소동맹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136] 그리고 코시긴은 평양에서 북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내정불간섭을 약속하면서 대북원조 재개 의사를 보였다.[137][138] 이는 대북관계 개선에 대한 소련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간 차질을 빚던 북한의 7개년 경제개발계획은 소련의 원조 재개로 기간을 연장하여 1970년까지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139] 북소관계 개선은 북한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코메콘에 옵서버로 다시 참석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소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소관계 개선은 북중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코시긴은 중국지도부에 북소 간의 논쟁을 멈추고 베트남에서의 반제투쟁에 협력하자고 제안하지만, 마오쩌둥은 소련의 제안을 거절한다.[140] 소련 신지도부의 베트남전 개입은 흐루시초프가 통킹만 사건 후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을 수수방관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중국은 미군을 베트남에 묶어두고 적당한 긴장고조를 유지하면서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피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141] 이는 베트남전을 혁명세

---

134) 김보미, 2019, pp.415-417.

135) 『로동신문』, 1964년 12월 3일.

136) 최명해, 2009, pp.234~235.

137) 임방순, 한 마크 만균, 2016, p.67.

138) 1965년 소련의 대북한 기계류 및 전기기기 수출량은 전년도의 2배로 증가했다. 그해 5월 소련은 1억 5000만 루블 상당의 무기와 군사장비를 북한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북소는 경제기술 분야에서 각종 협정들을 체결하면서 경제협력을 확대했다.

139) 임방순, 한 마크 만균, 2016, p.69.

140) 최명해, 2009, p.234.

력과 반혁명세력의 대결로 규정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주장하던 북한의 입장과 상충되는 것이었다.[142] 북한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미전쟁에서의 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은 반수정주의 투쟁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대소협력을 강화한다.[143] 북한이 베트남전에 소극적인 중국을 비난하면서 북중관계는 냉각되기 시작한다.

북중관계가 소원해지고 소련과 가까워지는 가운데 김일성은 교조주의와 수정주의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북한의 주체적인 입장을 강조했는데,[144] 이것은 북한이 중소 사이에서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일전에 대중편승의 한계를 경험한 결과였다.[145] 1965년 4월 김일성은 반둥회의 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 조선로동당이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추구한다고 선언한다.

1966년 5월 문화혁명의 광기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북중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1966년 12월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은 브레즈네프에게 중국의 문화혁명을 대중적 광기로 비판하면서 중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146] 당시 홍위병들은 김일성을 백만장자, 귀족, 부르주아라고 비난하는 벽보를 붙이고, 북한 지도부를 수정주의자라고 공격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전쟁 원조의 대가로 백두산 주변의 영토를 요구하면서 북중 간 영유권 분쟁까지 벌어졌다.[147] 결국 1967년 북중관계는 자국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할 정도로 악화된다.

1960년대 중반 북한은 북소관계를 회복했지만, 완고한 마오쩌둥의

---

141) 이상숙, “1960년대 중반 북한 -중국의 갈등과 북한의 자주노선”, 『북한학연구』, Vol.3, No.2, 2007, pp.158-159.

142)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관계사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28.

143) 박종철, 2011, p.72.

144) 김보미, 2019, pp.428-429.

145) 최명해, 2009, p.241.

146) "Note on a Conversation with the 1st Secretary of the Soviet Embassy, Comrade Zvetkov, on 15 March 1967," March 16, 1967.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647

147) 정진위, 1985, p147.

태도로 인한 반대여파로 북중관계가 악화되었다. 북한은 여전히 중소갈등 상황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상태였고, 중국과의 분쟁은 북소갈등과 마찬가지로 약소국인 북한에게 가혹한 것이었다.

7 ) 북소협력의 지속과 북중관계 복원

1968년 북한은 피포위 위협인식이 고조되어 있었다. 미군의 베트남전 개입은 주한미군과 대치 중인 북한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한일관계 정상화에 따른 한미일의 삼각동맹체계는 중소갈등으로 인한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과 대비되는 가운데 북한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148] 북한은 악화된 북중관계로 인해 북중국경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과도한 국방비 지출은 북한 경제를 옥죄는 주요요인이 되었으며.[149] 경제정책의 실패는 김일성에 대한 갑산파의 도전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런 대내외의 위기 속에서 북한은 군사적 모험주의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동맹국의 방기 우려를 해소하려고 했다.[150]

1968년 1월 21일 북한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무장공비 31명을 침투시켜 청와대를 기습했다. 1월 23일 북한은 동해상에서 미 해군 정찰함 푸에블로호를 간첩활동 혐의로 나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미국은 핵 항공모함을 동원한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소련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려고 했다.[151] 소련은 북한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지만, 실상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미국과의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148) 김일성, “일본 교도통신 사이와모도 기요시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김일성저작집』, 제19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pp.333~336.

149) 1967~1969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3년 연속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30%를 초과하고 있었다. 모춘홍・은용수, 2016, p.228.

150) 박시영 “북한의 위협인식과 전략적 선택의 메커니즘 연구.” 『현대북한연구』, Vol. 19, No. 1, 2016, pp.191-198.

151) 김창진, “냉전 시기 소련-북한의 비대칭동맹과 북한의 자주외교.” 『슬라브 연구』, Vol. 35, No. 4, 2019, p.81.

소련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152] 하지만 북한은 푸에블로호와 승무원을 미국에 돌려주라는 소련의 충고를 무시하고,[153]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고집했다. 소련은 북한을 설득하지 못하고 푸에블로호 나포가 자기와 무관하다면서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154] 이는 소련의 대북영향력이 지닌 한계와 북한의 자주성을 보여준다.

북한을 수정주의로 비난하던 중국도 푸에블로호 사건에서 북한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은 미국이 베트남전의 개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소련과의 무력충돌까지 이어지면서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흔들리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북한의 대소편향을 막고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전쟁에 연루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만 했다.[155] 즉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지는 북한의 방기 우려를 해소하면서 모험주의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8년 8월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면서 중소분쟁은 더욱 심각해졌다. 북한은 일부러 중국의 안보불안을 자극하기 위해 체코 수정주의만 비판하고 소련에 침묵하면서 소련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156] 마침내 1968년 10월 13-31일 중국공산당 제8기 12차 확대 중앙위원회전체회의에서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의 성과를 공고하게 할 것을 강조하면서 문혁의 국내정치적 혼란을 종식하고 대외전략을 혁명수출에서 안보중심으로 전환한다.[157]

1969년 4월 15일 북한은 다시 한 번 EC-121 미 정찰기를 격추시키는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한다. 4월 18일 소련은 3일이 지나서야

---

152) 정성윤,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과 미국의 위기정책결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191.

153) 엄정식 “푸에블로호 사건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접근.” 『군사』, No.86, 2013, p.80.

154) "212.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the Soviet Union," Washington, January 23, 1968, 0855Z, FRUS, 1964-1968, 『Korea』, Volume XXIX, Part 1; "213. Notes of Meeting," Washington, January 23, 1968, 12:58-2:30 p.m, FRUS, 1964-1968, 『Korea』, Volume XXIX, Part 1.

155) 최명해, 2009, pp.259-261.

156) 최명해, 2009, p.270.

157) Chen Jian, 2001, p.244.

북한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시했다. 반면 중국은 즉각 북한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으며,[158] 1969년 7월 15일 북한도 로동신문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개선 의사를 밝힌다.[159] 1969년 9월 10-11일 최용건은 호찌민의 장례식을 참가하고 귀국하는 길에 베이징에서 저우언라이를 면담한다. 최용건은 저우언라이에게 김일성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며 소련의 아시아집단안보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160]

중국은 신중국 건립 20주년 기념식에 북한을 초청했으며, 북한대표로 참석한 최용건은 마오쩌둥과 회담을 가졌다. 북중은 과거 잘못에 대해 화해하고 저우언라이 방북에 합의한다.[161] 1970년 2월 현준극 주중 북한대사가 재부임하고, 3월 리원추안 주북한 중국대사가 부임했다. 1970년 저우언라이(4월)와 김일성(10월) 등 북중 간 고위인사들의 상호 방문과 양국교류가 재개되었다.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중국의 안보 불안과 위협인식을 자극하여 북중동맹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162]

1960년대 중반 북소관계의 복원이 북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과 다르게 1970년 북중관계의 복원은 북소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970년 6월 10일 소련 대표단이 방북일정 중에 김일성은 자카로프 단장(소련군 원수)와의 대화에서 “북한이 소련에 대한 중국의 적대적인 정책에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사회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소련공산당의 정책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이야기했다.[163] 소련은 북중관계 복원을 경계하지만, 양자관계에 적지 않은 이견을 남아있다고 분석했다.[164]

---

158) 정진위, 1985, p.155.
159) 『로동신문』, 1969년 7월 15일.
160) 최명해, 2009, pp.271-272.
161) 최명해, 2009, p.273.
162) 최명해 “1960년대 북한의 대중국 동맹딜레마와 ‘계산된 모험주의.’” 한국국제정치학회, vol. 48, no. 3, 2008, pp.139-140.
163) ""Col. Mieczysław Białek, 'Record of Conversation of the Marshall of the Soviet Union Com. Zakharov with Com. Kim Il Sung during Com. Zakharov's Visit in the DPRK'," June 10, 1970.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208551
164) "Telegram,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1970년 북한은 중소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북중, 북소관계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은 1960년처럼 중립을 유지하면서 중소갈등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중소가 지속적으로 북한을 회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북한은 자연스레 저비스가 이야기한 삼각관계상의 갈등하는 양자 사이에서 제3자로서 외교적 레버리지를 얻게 되었다.[165)]

8 ) 소결

1950년대 중소는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동맹을 맺었다. 북한은 정권 수립부터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한국전쟁을 통해 중국과 혈맹관계를 맺게 된다. 아시아의 냉전이 가속화되면서 북중소 간의 협력관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전후복구시기 북한은 중소연합이 공고한 가운데 약소국으로서 내정간섭을 피할 수 없었다. 1956년 8월 종파사건은 북한에 대한 중소의 통제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중소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중소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북한은 중소갈등으로 재량권이 확대되면서 1960년대 초기까지 중소 간의 경쟁을 이용해서 군사적으로 북중동맹, 북소동맹을 체결하고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즉 이 시기 북한은 중공 vs. 소련의 갈등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쿠바미사일 사건을 계기로 북소관계가 악화되면서 중소 사이에서

---

Foreign Ministry," September 05, 1970.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586

165) 저비스에 따르면 pivot은 자국의 행위보다 다른 두 국가의 갈등이 격화되는 갈등으로 인해 갖게 된다. 두 행위자가 갈등하는 삼각관계에서 제3국이 유연성이 부족한 다른 두 행위자에게 자신의 지지를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중심적인 위치(Pivot)를 가지게 된다. 자주 빈번하게 싸웠던 양국관계일수록, 제3국이 두 국가가 추구하는 자산을 통제할 수 있을수록 pivot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pivot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적대감과 이익에 대한 갈등수준이다. 아무리 자국이 다른 국가와 첨예하게 대립해도 다른 두 국가가 더 심각한 사안으로 분열되면 유리한 위치에 놓인다. 지리적인 요인이 제3자로 하여금 대립하는 양자 사이에서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도 한다.

북한의 줄타기는 한계에 부딪힌다. 남은 흐루시초프의 집권 시기에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받던 모든 지원이 끊긴다. 북한은 중공과 밀착하면서 소련과 대립각을 세운다. 즉 북중소 삼각관계에서 중공, 북한 vs 소련의 갈등구도가 전개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소련과의 기본적인 통상관계를 유지하면서 북소관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 결국 소련에서 흐루시초프가 실각하고 브레즈네프가 집권하자 북소관계는 빠르게 복원된다.

북한의 기대와 다르게 브레즈네프의 집권 후에도 중소관계는 더욱 악화된다. 중국과 북한은 대소관계에서 이견을 드러낸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은 중국의 교조주의에 불만을 터뜨리고 중국은 북소관계의 복원에 북한을 비난한다. 이는 북중관계에서 경색국면을 초래한다. 즉 북중소 삼각관계에서 소련, 북한 vs 중공의 갈등구도가 형성된다.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국제적으로 고립이 심화된다. 1969년 우수리 강 인근 중소 국경지대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소련에서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집단안보체제 구상이 논의되자 중공은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중국은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고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대화를 시작한다. 동시에 북한, 북베트남을 포함한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복원을 시도했다. 북한은 중소 사이에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과 자주외교의 원칙을 고수한다. 그러므로 1970년 북중관계의 복원은 중소갈등 상황에서 북한을 둘러싼 중소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즉 1970년대 전반 데탕트기 중공 vs 소련의 대결국면은 디트머의 분석틀을 빌리면 북한을 중심으로 한 '낭만적 삼각관계'[166]를 형성하게 된다. 북한은 중소갈등의 반사이익으로 북중소 삼각관계 내 제3자의 유리한 위치에서 대중, 대소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

166) 낭만적 삼각관계(romantic triangle)는 중심(pivot) 행위자가 다른 주변 행위자와 각각 긍정적인 관계를 지니고, 주변 행위자는 서로 부정적인 관계로 보인다. 적대적인 두 행위자는 서로 공모할 수 없기 때문에, 중심(pivot) 행위자는 양자관계에서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양자 간 협력관계를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 2. 비동맹운동의 발전과 북한 외교

### 1 ) 비동맹운동의 태동과 북한의 진영외교기

많은 사람들이 비동맹운동의 뿌리를 1955년 제1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일명 반둥회의)에서 찾는다. 그러나 1953년 2월 인도의 네루 수상은 이미 양대 진영에 속하지 않은 제3지역 국가들의 협력과 단결을 통한 세계평화를 주장했다.[167] 네루는 1955년 반둥회의 개최와 이후 국제적인 비동맹운동의 등장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

1954년 4월 26일 ~ 7월 20일 한반도 통일문제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제네바 회담이 반둥회의 개최의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제네바 회담은 인도차이나 전쟁의 주변국인 아시아 신생국가들을 배제한 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주도로 이뤄졌다. 1954년 4월 28일 실론(현 스리랑카) 콜롬보에 모인 인도, 버마(현 미얀마), 실론,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5개국(콜롬보 그룹) 대표들은 아시아 신생국가들을 배제한 채 아시아의 문제를 결정하려는 제네바 회담을 비판하고, 아시아 신생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안 회의를 구성하기로 계획했다.[168] 1954년 12월 28~31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에 모인 콜롬보 그룹은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에로'라는 기치 아래 반둥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초청국 등 주요골자에 합의했다.[169]

콜롬보 그룹의 구상은 동남아조약기구(SEATO), 중동조약기구(CENTO) 등 역내 반공동맹을 통해 공산진영을 봉쇄하려는 미국과 서방세력의 냉전전략에 상충되는 것이었다.[170] 또한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

167) 하경근, "비동맹운동과 한국." 『국제정치논총』, Vol. 20, 1980, p.104.

168) Jürgen Dinkel, *The Non-Aligned Movement: Genesis, Organization and Politics(1927-1992),* Translated by Alex Skinner.(Leiden, Boston: Brill, 2019), p.47.

169) 이기종 "북한의 대 제 3 세계 비동맹 외교 정책." 『시민정치학회보』, Vol. 1, 1997, p. 189.

170) 박봉식, "중립주의정치의 동태 - 비동맹운동의 성격변화와 관련하여 북괴(北傀)의 비동맹노선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Vol. 6, No. 1, 1980,

제국주의 국가들은 반둥회의를 통해 탈식민지화의 흐름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다.[171]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자유주의 진영은 반둥회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반둥회의가 자국의 국제적 위상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반면 소련과 중공은 미국의 반공전략에 균열을 만드는 반둥회의의 개최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172] 특히 중국은 반둥회의 참가국으로서, '평화 5원칙'[173]을 제시하여 반둥회의의 방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평화 5원칙'을 통해 아시아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넓혀가면서 비동맹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1953년 스탈린 시대의 말엽부터 탈식민지 국가들에 관심을 쏟던 소련도 유엔에서 서방국가들에 반대하는 반식민주의자들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신생독립국을 포섭하려고 했다.[174] 비록 반둥회의에 초청받지 못했지만, 흐루시초프는 1955년 2월 '평화5원칙'에 대한 환영의사를 밝히고 인도와 버마 등 반둥회의를 주도하는 국가들을 사전에 순방하는 등 평화노선을 강조하며 신생독립국들과의 전략적 연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북한은 1955년 반둥회의에서 비동맹운동의 맹아가 싹트기 전까지 소련과 중국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외교에 집중하고 있었다. 실제로 1955년까지 북한이 수교를 맺은 12개국[175]은 모두 사회주의 진영였다. 그렇지만 북한이 신생독립국들의 민족해방운동과 반식민문제에 전혀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김일성은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3월 27~30일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이미 민족해방운동이 미국을 포함한 반동세력에 타격을 주고 사회주의 진영을 강화시킨다고 주장

---

p.35.

171) Jürgen Dinkel, 2019, pp.71~74.

172) 박봉식, 1980, p.35.

173) 1954년 6월 인도를 방문한 중국의 주은래 총리와 네루 수상과의 회담에서 양국관계의 기본원칙으로 공개되었다. '평화 5원칙'은 구체적으로 ①영토・주권의 상호존중 ②상호불가침 ③내정불간섭 ④평등・호혜 ⑤평화적 공존의 내용을 담고 있다.

174) Jürgen Dinkel, 2019, p.75.

175) 소련,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동독, 루마니아, 알바니아, 중화인민공화국, 몽골, 북베트남

했었다.[176] 다만 북한은 반둥회의 이전까지 민족해방운동과 반제・반식민의 문제를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일부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비사회주의 신생독립국가와 별도의 양자관계를 맺지 않았다.[177]

2 ) 반둥회의(아시아·아프리카회의)와 북한외교의 확대

1955년 4월 18~24일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반둥회의(제1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29개 신생독립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가국들의 정치적 성향은 공산주의, 중도노선, 친서방 등 다양했지만, 만장일치로 반둥 10원칙[178]을 결의하면서 반제반식민주의와 평화공존, 비동맹의 정신을 공유했다. 반둥회의 대표들은 모든 탈식민지 국가들의 유엔가입, 안보리 거부권 폐지, 유엔총회의 권한 강화 등 유엔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했다.[179] 신생국들이 자신의 독립을 수호하고 권리를 집행할 국제기구로서 유엔에 거는 기대가 각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180] 반둥회의는 과거 식민지였던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연대를 실현하면서, 미국(제1세계)과 소련(제2세계)으로 대표되는 양대진영과 냉전구도에 맞서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고 스스로 평화의 주체가 되겠다는 비동맹의 대안적 이상을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181]

---

176)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 (서울: 선인, 2003), p.8.

177)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0, pp.36~37.

178) ①기본적 인권 및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존중 ②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의 존중 ③모든 인종의 평등, 대소를 불문한 모든 국가의 평등한 승인 ④타국의 내정불간섭 ⑤국제연합헌장에 합치하는 제국가에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의 존중 ⑥대국의 특수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집단적 방위협정 금지 및 어떠한 국가도 타국에 압력금지 ⑦어떠한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침략행위, 협박 또는 힘의 행사금지 ⑧어떠한 국제분쟁도 국제연합헌장에 따라서 교섭, 조정, 중재과 같은 평화적 방법 및 당사국이 선택하는 그 이외의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 ⑨상호이익과 협조의 촉진 ⑩정의와 국제적 의무의 존중

179) Jürgen Dinkel, 2019, pp.50, 56~57.

180) Jürgen Dinkel, 2019, pp.45~46.

181) 장세진, "반둥회의“, 서동진, 박소현 편, 『비동맹 독본』, (서울: 현실문화연구,

중공은 반둥회의 참가국이였으며, 중공대표 주은래는 비동맹노선과 사회주의의 평화공존이 양립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참가국들의 지지를 얻었다.[182] 중공은 반둥회의를 통해 국제적 고립을 벗어났으며, 참가국들의 많은 호응과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대표단의 성과에 만족했다.[183] 소련은 1956년 2월 제20차 당대회에서 세계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분류하는 양대진영론을 폐기하고, 자본주의와 평화지역(공산주의와 탈식민지국가)의 새로운 관점을 채택하면서 탈식민지 세력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184] 서방세력이 비동맹노선을 비난하는 상황에서 소련의 반응은 비동맹 국가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었다.[185]

북한의 반응도 중소와 마찬가지로 반둥회의에 우호적이었다. 1955년 4월 17일 반둥회의 하루 전 북한은 로동신문에서 탈식민주의의 결과인 반둥회의를 통해 서방에 반대하는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186] 반둥회의 참가국들은 회의 중 모든 형태의 식민지 지배를 인종차별주의로 낙인찍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도덕적 약점을 공격하며 서방국가들에 대한 반감을 표시했다.[187]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회의상황을 보도할 정도로 반둥회의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폐막 후에도 평화와 반식민의 측면에서 반둥회의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188]

1956년 4월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반둥회의가 제국주의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 및 비사회주의를 포괄하는 광대한 평화지대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했다.[189] 중소가 진영을 초월하여 인도와 버마 등 비동맹 국가들과 친선관계를 맺은 사례를

---

2020), pp.138~139.

182) 홍종욱, “1950년대 북한의 반둥회의와 비동맹운동 인식 -잡지 『국제생활』 기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Vol.61, 2018, p.385.

183) Jürgen Dinkel. 2019, p.67.

184) 비자이, 프리샤드, 『갈색의 세계사: 새로 쓴 제3세계 인민의 역사』, 박소현 옮김 (서울: 뿌리와 이파리, 2015), pp.78~80.

185) 비자이, 프리샤드, 2015, p.142.

186) 『로동신문』, 1955년 4월 17일.

187) Jürgen Dinkel. 2019, p.56.

188) 김도민, 2020, p.73; 『로동신문』, 1955년 4월 27일, 1955년 4월 29일.

189) 홍종욱, 2018, p.386.

언급하면서, 북한도 민족해방운동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고 상이한 사회경제체제를 지닌 중립국과 외교관계를 확장하겠다는 새로운 대외정책을 제시했다.[190] 이는 북한이 최초로 제3세계 외교을 공식화한 것이며, 이후 북한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진영과의 연합전선을 추구하게 된다.[191] 하지만 중소의 제3세계 외교에 편승하는 것으로서 여전히 중소에 종속된 진영외교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 3 ) 비동맹 운동의 출현과 북한의 제3세계 외교

제1차 비동맹정상회의의 직접적인 계기는 1960년 제15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유고슬라비아,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가나 5개국 정상들의 회동에서 비롯됐다. 1957년부터 비동맹 국가들은 반둥회의에서 논의됐던 유엔 민주화를 위한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했지만, 1959년에서야 본격화된 유엔 민주화 논의는 여러 비동맹 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60년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192] 당시 비동맹을 표방하는 티토, 나세르, 네루, 수카르노, 은크루마 5개국 정상들은 제15차 유엔총회에서 국제긴장완화를 위한 미소정상회의를 요청하는 공동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서방국가들의 견제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193]

비동맹운동의 지도자들은 국제문제에서 비동맹 국가들이 결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특히 티토 대통령은 반둥회의의 아시아・아프리카주의를 초월해서 양대진영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비동맹운동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다. 티토의 노력에 비동맹의 대표주자인 나세르가 호응하면서 제1차 비동맹정상회의(베오그라드 회의)가 추진된다.[194] 1961년 6월 카이로에서 제1차 비동맹정상회

190) 김도민, 2020, pp.76~80.

191) 북한이 추구하는 평화전략은 중공과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제3세계와의 평화공존은 인정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제국주의세력과의 평화공존은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기종, 1997, p.193.

192) 비자이 프리샤드, 2015, pp.151~152.

193) 지양사 편집부 편, 『비동맹운동』, (서울: 지양사, 1985), p.78.

194) 하근경, 1980, p.106.

의 준비를 위한 외상회담이 열려서 회의 일정, 장소, 의제 참가자격을 정했다. 카이로 외상회의에서 제시한 비동맹의 5가지 기준[195]은 '비동맹'의 정책과 특성을 정확히 밝히고 참가국들이 동서진영과 구별되는 내적 통일성을 지닌 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을 촉진했다.[196]

1950년대 후반 중소갈등이 가시화되고 사회주의 진영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자 북한은 주체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조금씩 제3세계 외교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1957년 북한은 경제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인도, 버마, 이집트와 통상협정을 체결하면서 비동맹 국가들과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한다. 카이로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인민연대회의에도 소설가 한설야를 단장으로 민간대표단을 파견했다.[197] 1958년 북한은 이라크 혁명정부를 승인하고, 알제리 임시정부와 아프리카 기니에 국교를 수립했다.[198] 1959년 인도네시아와 문화협정, 이라크와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동맹 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했다. 그러나 티토의 유고슬라비아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내부의 이념적 측면에서 수정주의로 인식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중립주의는 미제와 자유진영에 타격을 주지만, 티토의 중립주의는 공산진영의 단결을 해치는 행위였기 때문이었다.[199] 북한의 제3세계 외교가 여전히 진영외교의 제약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1960년대 북한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면서, 양자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1960년 5월 북한은 알제리 임시정부 대표단과의 공동성명에서 알제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연대성을 표방했으며, 알제리 임시정부는 한국문제

---

195) ①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평화적 공존에 기초한 자주적인 정책을 수행한다. ②민족해방운동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 ③냉전에 말려들게 되는 다변적 군사블럭(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는다. ④동서분쟁에 관련되는 쌍무적 군사조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⑤군사조약에 의한 외국의 군사기지를 자국영토에 두지 않는다.

196) Jürgen Dinkel. 2019, p.104.

197) 옥창준, "냉전기 북한의 상상 지리와 평양 선언", 『통일과 평화』, Vol.12, No.1, 2020, pp.12~13.

198) 홍종욱, 2018, p.387.

199) 김도민, 2020, pp.97~100.

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지지했다.[200] 10~11월에는 버마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으며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무역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201] 1961년 5~6월 버마, 인도, 인도네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북한 정부대표단은 버마, 인도네시아와의 통상관계를 영사급으로 격상시키는데 성공했다,[202]

1960년 아프리카 신생독립국이 급증하자 북한은 아프리카에 대한 비동맹 외교를 활발하게 추진한다. 특히 극좌성향의 카사블랑카 그룹[203]에 속한 국가들과의 교류에 신경썼다. 1961년 6~8월 북한 정부대표단은 아프리카 기니, 가나, 말리, 모로코, 아랍연합공화국(이집트・시리아) 5개국을 순방했다. 북한 정부대표단은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기니와 말리에서 경제문화협정을 체결하고. 이집트와의 관계를 영사급으로 격상시킬 수 있었다.[204]

북한의 제3세계 외교는 기존에 미국의 영향권으로 인식되던 라틴아메리카에까지 확장되었다. 1957~1958년 로동신문은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던 라틴아메리카에서 미제국주의의 내정간섭에 저항하는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205] 1959년 북한은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카스트로 정권이 수립되자 즉각 정부대표단의 상호방문을 통해 교류하기 시작했다.[206] 1960년 북한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쿠바와 최초로 국교를 수립하면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본격화한다. 1960년 6월

---

200) 『로동신문』, 1960년 5월 13일.

201) 『로동신문』, 1960년 11월 5일.

202) 『로동신문』, 1961년 5월 19일, 5월 22일, 6월 19일.

203) 1963년 아프리카통일기구가 등장하기 전까지 아프리카국가들은 이념적・정책적 차이로 온건주의의 몬로비아 그룹과 급진주의의 카사블랑카 그룹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몬로비아 그룹은 국익의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식민세력과 제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카사블랑카 그룹은 반식민주의를 강조하고 아프리카 통합을 지지했다.

204) 『로동신문』, 1961년 6월 17일, 7월 8일 2면, 8월 3일.

205) 『로동신문』, 1957년 3월 2일, 1958년 10월 29일.

206) 1959년 8월 조선로동당 대표단이 최초로 쿠바를 방문했으며, 10월 쿠바 정부대표단이 북한을 답방했다.

북한은 민간 차원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화대표단을 초청하여 반미반제투쟁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려고 했다.[207]

4 ) 1~2차 비동맹 정상회의와 내부분열

1961년 9월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제1차 비동맹정상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갑자기 8월 13일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건설한다. 또한 8월 31일에는 소련이 핵실험 중단에 대한 미영소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핵실험 재개를 선언했다. 양대진영의 긴장이 고조되자 국제사회는 비동맹정상회의의 입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208]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는 개막연설에서 비동맹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며, 국제현안에서 비동맹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 *"비동맹은 중립이 아닙니다. 비동맹은 홀로 떨어져 경건한 척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비동맹정책은 전쟁이 나면 중립을 취하는 정책이 아니며, 비동맹은 아무 색깔 없이 중립을 취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비동맹은 독립, 영구 평화, 사회 정의, 자유로워질 자유라는 대의에 대한 적극적인 헌신을 말합니다."*[209]

비동맹정상들은 베를린 장벽, 소련의 핵실험 재개 등 긴급한 국제현안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지만,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공존했기 때문에 통일된 입장을 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가나의 은크루마 등 대다수 비동맹 정상들은 반제·반식민주의의 근절을 강조했지만, 인도의 네루는 세계평화와 전쟁방지를 우선시하면서 국제정세에 대한 견해차이를 보였다.[210] 제1차 비동맹 정상회의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여 반제반식민주의를 비동맹의 토대로 삼되, 군축과 평

---

207) 『로동신문』, 1960년 6월 12일, 6월 18일.
208) Jürgen Dinkel, 2019, pp.98~99.
209) 박소현, "비동맹운동", 서동진, 박소현 편, 『비동맹독본』, (서울: 현실문화연구, 2020), pp.180~181.
210) 하근경, 1980, p.106.

화공존에 대한 인도의 주장도 선언문에 반영했다.[211] 다만 참가국들은 경제문제에서는 일치된 모습을 보였다. 기존 국제경제질서를 비판하고, 지구적인 경제불균형을 해소할 신국제경제질서를 요구했다.[212]

1962년 7월 9~18일 카이로에서는 저개발국가들의 경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열렸다. 이 회의는 베오그라드 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대부분 저개발국에 속한 비동맹국가들의 경제적 관심사를 반영했다.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에서 모인 31개국 대표단은 유엔에서 불평등한 국제무역, 주요상품거래 등 개발도상국과 선진산업국 간의 경제문제를 논의할 회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213] 그 결과 1964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창설되었다. 120여 개의 창립회원국 중에서 개발도상국(77개국)은 자신들을 수탈하는 선진산업국들과 GATT・브레턴우즈 체제에 맞서기 위한 G77을 결성한다.[214] G77은 베오그라드 회의에서 요구한 공정한 국제무역질서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G77과 유엔무역개발회의의 등장은 빈부국의 대립이 부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215]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발전은 반제반식민주의와 함께 비동맹의 핵심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1960년대 전반 비동맹세력은 군축위원회나 유엔무역개발회의 등 유엔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활동영역을 확대해나갔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과 내홍을 겪고 있었다. 당시 비동맹운동은 중국, 인도네시아 등 반둥회의(아시아아프리카회의)를 선호하는 집단과 유고슬라비아, 이집트 등 비동맹정상회의를 선호하는 집단이 대립하고 있었다.[216]

---

211) 지양사 편집부 편, 1985, pp.79~80.

212) 홍순남, "비동맹 회의와 아프리카의 정치", 『한국아프리카학회지』, Vol.1, 1986, p.210.

213) Jürgen Dinkel, 2019, p.110.

214) 비자이 프리샤드, 2015, p.109; 서동진, "77그룹“, 서동진, 박소현 편, 『비동맹독본』, (서울: 현실문화연구, 2020), p.52.

215) 박봉식, 1980, p.39.

216) 중공은 1950년대 후반부터 인도, 이집트, 유고슬라비아와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다. 중공은 1959년 티베트 봉기와 국경분쟁으로 인도와 마찰을 빚었고, 1958년 이후 대약진운동으로 정치적 좌경화가 심해지면서 유고슬라비아의 수정주의를 강하게 비난했고, 1959년 시리아 공산당을 후원하면서 아랍연합공화국의 수반인

1962년 발생한 중인국경전쟁과 콜롬보 회의의 실패는 비동맹운동의 분열을 촉진시켰다. 1962년 10월 20일에서 11월 2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중인국경전쟁에서 중국군은 분쟁지역을 넘어 인도 영토까지 진출했다. 1962년 12월 10~ 12일 콜롬보에서 실론의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Sirimavo Bandaranaike) 총리의 제안으로 중・인을 중재하기 위해 아시아아프리카의 정상회의가 열렸다. 1963년 1월 콜롬보 회의는 친중(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버마 등)과 친인(이집트 등) 간의 대립 속에서 '중국군 철수'와 '인도의 재점령 포기'를 골자로 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217] 네루는 아무런 조건 없이 타협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중국의 거부로 콜롬보 회의의 중재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중인관계는 회복불능으로 악화되었고, 비동맹운동은 분열했다.

1963년 중인갈등은 비동맹운동에서 아시아아프리카회의와 비동맹정상회의 간의 경쟁을 격화시켰다. 1963~1965년 중국은 인도네시아, 알제리와 함께 비동맹정상회의를 저지하면서 알제리에서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218] 중국은 비동맹 운동 내에서 인도의 중요한 협력국인 이집트를 회유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네루를 지지하던 나세르는 1963년 10월 반다라나이케와 함께 1964년 제2차 비동맹정상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제2의 반둥회의가 나타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219]

결국 1964년 10월 제5~10일 2차 비동맹정상회의는 1965년 6월 알제리에서 예정된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보다 앞서 개최되는 데 성공했다. 카이로 회의는 총 48개 회원국이 참석하면서 규모가 베오그라드 회의보다 거의 2배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중남미에서는 쿠바만 참석했다. 참가국이 늘어난 만큼 국가 간 합의와 이견조율도 더욱 어려워졌다.

---

나세르와 갈등이 생겼다. Lorenz M. Lüthi, "The Non-Alignment, 1961-1974," in Sandra Bott et al (eds.), *Neutrality and Neutralism in the Global Cold War: Between or Within the Blocs?* (London, New York : Routledge, 2016), p.94.

217) Lorenz M. Lüthi, 2016, p.94.

218) Jürgen Dinkel, 2019, p.80.

219) Lorenz M. Lüthi, 2016, p.95

결국 카이로 회의는 반제반식민주의를 비동맹운동의 핵심노선으로 삼되, 최종선언문에 평화공존과 군축,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반영한 절충안을 답습하는 데 그쳤다.[220]

비록 중공은 비동맹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했지만, 10월 16일 독자적인 핵실험에 성공하고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이어 다섯번째로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아프리카의 비동맹 국가들은 중국이 비백인국가로서 최초로 핵무기 클럽에 들어가게 된 것을 내심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지지를 보냈다.[221] 이듬해 중국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얻은 외교적 승리를 바탕으로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대회에서 자신의 반미, 반소, 반인도 의제를 실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1965년 6월 회의 직전에 발생한 주최국 알제리 내부의 군사쿠데타로 인해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동년 12월로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8월 이집트가 또 다시 소련초청안을 꺼내서 회의를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강력한 우군이었던 수카르노마저 10월 군사정변으로 실각하자 아시아아프리카에서 중공의 지도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222] 결국 중공이 회의를 취소하기로 결정하면서 1965년 11월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무산된다. 이로써 제2의 반둥운동은 완전히 소멸하고, 중공도 문화대혁명을 시작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잠시 물러나게 된다.

### 5 ) 북한의 제2반둥회의(친중) 노선과 좌절

1961년 북한 공식문헌은 1955년 반둥회의와 다르게 제1차 비동맹 정상회의(베오그라드 회의) 소식을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 사회주의 진영의 결속을 강조하는 북한으로서는 수정주의자인 티토가 주도한 제1차 비동맹정상회의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223] 대신 1961년 9월 11일 베오그라드 회의 직후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김일성

220) 지양사 편집부, 1985, p.82
221) Lorenz M. Lüthi, 2016, p.96
222) Lorenz M. Lüthi,, 2016, p.96.
223) 홍종욱, 2018, p.396.

은 반제반식민주의를 지향하는 비동맹운동을 지지하고,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성을 강화할 것을 선언했다.[224] 비동맹운동의 반제반식민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을 자신의 반미반제투쟁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1961년 10월 제22차 소련공산당 대회를 기점으로 소련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북한은 1962년 쿠바미사일사태와 중인국경쟁을 거치면서 점차 중공에 편승하는 외교를 취하게 된다.[225] 따라서 비동맹외교에서도 반제・반식민・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중공과 이념적으로 동조하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과 유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226] 자연스레 북한은 비동맹정상회의 지지세력(인도, 이집트, 유고슬라비아 등)과 아시아아프리카회의 지지세력(중공, 인도네시아, 알제리 등) 간의 경쟁에서도 중공의 편에 서서 아시아아프리카회의를 지지하게 되었다.

북한은 비동맹정상회의(특히 유고슬라비아)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로동신문은 인도네시아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유고슬라비아가 비동맹의 가면을 쓰고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을 분열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227] 비록 북한은 중공이 배제된 비동맹정상회의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지만, 비동맹국가들과의 양자관계와 연대성 강화에서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1963~1964년 북한은 우간다, 예멘, 아랍연합공화국, 인도네시아, 모리타니, 캄보디아, 콩고, 가나 8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다.[228]

북한은 1964년 6월 16~23일 평양에서 제2차 아시아경제토론회를

---

224) 이기종, 1997, p.195; 김도민, 2020, pp.150~151.

225) 1963년 6월 20일 북한주재 동독대사관은 <북한 로동당입장에 대한 정보 보고>에서 북한이 세계평화를 유지하려는 소련의 평화공존 정책을 제국주의자에 대한 항복으로 비난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북한이 소련 및 동유럽 대다수 사회주의 국가들과 소원해진 관계에 대응하여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관계를 확장한다고 분석했다. 김도민, 2020, p.152 .

226) 이우영, "남북한의 대비동맹국 외교경합 분석", 『통일문제연구』, Vo.8, 1979, pp.7~8.

227) 『로동신문』, 1962년 12월 13일.

228)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6~196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7), pp.505~506.

개최하면서, 인도와 제3차 아시아아프리카 인민단결회의에서 인도를 지지했던 소련, 이집트,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등을 일부러 초청하지 않았다.[229] 참석한 34개국 민간대표단 중에서 21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아시아아프리카 경제토론회였다.[230] 제2차 아시아경제토론회는 반제반식민주의를 표방하고,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231] 평양선언은 원조를 침략수단으로 삼는 신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강조했는데, 이는 미소 양국을 모두 비판하는 내용이었다.[232] 소련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북한과 논쟁을 벌이면서 북소관계가 더욱 악화되기도 했다.

로동신문은 1961년 베오그라드 회의와 다르게 1964년 10월 5~10일 카이로에서 진행된 제2차 비동맹정상회의를 자세히 보도했다.[233] 북한은 김일성의 명의로 축전을 보내서 카이로 회의가 반제반식민주의와 민족해방투쟁에 기여하길 바라는 기대를 표명하기도 했다.[234] 북한은 제2차 비동맹정상회의가 유고슬라비아의 무원칙한 평화공존을 거부하고 사실상 반제국주의와 반(신)식민주의의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주장했다.[235]

1960년대 전반기 비동맹운동에서 반제반식민주의가 점점 더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1965년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 정식으로 초대받는다. 1964년 4월 인도네시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북한은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을 통해서 아시아아프리카회의의 강력한 후원자인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했다. 1964년 11월 수카르노가 방북하자 1965년 4월 김일성이 반둥회의 10주년 경축행사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는데 김일성의 첫 비사회주의 국가방문이었다. 1965년 4월 14일

229) 옥창준, 2020, p.15.
230) 『로동신문』, 1964년 6월 24일.
231) 김도민, 2020, pp.204~205.
232) 옥창준, 2020, pp.15~16
233) 김도민, 2020, pp.205~206.
234) 『로동신문』, 1964년 10월 5일.
235)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5』,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5), p.427.

인도네시아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을 방문한 김일성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주창하면서 자신의 주체사상을 강의했다. 이때까지 북한의 제3세계외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북한의 제3세계 외교는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1965년 6월 19일 주최국인 알제리에서 갑자기 군사쿠데타가 발생해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 적극적이었던 벤 벨라 정권이 무너진 것이다.[236] 설상가상으로 1965년 9월 30일에는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가 군사정변으로 실각하는 일이 발생한다. 혼란스런 정세 속에서 북한이 중국에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의 개최여부를 문의하자, 1965년 10월 11일 차오관화 중국 외교부장은 박세창 주중 북한대사에게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의 무기한 연기라는 중국을 입장을 전달했다.[237] 중공으로서는 강력한 지지세력이던 알제리와 인도네시아의 정권붕괴로 인해 중공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반중공세력이 득세한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우호적인 세력을 배제하고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를 구성하는 것을 중공에 제안하지만, 중공은 분열된 회의를 여는 것은 손해라면서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다.[238]

### 6 ) 비동맹의 침체기와 북한의 자주외교노선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의 무산된 지 얼마 안 되서, 제1회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인민연대회의(삼대륙 회의)가 개최되었다. 1966년 1월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삼대륙 회의는 반제반식민주의 운동으로서 평화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민족해방운동에서 무장투쟁의

236) 옥창준, 2020, p.19.

237) "Record of Conversation between Vice-Foreign Minister Qiao Guanhua and North Korean Ambassador in China Pak Se-chang," October 11, 196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8773

238) "Record of Second Conversation of Premier Zhou Enlai and Vice Premier Chen Yi with Foreign Minister Pak Seong-cheol," November 11, 196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8693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전투적인 입장을 취했다.[239] 쿠바, 알제리, 잠비아, 자메이카가 주도하는 가운데 제1세계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참가국들은 미국에 맞서 전쟁 중이던 베트남과의 연대를 다짐했다.[240] 삼대륙 회의는 반제반식민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했다는 면에서 비동맹운동과 아시아아프리카회의의 연장선에 위치한 회의이며, 지리적 범위가 아시아아프리카 대륙을 넘어서 라틴아메리카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녔다.

삼대륙 회의와 별개로 1960년대 후반 비동맹운동은 침체기를 겪는다. 첫번째 원인은 비동맹운동의 리더십이 약화된 것이었다. 비동맹에 우호적이던 알제리, 인도네시아, 가나, 말리 등에서 연이어 군사쿠데타가 발생한 탓이 컸다. 네루는 1964년에 사망했고, 나세르는 1967년 3차 중동전쟁의 패배로 위축되었으며, 실론의 반다라나이케는 1965년 선거패배로 물러난 상태였다. 두번째 원인은 비동맹국가들의 분열이었다. 1965년 아시아아프리카회의가 실패하면서 비동맹운동 내부의 경쟁은 일단락되었지만, 분열의 상처는 깊었다. 세번째 원인은 비동맹 운동이 추구하던 목표들이 상당부분 성취되면서 단결의 필요성이 약해진 것이다. 1960년대 후반 유럽의 식민제국은 거의 다 사라졌고,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은 유엔에 가입했고, 미소 간의 데탕트가 진행 중이었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유엔무역개발회의도 제도화되었다.

1966년 북한은 문화대혁명으로 교조화된 중공과 관계가 악화되자, 중공에 편승하던 외교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자주노선을 선언한다. 북한의 자주노선은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공식화되었다. 김일성은 시대가 변하면서 국제공산주의운동도 소련 중심의 위계질서에 종속되지 않으며, 더 이상 중앙당의 지시나 지도가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각국의 공산혁명이 각국의 공산당의 지도에 따라서 수행된다고 주장했다.[241]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에서 민족해방투쟁이 거세지

---

239) 박소현, “삼대륙회의”, 서동진, 박소현 편, 『비동맹 독본』, (서울: 현실문화연구, 2020), pp.198~199.

240) 비자이 프리샤드, 2015, p.160.

241)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김일성 저작선집』, 4권, (평양: 조선로동

고, 전세계적으로 혁명역량과 반혁명역량 간의 투쟁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초강대국인 미소가 평화적 공존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작은 나라들을 공략하는 새로운 냉전전략을 시작했다고 국제정세를 분석했다.[242] 따라서 김일성은 미국의 새로운 냉전전략에 맞서기 위해 전지구적인 반제투쟁이 중요하며,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민족해방운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과 함께 반제반식민주의를 지향하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지지・연대를 대외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했다.[243] 북한의 자주외교는 반제반식민주의를 접점으로 제3세계 외교에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북한의 제3세계 외교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민족해방투쟁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미국에 맞서는 쿠바, 베트남과 같은 소국과의 연대를 추구하고 대외관계를 확장해나갔다. 북한은 1966년 7월 아랍연합공화국에서 분리독립한 시리아, 1968년 이라크, 1969년 수단과 차례로 국교를 맺었고 1969년 리바아에서 카다피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자 빠르게 유대관계를 쌓는 모습을 보였다.[244] 적도기니,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처럼 중립노선이지만 친서방의 성향을 보이던 국가들과도 대사급 외교관계에 합의하는 등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245]

### 7 ) 소결

1955년까지 북한외교는 사회주의 국가에만 한정된 진영외교를 펼쳤다. 반둥회의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을 초월하여 중립적인 제3세계와의 외교를 선언했다. 이것은 탈식민지 국가들과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소련과 중공의 접근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었다. 1960년대 전반까지

---

당출판사, 1968), pp.346~347.

242) 김일성, 1968, pp.317~403..

243) 김도민, 2020, pp.220~221.

244) 이기종, 1997, p.199.

245) 박재규, "북한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 박재규 편, 『북한의 대외정책』,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86), p.516.

북한의 제3세계 외교는 중소에 편승하는 전략으로서, 유고슬라비아 및 티토가 주도한 비동맹운동과 거리를 두는 등 여전히 진영외교의 제약 속에서 중소의 영향력 하에 존재했다.

1960년대 전반 중소갈등은 북한의 제3세계 외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쿠바미사일 사건 이후로 소련과의 관계가 경색되자 중공에 밀착한다. 제3세계 외교에서도 중공이 추진하는 제2반둥회의(아시아아프리카대회) 노선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이는 비동맹 정상회의를 지지하는 인도, 이집트, 유고슬라비아, 실론(현 스리랑카) 등과 대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가간 외교관계에서도 자신과 중공처럼 이념적으로 반제반식민주의의 급진적 성향이 강한 국가들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제2차 아시아 경제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소련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는 1965년까지 북한의 제3세계 외교가 중소갈등 등 진영외교 내부상황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1960년대 후반 북한의 제3외교의 질적 변화는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자주적인 성격에 있다. 초기 소련과 중국에 편승하던 수동적인 외교를 탈피한 것이다. 1970년대 데탕트기 북한은 중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적극적인 비동맹 외교를 추진한다.

1950,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중소의 영향력 하에서 유고슬라비아가 주도했던 비동맹 외교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티토의 유고슬라비아는 소련과 갈등을 빚었고, 또한 중국의 아시아아프리카 대회가 비동맹회담과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66년 자주외교의 공식화 이후 북한의 제3세계 외교는 더 이상 이념적으로나 양자관계에서 중소의 외교노선에 좌우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1970년대 전반 데탕트기 북한의 비동맹 외교는 중소와 별개로 독자적인 양자관계를 통해 확대되었다. 이는 1973~1975년 미국과 한국문제를 둘러싼 외교전에서 북한이 비동맹 외교를 통해 중소 사이에서 자주성을 강화하고, 유엔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 Ⅳ. 북한의 외교전술과 제30차 유엔총회에서의 성과

## 1.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 미중소 삼각관계

2차 세계대전의 승리 후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의 우위를 보였던 미국이 60년대 말에 이르러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했다. 핵전력에서는 소련에 따라 잡혔고, 과도한 군비지출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약세를 보였다.[246] 국력의 약화는 미국에게 소련과 사회주의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닉슨 행정부는 막대한 군사력과 재정지출을 요구하는 대소련 봉쇄정책을 포기하고, 유럽에서 주도한 데탕트에 동조하여 "평화의 구조(structure of peace)"라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247] 사회주의권과의 불필요한 이념적 대립을 지양하고 필요에 따라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한 것이다. 닉슨, 포드 행정부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중소분쟁을 이용한 강대국 간의 전략적 균형을 통해 "평화의 구조" 정책을 구체화했다. 결과적으로 데탕트기 미 행정부는 한국전쟁 후로 줄곧 적대관계에 있던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소련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데탕트기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1969년 7월 25일 닉슨 대통령이 동남아 5개국 순방 중 괌에서 있었던 비공식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닉슨 독트린에서 구체화되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닉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우리가 방문하는 모든 아시아 국가에서 아시아인들은 '우리는 외부의 지시(통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를 원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게 우리(미국)가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을 도와야 하지만, 결코 그들에게 지

---

246) 전재성, "1960년대와 1970년대 세계적 데땅뜨의 내부 구조: 지역적 주도권의 변화과정 분석," 『국제정치논총』, Vol.45, No.3, 2005, pp.36~40.

247) 전재성, 2005, p.44.

시(명령)해서는 안 된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이 진행 중인 정치적, 경제적 계획들이 매우 희망적이다. 우리(미국)는 그 계획들을 도울 것이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체결한 조약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를 너무 의존하도록 만들어서 베트남에서 겪은 것처럼 우리가 분쟁이 끌려들어가게 만드는 정책은 피해야만 한다.”

“우리는 분명히 조약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의 위협을 제외한 군사적 방어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의 책임을 지고 문제를 다루기를 권장하고 그렇게 하길 기대한다.[248]

닉슨 독트린은 베트남전과 같이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전쟁에서 미국의 지상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249] 당시 미국은 그동안 누적된 막대한 군비지출로 인해 경제력이 약화되었으므로, 약화된 경제적인 수준에 맞게 전쟁의 개입을 줄여야만 했기 때문이다. 닉슨 행정부는 1969년부터 베트남전에 파병된 미군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갔으며 1973년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베트남에서 전면 철수를 완료한다. 또한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아시아의 동맹국들에 주둔 중이던 미군의 병력규모를 감축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수준을 축소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 문서에 기록된 닉슨의 말에 따르면 닉슨 독트린은 절대 아시아에서 미국이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다만 동맹국의 기여도를 확대하여 과도한 대미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려는 의도였다.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이행하고 역내 영향력은 유지하

---

248) "29. Memorandum of Conversation," 『Foundations of Foreign Policy, 1969-1972』, FRUS, 1969-1972, Volume Ⅰ.

249) 빅터 차,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김일영, 문순보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p.107.

고자 했지만, 아시아에 있던 미국의 동맹국들은 닉슨독트린과 미군의 철수움직임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일본은 미군감축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72년 방중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성공하면서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의 부담을 줄였다. 결과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역량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지만,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화해와 일본의 역할 확대를 통해 소련과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1960년대 말 사회주의 진영의 핵심 국가였던 소련과 중국의 양자관계는 국경분쟁까지 발생할 정도로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당시 소련과의 분쟁에서 열세를 보이던 중국은 1968년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반발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극심한 안보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국은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제휴를 통한 소련 견제라는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250] 그 결과 중국은 이이제이의 원리에 따라 연미제소(聯美制蘇)의 외교전술을 추진한다.

군비지출의 감축과 군사력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련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략적인 균형을 유지해야만 하는 미국에게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했고, 소련의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강대국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중국에게는 미국의 협력이 필요했다. 양측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면서 1970년부터 폴란드 주재 미국대사와 중국 대사를 통한 양국 간 비밀접촉이 시작되었다.[251] 1971년 7월 닉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이었던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252] 1972년 2월 상하이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상하이 공동성명에 합의하면서 미중화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

250)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벼랑에 선 줄타기외교의 선택』 (서울: 백산서당, 2002), pp.52-53.

251) 이동률, “중국의 1972년 대미 데탕트: 배경, 전략, 역사적 함의,” 『국가전략』, Vol.20, No.3, 2014, p.86.

252) "139. Memorandum of Conversation," 『CHINA, 1969-1972』, FRUS, 1969-1976, VOLUME XVII.

미중관계를 대소관계에 이용하는 미국의 연계정책(linkage policy)은 성공적으로 작동했다. 미국과 중국이 전격적으로 관계개선에 나서자 미중화해의 원인을 제공했던 소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과 중국이 연합전선을 형성하면 자신이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과 상호불신이 지속되던 소련은 대미관계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소련은 미국의 의도대로 대미외교에서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게 된다. 미소데탕트는 1973년 워싱턴에서 열린 닉슨 미국 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으로 진전되었다.[253] 결국 사회주의권에서 미소 간의 경쟁과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에게 유리한 삼각구도가 형성되었다.

## 2. 데탕트기 북한외교의 전략와 목표

1955년 12월 김일성은 일찍이 전후복구시기부터 당의 사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것을 주장하면서 강대국인 중국과 소련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254] 1950~60년대 북한외교는 중소 사이에서 북한의 주체성과 증진하고, 제3세계에 교역을 확대하는 등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북한의 수교국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12개국, 1969년까지 32개국에 그쳤다. 남한의 수교국이 1953년 6개국에서 1969년 80개국으로 늘어난 것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였다. 하지만 북한은 데탕트기 비동맹국가들과의 수교를 통해서 1973년 알제리 비정상 정상회의 시기 59개국, 1975년 비동맹 가입 시기 87개국까지 외교관계를 확대한다.

데탕트기 북한이 활발한 비동맹외교를 전개했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적화통일에 있었다. 1971년 6월 김일성은 루마니아 대표단

---

253) 강윤희, “미중 데탕트와 소련: 국제정세 인식과 대응,” 『EAI 워킹페이퍼』, 2014, pp.6~7.

254)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김일성 저작선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p.560~585.

과의 대화에서 주한미군이 남북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인식을 표출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향한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255] 김일성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주장했다. 통일에 진척이 없는 것은 안보위협을 과장하면서 대화를 거부하는 "남조선의 반동지배층"과 이를 빌미로 남조선 강점을 정당화하는 "미제 침략군" 탓이라고 비난했다.[256] 북한은 외세의 내정간섭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한반도 문제해결 즉 남북통일을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비동맹의 높아진 위상을 이용하고자 했다.

1964년 2월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독자적인 통일전략으로서 '3대 혁명력량'의 강화를 주장했다.[257] 3대 혁명력량 강화론에서 공화국 북반구(북한)의 혁명력량을 제외하면, 남조선의 혁명력량과 국제혁명력량 강화는 데탕트기 북한 외교의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북한은 친북단체를 포함한 진보적인 사회단체들과 민주인사들의 통일전선을 통해 남조선의 자체적인 혁명으로 박정희의 군사독재정권이 붕괴되길 기대했다.[258] 북한 지도부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남한 내 바판여론을 이용하여 남북대화 등 평화공세를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친북단체와 진보단체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남조선 혁명력량을 강화하려고 했다. 동시에 북한은 국제혁명력량 강화의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반미반제국주의에 동조하는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 국가들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했다.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 등

---

255) "Minutes of Conversation on the Occasion of the Party and Government Delegation on behalf of the Romanian Socialist Republic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une 10, 1971.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2790

256) 김일성,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국장 및 교도통신사 기자와 한 담화," 『김일성 저작선집』, 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pp.85~92.

257) 김일성,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김일성 저작선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p.77~96.

258)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 저작선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p.479~491.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도 김일성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인민들의 반제혁명을 지지하면서 반미투쟁과 한국문제에서 이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자 했다.[259] 특히 데탕트 시기 북한의 적극적인 비동맹 외교는 유엔 내 미국의 지위약화와 중공의 대표권 확보, 제3세계의 영향력 강화 등 호재 가운데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전략적 사고의 바탕에서 실천되었다.[260]

1960년대 후반까지 강력한 반미주의를 표방하던 북한이 1970년대 초반 돌연 중국의 대미접근을 지지하고, 그토록 비난하던 박정희 정권과의 남북회담에 나선 까닭도 북한의 통일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북한은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EC-121 격추사건을 연이어 터뜨리면서 미국과 강하게 대립했었다. 그러나 닉슨 방중일정 발표 직후 1971년 11월 15-2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3차 전원회의에서 "당면한 제문제의 전술적 전환"을 결의했으며, "공산주의자들은 정세를 혁명에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해 적들과 일시적으로 타협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반제국주의 강경노선으로 일관하던 기존의 외교정책을 벗어나 대미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261] 소련과 북베트남은 닉슨의 방중일정이 발표되자 즉각적으로 중국을 비난하는 서명을 발표했으며, 북한은 아시아에서 미중데탕트를 지지하는 유일한 국가였다.[262][263] 또한 1972년 2월 닉슨의 방중으로 미중화해가 더욱 진전되자 이를 정당화하는 '백기론'으로 미국의 행태를 '패

259) 김일성, 1972, pp.238~261,

260) 김일성, 1972, pp.492~502.

261) 김일성, "당간부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선집』, 6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4), p.161.

262) 홍석률, "1970년대 전반 북미관계: 남북대화, 미중관계 개선과의 관련 하에서", 『국제정치논총』, Vol.44, No.2, 2004, pp.35~36.

263) 미국과 소련이라는 공통된 대적관계에 따라 관계개선을 추진하던 중국의 외교정책은 베트남을 포함해서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갈등관계에 있던 동아시아의 공산권 국가들에게 지지를 받기 힘들었다. 소련에게서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던 중국은 공산 진영 내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동아시아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대미정책변화에 대한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국가들의 지지가 매우 중요했다. 최명해, 2009, pp.279~283.

배자의 행각'이며 '중국 인민의 큰 승리'라고 선전하며 중국의 대미접근 정책을 옹호했다.[264] 그 해 12월 26일 북한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김일성은 "조선반도의 남과 북에 대하여 침략적 성격이 없고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관계를 맺는" 외교정책의 노선변화를 공식화하는 모습을 보인다.[265] 당시 북한은 미중화해 등 데탕트 환경을 미국의 세력이 약화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국제정세가 조성되었다는 판단 하에 주한미군 철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중관계의 진전에 보조를 맞추며 남북대화를 진행했다.[266]

북한의 평화공세는 국제사회에서 비동맹 국가들의 지지를 얻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남한 내 민주세력에게도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했다. 특히 1971년 미국이 주한미군 2만명을 철수시킨 일은 북한 정권에게 주한미군 철수의 기회로 여겨졌을 것으로 보인다. 즉 김일성의 평화공세는 박정희 정부의 안보논리를 무력화시키고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던 주한미군 철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은 미중대화에서 이런 북한의 기대를 반영하면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안정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려고 했다. 1971년 7월 9~11일 북경에서 키신저와 저우언라이가 비밀회담을 진행하던 기간에 북한 측 대표단은 북경에 체류하면서 저우언라이와 접촉한다.[267] 당시 북한은 주한미군이 유엔의 이름으로 한반도 남부를 불법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268] 이에 따라 저우언라이는 키신저에게 먼저 한국문제를 꺼내면서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평화협

---

264) 김일성,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김일성 저작집』, 26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4), p.225.

265) 국토통일원 편,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3권,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508.

266) Christian F. Ostermann and James F. Person (eds.), *The rise and fall of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874* (Washington: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 2011), pp.8~9, 32, 36~37.

267) 홍석률, 2004, p.34.

268)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70』(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0), pp.521~527; 『조선중앙년감: 1973』(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3), pp.30~46.

정을 원하는 북한의 입장을 전달했다.[269] 키신저는 이미 2만 명 감축이 진행 중이고 남한의 미군주둔이 영구적인 방침이 아니라면서 추가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철수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답한다.[270]

미국에서도 북중 간의 정책적 협력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미 의회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271] 중국과 북한은 1971년 7월 29일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정전을 평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7개 요구사항'[272]을 미국 측에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한다.[273] 북한은 중국에게 북한이 주장하는 8가지 요구사항[274]을 미국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고, 1971년 10월 22~26일 키신저가 다시 중국을 방문하자 주은래는 북한의 요구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 동맹국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충실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275]

11월 1~3일 저우언라이는 북경을 극비리에 북경을 방문한 김일성

---

269)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공개문서로 보는 미중관계와 한반도』(서울: 창비, 2012), pp.106~109.

270) "139. Memorandum of Conversation," 『CHINA, 1969-1972』, FRUS, 1969-1976, VOLUME XVII.

271) "The New China Policy: Its Impact on the United States and Asia,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ouse of Representatives. 92nd Congress, Session," May 2, 3, 4, 16 and 17, 1972, Selected Historical Materials in the Library of Congress Relating to Korea: Congressional Record.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철 AUS159_00_00C0006)

272) 1. 미군 철수 2. 일본을 남한에 끌어 들이는 행위 중지 3. 남한에 반입한 전투장비 철수 4. 무장도발 침략행위 중지 5. 비무장지대 내 중장비 및 군사시설 철수 및 파괴 6. 공동경비구역 내의 도발행위 중지 7. 군사분계선 자유왕래 허용.

273)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65권(과천: 국가편찬위원회, 2009), pp.389~390.

274) 1. 남한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2. 미국의 대남 핵무기, 미사일 및 각종 무기 제공 즉각 중지 3. 미국의 대북 침범 및 각종 정탐·정찰 즉시 중지 4.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중지 및 한미 연합군 해체 5. 일본 군국주의 부활 방지에 대한 보장 및 남한에서 미군·기타 외국군대의 일본군으로의 대체불가 6.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해산 7. 미국의 남북 직접대화 방해 금지 및 조선인민에 의한 조선문제 해결 8. 유엔의 한국문제 토의 시, 북한 대표의 무조건적 참가 허용 및 조건부 초청 취소.

275) 홍석률, 2012, p.159.

에게 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했다.[276] 심지어 1972년 1월 26일 북한은 닉슨의 방중에 앞서 박성철 내각 제2부수상을 보내 한국문제에 대한 입장을 중국과 조율하기도 한다.[277] 미중이 합의한 상하이 공동성명에서도 중국은 북한이 제시한 조국통일 8개항[278]에 대한 지지의사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요구를 명시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다. 북한은 즉각 상하이 공동성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1972년 3월 7일 저우언라이는 직접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에게 닉슨과의 회담내용을 설명하기까지 했다. 이런 북중협력은 중국의 외교적 노력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의 대미외교에 대한 북한의 기대가 맞물렸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북중 간의 긴밀한 교류와 다르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입장과 목표는 분명히 달랐다. 북한은 남북통일을 위한 한반도의 현상변경을 원했지만,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긴장완화를 우선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중대화가 진행될수록 중국의 입장은 북한보다 오히려 미국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 3. 한국문제에 관한 미중대화와 소련의 입장

### 1 ) 한국문제에 관한 미중대화

1972년 2월 주은래는 키신저와의 대화에서 남북대화를 촉진하면서 UNCURK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점진적인 철수를 요청했다. 이에 키신저는 UNCURK 해체에 대한 검토를 약속하면서 미중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남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279] 그 해 6월 주은래

---

276)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서울: 중심, 2000), p.257.

277) 최명해, 2009, p.292.

278) 1. 미군 철수 2. 남북한 군축 3. 남조선의 예속적인 외교협정 및 조약 폐기 4. 남북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 5. 남조선의 모든 정치범과 애국자 석방 6. 과도기적 연방제안 7. 남북교류(서신왕래, 인사왕래) 실현 8. 남북한 정치협상회의 개최.

279) "Korea: February Talks. Nov. 28-Dec. 7, 1975," Far East International Issues Presidents Copy (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는 키신저에게 한반도의 군사적 통일에 반대하는 중국 입장을 전하면서 아직 남북한 통일의 때 무르익지 않았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개입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UNCURK의 조속한 해체를 요구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지지 의사만을 강조했다.[280] 키신저는 1972년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유로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를 선거 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281] 또한 미중이 남북한을 자제시키고 남북대화를 촉진하면서 데탕트를 해치지 않기 위해 한국문제의 공개적인 토론은 지양해야 한다는 미국 입장을 전했다.[282] 미중대화에서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데탕트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니고 있었으며, 한반도의 통일에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1973년 2월에 다시 만난 주은래와 키신저는 유엔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공개토론 없이 UNCURK를 연내 해체하기로 합의에 도달했다.[283]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주은래가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며 점진적인 철수 주장을 전하기만 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지 않는다.[284] 미국 측 기록에 따르면 미중대화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UNCURK의 연내 해체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안으로 여기지 않았다.[285] 단 미국은 유엔군사령부(UNC)는 유용하지만 한반도 군사

---

280) "233. Memorandum of Conversation." 『CHINA, 1969-1972』, FRUS, 1969-1976, VOLUME XVII.

281) "233. Memorandum of Conversation." 『CHINA, 1969-1972』, FRUS, 1969-1976, VOLUME XVII.

282) "Korea: June Talks. Nov. 28-Dec. 7, 1975," Far East International Issues Presidents Copy (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283) "13. Memorandum of Conversation,"『Chin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XVIII.

284) "17. Korea: February 1973 Talks, Nov. 28-Dec. 7, 1975," Far East International Issues Presidents Copy (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Chin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XVIII.

285) "18.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Chin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XVIII.

태세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주한미군과 별개로 UNC 해체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286]

1973년 6월 키신저는 미국의 중국 연락소장인 황첸을 통해서 중국에 UNCURK 해체와 UNC 논의연기에 관한 미국정부의 결정과 진행 상황을 알렸다.[287] 즉 UNCURK와 UNC의 단계적 접근을 제시한 것이었다. 미국은 동맹국인 남한이 안보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UNCURK를 28차 유엔총회에서 해체하고, UNC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자는 계획에 기초해서 중국과 대화를 이어갔다. 중공은 남한에 주둔 중인 외국군 철수를 요구하는 북한의 조국통일 5대강령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그러나 1973년 7월 루마니아 외교문서는 중공이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힘의 공백을 소련을 차지할까봐 염려하고, UNCURK과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더라도 한미양자협정에 따른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중국 외교관과의 대화내용을 담고 있다.[288] 1973년 10월경 백악관 회의기록도 한국문제에서 중국과 소련이 북한과 다르게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과 유지를 원하므로 주한미군 철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분석을 보여준다.[289] 11월 6일 UNCURK에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보고서도 중국이 원하는 건 한반도의 현상유지이며, 유엔군 사령부나 주한미군 철수 등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한국문제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지는 립서비스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290]

---

286) "235. Summary and Options From a Study Prepared by the Interdepartmental Group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Documents on East and Southeast Ais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2.

287) "36. Editorial Note,"『Chin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XVIII; "37. Memorandum of Conversation." 『Chin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XVIII.

288) "Telegram from New York to Bucharest, SECRET, No. 091.722, Normal," July 31,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70

289) "Memorandum for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NSSM 171 Follow-On--Analysis of the Role of the Army Division in Korea," SRG Meeting Korea 2/19/74, Richard Nixon Library.

290) "Letter, Ahmet H. Ozbudun to Ismat Kittani, "UNGA Prospects on the Korean Question?"," November 06, 1973.

미중은 제28차 유엔총회 기간 막후에서 UNCURK를 해체하되 유엔군사령부 문제는 1년간 보류하기로 합의했으며,[291] 결의안 상정시기와 남북한을 포함한 각 진영에 대한 설득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논의했다.[292] 미중은 소련이 합의문 발표를 방해할 경우에 대한 공동대처도 이야기했다.[293] 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UNCURK 해체 이후에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294] 중국은 총회 막바지에야 북한을 설득했으며, 미국과의 이면합의를 숨긴 채 다른 우방국들을 설득했다.[295] 키신저는 남한을 안심시키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한국통일문제에 관한 미중 간의 대화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296] 미중외교는 데탕트기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의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보여준다.

2 ) 한국문제에 관한 소련의 입장과 북소관계

데탕트기 소련은 한국문제에서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중 간의 대화에 소외되었다. 소련은 반소련에 기초한 미중 간 화해가 진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용한 수단을 고민했다.[297] 닉슨의 방중 직후 미중화해

---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7571

291) “52. Editorial Note,” 『Chin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XVIII.

292) “56 .Memorandum of Conversation,” 『Chin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XVIII.

293) “Telegram from Brent Scowcoft to Henry A. Kissinger,” HAK Trip - Mid East, Islamabad, Peking, Tokyo, Seoul HAKTO 1-17, Richard Nixon Library; “Korea: November 1973 talks,” Nov. 28-Dec. 7, 1975-Far East International Issues Presidents Copy (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294) “57. Memorandum of Conversation,” 『Chin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XVIII.

295) 홍석률, 2004, p.47.

296) “246. Memorandum of Conversation, Seoul, November 16, 1973,” 『Documents on East and Southeast Ais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2.

297) "Note on the Meeting with Comrade O.B. Rakhmanin, Deputy Head of

가 과연 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것인가에 의구심을 표하며, 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아시아집단안보구상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98] 소련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대화를 원했고, 동시에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남북대화를 환영했다.[299] 1969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에서도 소련은 미국과의 원만한 해결을 추구하는 한반도 긴장고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소련도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던 것으로 보인다.

소련이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바란다는 사실은 남한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접근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1971년 8월 소련은 북한의 예민한 반응을 고려하여 헝가리 정부에 남한정부의 접촉제의에 대해 대북관계에 해가 가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지만, 장래 대남접촉이 유용할 수도 있으므로 단호하게 거부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반응할 것을 권고했다.[300] 남한정부는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이 데탕트에 입각한 현상유지정책으로 기울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외교관에 대한 소련외교관들의 태도변화가 유화적으로 변했다고 보았다.[301] 장기적으로 대남접촉을 생각하는 소련의 태도는 한반도의 급격한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북한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북한은 소련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문제에서 자신을 지원해주기를 기대했다. 1971년 10월 박성철 외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브레즈네프 소련서기장에게 한미군사협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소련이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대미, 대일 양자대화에서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302] 12월 소련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자

---

International Department of CC," February 28,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668

298) 대한민국 외교문서, “소련의 대외정책, 1972”, (E-0009-05), pp.75~90.

299) Christian F. Ostermann and James F. Person (eds.), 2011, p.5, 51.

300) "Telegram, Embassy of Hungary in Chin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September 24, 1971.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611

301) 대한민국 외교문서, “소련의 대외정책, 1972,” (E-0009-05) p.103.

302) "Telegram,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November 01, 1971.

김일성은 미제국주의가 약화되고 박정희 정부도 내부적으로 위기에 봉착했다고 분석하면서 평화공세를 통해 남한 내 진보세력을 지원할 계획을 설명한다.[303] 북한은 어떤 종류의 반소활동에도 참가하지 않으며, 소련이 대미협상에서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304] 이에 화답하여 소련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지지했으며,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약속했다.[305] 북한은 소련이 북중관계를 불편해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공의 대북접근을 염려하는 소련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1972년 5월 브레즈네프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닉슨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북한의 주장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관리하려고 했다.[306] 브레즈네프는 닉슨에게 북한이 군사행동을 할 계획이 없으며, 평화적인 통일을 원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소련도 한국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다.[307] 9월에도 브레즈네프는 키신저와의 대화에서 제27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토의연기안을 반대하는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다.[308] 중국이 한국문제에서 북한을 지원하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로 끌어들이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련

---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618

303) "Telegram,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December 20, 1971.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621

304) "Telegram,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December 20, 1971.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621

305) "Letters between Ahmet H. Ozbudun and C.V. Narasimhan," March 08, 1972.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7638

306) "From the Journal of N.G. Sudarikov, 'Record Of A Conversation with Kim Il Sung, General Secretary of the KWP CC and Chairman of the DPRK Cabinet of Ministers, 19 June 1972'," July 06, 1972.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34135

307) "299. Memorandum of Conversation," 『Soviet Union, October 1971–May 1972』, FRUS, 1969–1976, Volume XIV.

308) "44. Memorandum of Conversation," 『Soviet Union, June 1972–August 1974』, FRUS, 1969–1976, Volume XV.

및 친소 사회주의 진영은 겉으로 보이는 북중관계의 진전과 다르게 북중 간의 이견이 크기 때문에, 북한을 소련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한국문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분석했다.[309] 이미 1972년부터 중소 간에는 상대방의 대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자신의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었다.[310] 1973년 6월 소련은 북한이 발표한 조국통일 5대강령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북소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한다. 제28차 유엔총회에서도 소련은 지속적으로 UNCURK와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결의안을 지지하면서 외교적으로 북한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데탕트기 소련은 세계전략상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와 안정을 원했다는 점에서 북한과 추구하는 바가 달랐다. 소련은 아시아판 유럽안보협력기구로서 아시아집단안보회의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을 집단안보에 포괄하면서 중공을 억제하고 아시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311] 소련은 닉슨 독트린에 의한 아시아의 공백을 자신이 메우려고 했으며, 따라서 중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312] 하지만 남북한을 포괄하는 소련의 집단안보체제는 궁극적으로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고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북한의 통일전략과 상충되었다.

## 4. 비동맹 운동의 재개와 제3세력화

### 1 ) 비동맹운동의 부활

---

309) "Report from Etre Sándor, 'Discussion with Comrade Sebestyén. Comrade Sebestyén's assessment of the situation.'," September 28, 1972.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23112

310) "A. Putintsev and V. Gorovoy, 'Key Aspects of Korean-Chinese relations in 1972'," December 08, 1972.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34151

311) 대한민국 외교문서, "소련의 아시아집단안보구상, 1972~73," (G-0031-09), pp.4~12, 31, 42~50, 52~58.

312) 대한민국 외교문서, "소련의 대한정책 및 우방국을 통한 한, 소련개선 1973~74," (2010-87-02), p.64.

1960년대 후반 비동맹운동이 침체기에 빠진 사이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77그룹이 제3세계의 핵심적인 회의체로 기능했다. 특히 '77그룹'은 국제경제문제에서 선진산업국가들과 대립하는 저개발국의 모임으로 제3세계의 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본래 UNCTAD 내에서 대륙(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별로 뭉친 저개발국들의 느슨한 연합이었던 77그룹은 1967년 10월 알제리에서 개최된 제1차 '77그룹' 장관급 회의를 통해 제3세계의 공식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게 된다.[313] 이 회의는 1968년 2~3월 인도 뉴델리에서 예정된 제2차 UNCTAD에 앞서 77그룹 회원국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다.

개최국인 알제리의 부메디엔(Houari Boumediène) 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남반구(제3세계, 저개발국) vs. 북반구(제국주의, 선진산업국)' 대결의 구도에서 국제정치의 현실을 분석했다.[314] 향후 전지구적인 경제적 불평등과 저개발문제를 정치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제3세계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부메디엔 대통령은 동서 간의 데탕트가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선진산업국가들이 불평등한 남북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인 의지를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315] 또한 기존 국제경제질서는 제3세계를 착취하던 식민지 지대의 유산이며,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고, 전지구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킨다고 비판했다.[316] 알제리의 단호하고 강경한 대결의지는 제3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알제리 헌장은 개발문제에 대한 제3세계의 최초의 합의로서, 제3세계 국가들의 국제경제체제에 대한 개혁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제2차 UNCTAD에 제출할 77그룹의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317] 이 헌장은 원자재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한 재고정책, 개발도상국 공산품

---

313) Robert A. Mortimer, *The Third World Coali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84), pp.24~25.

314) A. W. Singham and Shirley Hune, *Non-Alignment in an age of alignments, Westport*, (Conn.: L. Hill; London: Zed Books, 1986), p.97.

315) A. W. Singham and Shirley Hune, 1986, p.97.

316) Robert A. Mortimer, 1984, p.26.

317) Robert A. Mortimer, 1984, p.28.

에 대한 일반특혜관세, 기술원조와 개발기금(GNP 1%), 부채탕감 등 급진적인 제안들을 제시했다.[318] 저개발국들의 기대감과 다르게 1968년 2~3월 제2차 UNCTAD에서 나타난 선진개발국가들과의 협상결과는 77그룹에게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선진개발국가들은 저개발국들의 제안들을 묵살해버렸다. UNCTAD에서의 실패는 제3세계 국가들이 다시금 비동맹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2 ) 비동맹 운동의 좌경화와 진영화 현상

1970년 제3차 비동맹 정상회의의 개최는 유고슬라비아 티토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 1968년 8~9월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에 위협을 느낀 티토는 비동맹운을 되살리기 위해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쳤다. 1969년 7월 유고슬라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에서 1964년 카이로 정상회의 참가국 정부대표들이 모여서 비동맹운동의 지속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319] 이들은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비동맹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비동맹운동이 부활하게 되었다.

1969년 9월 제24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비동맹국 대표들은 이듬해 9월 8~19일 잠비아 루사카에서 제3차 비동맹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다. 1970년 4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는 비동맹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장관급 예비회담이 열렸다. 다르에스살람 회의는 경제위원회와 정치위원회로 분리되어서 진행되었으며, 각각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원과 경제개발문제를 핵심주제로 다뤘다.[320] 줄리어스 니에레레(Julius Nyerere) 탄자니아 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서구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신생독립국의 주권에 가장 큰 장애라는 점을 밝혔다.

---

318) "Charter of Algiers,"(Algiers, Algeria, 10-25 October 1967), http://www.g77.org/doc/algier~1.htm.(검색일: 2021년 7월 29일)

319) Peter Willetts, *The Non-Aligned Movement: The Origins of a Third World Alliance* (London: Frances Pinter; New York: Nichols Pub. Co, 1978), p.33.

320) A. W. Singham and Shirley Hune, 1986, p.98.

"거의 모든 비동맹국의 독립에 진짜 현실적이고 긴급한 위협은 군사부분이 아니라 강대국의 경제력에서 온다.... 우리의 정치적 독립은 경제적 독립의 수준에 달려있다. 또한 본질적으로 경제개발은 정치적 독립에 의존한다. 이것들은 현대사회에서 상호연결된 것."[321]

다르에스살람 회의에서는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의 회원가입과 내전 중인 캄보디아의 대표권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알제리를 비롯한 급진세력과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라오스 등 보수세력이 대립하면서 남베트남과 캄보디아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루사카 정상회의로 연기된다.[322]

1970년 9월 제3차 비동맹 정상회의가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에서 개최되었다. 루사카 회의에서도 남반구(저개발국)와 북반구(선진산업국)의 대결구도 속에서 불평등한 국제경제구조의 개혁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었다. 마하라자디라자(Mahendra Bir Bikram Shah Dev) 네팔 국왕은 국제경제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지난 2차례의 UNCTAD는 대다수의 선진산업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관세와 무역 정책을 재조정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323]*

루사카에서의 경제선언(Declaration on non-alignment and economic progress)은 알제리 헌장의 연속선상에서 국제경제질서의 개혁을 촉구하면서 선진산업국과 불평등한 국제경제구조를 비판하고, 비동맹국가들에게 강한 결속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루사카 정상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비동맹국 간의 결속력을 강

---

321) Julius K. Nyerere, "Non-Alignment in the 1970s," Pol 8 4/15/70 to Pol 8 9/1/70, Box 1966, Folder Pol 8 4/29/70,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RG 59, NARA.(Jurgen Dinkel, 2019, p.139에서 재인용)

322) Robert A. Mortimer, 1984, p.30.

323) Mahendra Bir Bikram Shah Dev, "Significant Changes in the World",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21, 1970, p.492.(Jurgen Dinkel, 2019, p.137에서 재인용)

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유엔에서 비동맹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는 비동맹회의기구가 제도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설기구를 유지할 재정적 자원이 부족하고, 유엔에서의 활동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최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느슨한 방향으로 논의되었다.[324] 먼저 비동맹운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상회의와 외상회의를 3년 주기로 정례화하고, 정상회의 주최국의 국가수반을 차기 정상회의까지 비동맹운동의 의장국으로 임명하여 유엔을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비동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했다.

루사카 회의는 다르에르살람 예비회담에서 연기된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와 캄보디아 대표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를 옵저버를 받아들이고 캄보디아의 대표권은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비록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가 정식회원국이 되지는 못했지만, 당시 캄보디아의 집권세력인 친미성향의 론 놀 정부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알제리를 중심으로 한 급진파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했다.[325]

정치 분야에서는 포르투갈 식민지, 베트남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 등이 다뤄졌다. 기본적으로 루사카 회의는 반제국주의 투쟁과 민족해방운동, 민족자결권(외세의 내정간섭 반대)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규탄하고, 앙골라・모잠비크・가이나비사우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또한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철수를 촉구하고,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민들을 옹호하고,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강하게 규탄했다. 그리고 '평화, 독립, 개발, 협력과 국제관계의 민주화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peace, independence,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emocratis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은 "한국에 주둔 중인 외국군의 존재가 민족독립과 국제평화 및 안보에 위협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324) A. W. Singham and Shirley Hune, 1986, p.108.
325) Robert A. Mortimer, 1984, p.31.

북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326]

루사카 정상회의 이후 1971년 9월 제26차 유엔총회로 모인 비동맹국 정부대표들은 이듬해 8월 남미대륙에 있는 가이아나의 수도인 조지타운에서 비동맹 외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남미에서 주최하는 최초의 비동맹회의로서, 비동맹운동이 남미대륙에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다.[327]

1971년 11월에는 페루 리마에서 제2차 77그룹 회의가 열렸다. 1972년 4~5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예정된 제3차 UNCTAD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였다. 77그룹은 리마 회의에서 1967년 알제리 헌장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재확인하고 불평등한 국제경제질서의 개혁을 주장했지만, 과거만큼 높은 기대감을 보이지는 않았다.[328] 제3차 UNCTAD에서 저개발국들은 선진산업국들과의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UNCTAD에서의 지속적인 실패는 제3세계 국가들이 비동맹회의체에서 국제경제문제를 핵심의제로 다루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제3차 UNCTAD(산티아고)에서의 실패는 3달 후 조지타운 외상회의에서 급진적인 국가들이 정치적 승리를 거두는 데 기여했다.[329] 서구산업국가들에 대한 누적된 불만으로 인해 알제리 등 좌경화된 진보노선이 비동맹 운동 내에서 주류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1972년 8월 조지타운 비동맹 외상회의는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의 기치를 강화하면서, 친미정권에 맞서는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와 캄보디아의 시하누크 정부를 정식회원으로 승인했다.[330] 중국은 조지타운 외상회의에 축전을 보내서 비동맹운동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기도 했다.[331] 조지타운

---

326) "Lusaka Declaration on Peace, Independence,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emocratis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adopted by the Third Conference of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of Non-Aligned Countries, September 10, 1970. https://ris.org.in/documents-non-aligned-movement

327) Philippe Braillard and Mohammad-Reza Djalili, *The Third World and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Frances Pinter; Boulder, Colo.: Lynne Rienner Publishers), 1984, p.95.

328) Robert A. Mortimer, 1984, p.34~35.

329) Robert A. Mortimer, 1984, p.36.

330) 지양사 편집부 편, 1985, p.87.

외상회의의 선언문은 내용상 루사카 선언과 대동소이했으며, 미국의 침략정책을 강하게 규탄하는 등 강경노선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다.[332] 한국문제에 관해서도 한국문제에 대한 외세의 일체 내정간섭 반대하고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요구함으로써, 지난 루사카 정상회의와 동일하게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경노선에 반대하는 버마,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 일부 국가들은 회의의 진행과정과 결과가 컨센서스 정신에 위배됐다고 불만을 내비쳤다.[333]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동맹운동의 결속력과 응집력은 유엔에서 더욱 견고해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1972년 제27차 유엔총회는 비동맹 국가들의 응집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중동 국가들은 더욱 강경한 반이스라엘 결의를 채택할 수 잇었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서구 식민주의의 잔재와 인종차별주의를 규탄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천연자원의 영구적인 주권에 대한 투표에서 제3세계의 저개발 국가들은 만장일치를 보였으며,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비난에서도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334]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신생국들은 역내 이해관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에 충돌하는 정치경제 현안에서 거의 하나의 진영처럼 투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3세계 비동맹권의 협력은 이성적인 계산과 합리적 실용주의보다 서방선진국에 대한 분노와 피해의식 등 감정적인 호소에서 비롯된 집단정체성의 영향이 컸다.[335] 중화인민공화국은 초강대국 패권에 대한 반대, 반제국주의 혁명운동 지원, 제3세계와의 연대를 주제로 유엔 내 활동범위를 전방

---

331) 대한민국 외교문서, "비동맹 외상회의, 제4차. Georgetwon(가이아나) 1972.8.8-12. 전3권(V.3)," (F-0005-03), p.17.

332) 대한민국 외교문서, "비동맹 외상회의, 제4차. Georgetwon(가이아나) 1972.8.8-12. 전3권(V.3)," (F-0005-03), p.126.

333) 대한민국 외교문서, "비동맹 외상회의, 제4차. Georgetwon(가이아나) 1972.8.8-12. 전3권(V.3)," (F-0005-03), pp.227~228.

334) "1. Airgram A-128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All Diplomatic Posts," 『Untied Nations 1973 ~1976』, FRUS, 1969~1976, Volume E-14, Part 1.

335) “3. Telegram 140 From the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o the Department of State,” 『Untied Nations 1973 ~1976』, FRUS, 1969~1976, Volume E-14, Part 1.

위로 확장했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유지하면서, 소련에 맞서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제3세계를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했다.[336]

이제 유엔에서 양 진영간 냉전구도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단일한 지배적 특성이 아니었다. 데탕트가 진행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동서 진영간의 대립, 즉 냉전구도가 덜 두드러졌다.[337] 대신 유엔에서 수적 우위를 차지한 제3세계 비동맹권의 진영화는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의 충돌, 즉 불평등한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내재된 남북갈등을 표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3세계 비동맹권의 세력화는 유엔에서 본질적으로 국제사회의 기득권을 대표하는 미국의 지배적인 위치를 흔들 수밖에 없었다. 제28차 유엔총회에서 미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빈번하게 연출했다.[338] 북한에 대한 비동맹국들의 우호적인 태도는 한국문제 토의나 표결에서 미국과 남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다.

## 5. 북한의 비동맹외교와 한국문제

### 1 ) 국제혁명력량의 연대성 강화전략

북한은 정권수립기에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진영외교에 집중했다. 1955년 반둥회의 계기로 비동맹세력이 등장하면서 점차 진영외교를 탈피하여 외교적 다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까지 북한외교는 대부분 쿠바, 알제리 등 이념적으로 반미제국

---

336) "1. Airgram A-128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All Diplomatic Posts," 『Untied Nations 1973 ~1976』, FRUS, 1969~1976, Volume E-14, Part 1.

337) “3. Telegram 140 From the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o the Department of State,” 『Untied Nations 1973 ~1976』, FRUS, 1969~1976, Volume E-14, Part 1.

338) "109. Memorandum From the Director of Regional Affairs,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Moore)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Green)," 『United Nations 1969-1972』, FRUS, 1969~1976, Volume V.

주의 성향을 공유하는 국가에 한정되었다. 이런 한계로 인해 1970년 남한과의 수교국 격차는 82 대 34로 크게 벌어질 정도였다.[339] 국제적인 데탕트의 변화 속에서 북한은 실리외교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북한 비동맹 외교정책은 '3대 혁명력량'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1964년 2월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북조선 혁명역량, 남조선 혁명역량, 국제적 혁명역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340] 국제적 혁명역량은 반미반제투쟁에서의 공동전선을 펼치는 전세계의 진보적 세력을 의미했다. 김일성은 국제적 혁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미제국주의를 고립시키며 그 침략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억센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회주의 나라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을 적극 지지하며 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대외활동 기관들은 신생독립국가들, 중립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개선하며 이 나라 인민들에게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우리의 정당한 립장을 알려주고 그들의 지지를 얻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341]

1970년 11월 2일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도 데탕트의 복잡한 정세를 언급하면서 반미반제투쟁을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 인민들과의 연대성을 강조하고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조했다.[342] 또한 1970~1972년 정부, 외무성,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랍-이스라엘 분쟁, 인도차이나 문제(베트남,

---

339) 통계표: 남북한 수교 현황(연, 1948~2021)," 수교국/미수교국 현황,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77. (검색일: 2021년 7월 30일)

340) 김일성,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령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김일성 저작선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p.77~82.

341) 김일성, 1968, p.94.

342)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 저작선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p.492~502.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반제국주의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내면서 비동맹운동과 이념적, 정서적 공감을 드러냈다. 매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과 활발하게 정부 대표단을 교류하면서 비동맹외교에 공을 들였다.[343]

1970년대 전반기 북한의 비동맹외교는 큰 성공을 거두는데, 알제리, 쿠바 등 강경세력이 주도하는 비동맹운동의 좌경화 현상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당시 비동맹운동은 미소데탕트의 전개 속에서 핵전쟁 방지와 세계평화라는 비동맹운동의 중요한 동인을 상실했다.[344] 대신 2세대 지도자들[345]의 등장과 베트남전의 격화,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대만의 대표권 박탈), 미중화해, 미소 간 전략무기제한협정 체결, 제4차 중동전쟁의 발발 등 국제정세 속에서 경제개발문제(신식민주의)와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이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비동맹운동에서 제국주의와의 대결구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UNCTAD에서의 지속적인 좌절은 강경세력이 득세하는 배경이 되었다.

비동맹국가들은 남북대결구도에서 국제정세변화가 강대국 간의 카르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필요와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조직적인 협력과 세력화의 필요성을 느꼈다.[346] 알제리, 쿠바 등 강경세력은 반식민주의 민족해방투쟁에서 제3세계의 단결을 강조하며 비동맹운동이 유엔 내에서 미국을 포함한 제1세계에 과거보다

---

343)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일신사, 1997), p.135.

344) Lorenz M. Luthi, "Non-Alignment, 1961-74", in Sandra Bott, Jussi M. Hanhimaki, Janick Marina Schaufelbuehl and Marco Wyss (eds.), *Neutrality and Neutralism in the Global Cold War: Between or within the blocs?* (New York: Routledge, 2016), pp.98~99.

345) 초기 지도자 중에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를 제외하고 버마의 우 누(1962년 실각), 인도의 네루(1964년 사망),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1965년 실각), 가나의 은크루마(1966년 실각), 이집트의 나세르(1970년 사망)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신 2세대 지도자로서 쿠바의 카스트로, 알제리의 부메디엔(Houari Boumediene), 잠비아의 카운다(Kenneth Kaunda), 자메이카의 맨리(Michael Manley) 등이 비동맹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김태균, 이일청, “반둥 이후: 제3세계론의 쇠퇴와 남남협력의 정치세력화”, 『국제정치논총』, Vol.58, No.3, 2018, p.69.

346) Jurgen Dinkel, 2019, pp.139~142.

단호한 입장을 취하도록 만들었다. 알제리와 쿠바는 이미 1950년대부터 북한과 오랫동안 교류했던 국가들로서 이념적으로도 반미를 지향하는 북한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347] 자연스레 한국문제에 대한 비동맹운동의 입장도 북한에게 기울게 되었다.

1970년 루사카에서 열린 제3차 비동맹정상회의와 1972년 조지타운에서의 비동맹 외상회의는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최종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덕분에 1970년대 전반기 북한은 유엔의 한국문제 토의에서 비동맹운동을 강력한 우군으로 얻게 된다.

2 ) 1972~73년 비동맹회의와 한국문제 결의

1970년대 초반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과 충돌을 빚던 베트남, 캄보디아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유고슬라비아·이집트·쿠바·알제리 등 비동맹국가들과의 대표단 초청, 방문외교를 통해 한국문제에 대한 지지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1970년 제3차 비동맹정상회의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통일과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을 최종선언문에 넣으면서 한국문제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1972년 8월 8일 가이아나의 조지타운에서는 비동맹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비동맹 회원국들은 1970년 제3차 루사카 비동맹정상회의에서 논의했던 정치, 경제문제의 실현을 위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의 공동대응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외교문서에 의하면 북한은 회의 준비단계에서부터 가이아나의 중공대사관을 통해 한국문제에 대한 로비활동을 펼쳤다.[348] 남한 정부도 우호적인 회원국 대표단을 통해 방해공작에 나섰다.[349] 조지타운 비동맹외상회의는 한국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

347) 김국신, “북한의 대중동 및 아프리카 정책”, 양성철, 강성학 편,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95), p.362; 이영조, “북한의 대중남미 관계",『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95), pp.382~383.

348) 대한민국 외교문서, "비동맹 외상회의, 제4차. Georgetwon(가이아나) 1972.8.8-12. 전3권(V.2)," (F-0005-02), p.123.

349) 박승무, 송봉헌, 이광재, 홍승목 편,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72년』(서

다루지 않았지만, 지난 제3차 루사카 비동맹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한국문제에 대한 외세개입 중단과 외국군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최종선언문에 포함시켰다.[350] 이렇게 비동맹 회의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북한 지지여론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다.

1972년 9월 17일 김일성은 일본 마이니찌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동맹에 대한 북한의 대외정책을 다음과 같이 답했다.

> "우리는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국제주의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큰 나라, 작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친선과 협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 공화국 정부는 미제를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으며 모든 반제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유엔이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도움을 주려면 조선문제 토의를 연기할 것이 아니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여야 하며 유엔의 간판을 가지고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침략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지금 많은 나라들이 유엔에 대한 우리의 방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정당한 방침을 지지하여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밑에 유엔이 조만간에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351]

김일성의 인터뷰 내용은 북한이 전략적으로 비동맹국가들과의 연

---

울: 외교부, 2017), p.435.

350) 대한민국 외교문서, "비동맹 외상회의, 제4차. Georgetwon(가이아나) 1972.8.8-12." (F-0003-01), pp.220~221, 238; 대한민국 외교문서, "비동맹 정상회의, 제4차. Algiers(알제리) 1973.9.5-9. 전3권 V.1 기본대책," (F-0004-01), p.96.

351) 김일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선집』, 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pp.279~281.

대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토의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973년 신년사에서도 김일성은 “올해 당과 공화국 정부는 국제혁명력량과의 전투적 련대성을 강화하며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 우리 인민의 혁명 위업에 더욱 더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언급하며 비동맹외교의 활발한 전개를 예고했다.[352] 1973년 2월, 7월 김일성은 티토에게 지난 유엔총회에서의 지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양국관계가 발전하고, 한국문제를 포함한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협력해 나가기 바란다는 편지를 전했다.[353] 1973년 4월 북한은 과거 유엔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와도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토의에서 북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354] 1973년 내내 북한은 이스라엘의 침략행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을 비난하고, 캄보디아와 베트 등 인도차이나 반도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하는 여러 성명과 김일성의 연설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동맹운동과의 국제적 연대성을 표시하면서 한국문제에 대한 지지여론을 확대해 나갔다.[355]

1973년 9월 5일에는 알제리에서 제4차 비동맹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주최국 알제리에 대사관을 지닌 북한은 남한에 비해 참가국 대표단에 대한 로비에 유리한 입장이었으므로, 남한정부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모로코,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의 회원국들을 통해 북한에 대응하려고 했다.[356] 하지만 비동맹 운동이 좌경화가 뚜렷해지면서

---

352) 로동신문, 1973년 1월 1일.

353) "Message from the Presiden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Il Sung, to the President of the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Josip Broz Tito," July 07,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208658

354) ""Hungarian Embassy in Ethiopia, Telegram, 6 April 1973. Subject: DPRK-Ethiopian relations.," April 06,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5804

355) 1973년 한 해에만 공동 코뮤니케를 통해 유고슬라비아, 탄자니아, 소말리아, 적도기니, 마다가스카르, 우간다, 부룬디, 알제리, 콩고, 잠비아, 시리아, 이집트, 예멘, 칠레 등이 한국문제에 대한 북한의 정책을 지지를 표시했다.

많은 회원국들이 한국문제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대한민국 외교문서에 따르면 본래 미국의 영향력이 강했던 중남미 대륙의 비동맹국가들조차도 기존의 현상유지책을 변경하여 북한에 호응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357] 북한은 비동맹정상회의를 앞두고 8월 30일 외교부부장을 알제리에 파견하여 유엔군 철수 결의안 채택과 제28차 유엔총회를 위한 지지교섭과 국교수립 활동을 펼쳤다.[358] 반면 남한의 외교관들은 알제리로부터 숙소가 없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359]

알제리 비동맹 정상회의는 정치선언에서 "비동맹 정상회의는 한국인들이 취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고, 남한에 주둔 중인 외국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한국문제가 반드시 외세의 개입없이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발표했다.[360] 또한 한국문제에 관하여 제28차 유엔총회가 유엔기 아래 남한에 주둔 중인 모든 외국군의 철수와 UNCURK를 해체할 것을 결의해야 하며, 한국의 유엔회원가입은 단일국호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361] 이는 여러 나라의 반대와 보류에도 불구하고 주최국인 알제리가 직접 결의안을 제출하여 강력하게 밀어부친 결과였다.[362] 한국문제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서, 1973년 알제리 비동맹 회의가 한국문제에서 북한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북한은 비동맹운동 내 대표적인 친북국가인 알제리의 도움으로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356) 대한민국 외교문서, "비동맹 정상회의, 제4차. Algiers(알제리) 1973.9.5-9. 전 3권 V.1 기본대책," (F-0004-01), pp.102~103.

357) 대한민국 외교문서, "비동맹 정상회의, 제4차. Algiers(알제리) 1973.9.5-9. 전 3권 V.1 기본대책," (F-0004-01), pp.229~231.

358) 대한민국 외교문서, "비동맹 정상회의, 제4차. Algiers(알제리) 1973.9.5-9. 전 3권 V.2 우리입장 지지교섭," (F-0004-02), p.291.

359) 대한민국 외교문서, "비동맹 정상회의, 제4차. Algiers(알제리) 1973.9.5-9. 전 3권 V.2 우리입장 지지교섭," (F-0004-02), pp.288, 291.

360) "Documents of the Fourth Conference of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of Non-Aligned Countries," UNGA, A/9330, 1973, p.12.

361) "Documents of the Fourth Conference of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of Non-Aligned Countries," UNGA, A/9330, 1973, p.49.

362) 대한민국 외교문서, "비동맹 정상회의, 제4차. Algiers(알제리) 1973.9.5-9. 전 3권 V.3 회의경과," (F-0004-03), p.41.

비동맹 정상회의 마지막날인 9월 9일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창건 25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최근 북한의 외교적 성과를 자축하며 국제적 연대성 강화전략을 중요한 대외정책으로 재차 언급하는 모습을 보인다.[363] 김일성의 연설에서 반복되는 국제혁명력량과의 연대성 강화에 대한 언급은 그만큼 북한이 비동맹외교에 대해 쏟는 관심이 지대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당시 북한의 비동맹외교를 분석한 헝가리 외교문서에서도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민족국가들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켰으며, 1973년 한 해만 알제리, 유고슬라비아를 포함한 80여 개국에 대표단과 사절을 파견할 정도로 비동맹외교에 신경쓰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364] 이런 비동맹외교에서의 성과는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토의에서 미국의 방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

## 6. 북중공조의 파열

1970년대 초 대북 영향력과 북중동맹을 강화하려는 중공의 노력은 미중대화에서의 북중협력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동독 대사관은 북한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중소를 대등한 수준에서 대한다는 말과 다르게 1972년 내내 정책, 언론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선호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365] 소련 대사관도 1972년 북중관계가 훨씬 강화되었으며, 북중 간 대표단 교류가 크게 증가하고 대외정책에서도 상호 간의 협력이 진전되었다고 보았다.[366] 루마니아 외교문서는 북중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중대화를

363) 김일성,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창건 스물다섯돐 경축연회에서 한 연설,”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74』(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4), p.81.

364) "Hungarian Embassy in the DPRK, Report, 27 September 1973. Subject: The DPRK and the Non-Aligned Summit in Algiers," September 27,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004

365) "Theses On the Present State of Relations between DPRK and PRC," February 01,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677

366) "Note on a Conversation with USSR Embassy Counselor Comrade

통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367] UNCURK 문서도 베이징 소식통을 통해 북한은 소련보다 중국이 미국에 더 큰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UNCURK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두고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368] 북한은 평화공세를 통해 전쟁광이라는 이름표를 제거하고, 주한미군의 주둔해야 한다는 구실을 제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369] 북한은 전략적으로 미중대화를 지지하며, 중공의 지원을 받아 주한미군 철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중국이 진심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생각이 있는지, UNCURK를 비난하는 중국의 행동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점차 중국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1973년 3월 말 북한의 허담 외교부장은 그로미코 소련 외교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일본을 방문한 주은래가 일본 의원들 앞에서 중국이 아시아에서의 미군 철수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중국의 진정성과 선의에 대한 불신감을 표현했다.[370] 이는 중국이 한국의 통일에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독립성이 강화될 통일한국을 꺼린다는 소련의 분석과도 일치했다.[371] 북한은 민주주의적 기반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할 주한미군 철수 전에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372] 중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북한은 지지부

---

Denisov on 22 January 1973 in the USSR Embassy ," February 01,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678

367) "Telegram from Beijing to Bucharest, SECRET, Urgent, No. 059.139," February 13, 1973.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34

368) "Letters between Ahmet H. Ozbudun, C.V. Narasimhan, and Robert Muller," February 23,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7578

369) "Minutes of Conversation Taken on the Occasion of the Audience Granted by Comrade Nicolae Ceausescu to the Delegat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March 08,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38

370) Telegram from Pyongyang, No.061.119, Urgent, SECRET. April 11, 1973.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47

371) Note On a Conversation with Comrade Kurbatov, 1st Secretary of the USSR Embassy, on 26 March 1973 in the USSR Embassy. March 28,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638

진한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점차 회의적으로 변하게 된다.

북한은 남조선이 미국과 국내여론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남북대화에 임하고 있지만, 국내정치적 취약성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았다.[373] 이에 북한은 보다 공세적인 전략로 전환하게 된다. 1973년 4월 DMZ에서 군인 3명을 월남시키려는 도발을 일으키고,[374] 루마니아를 통해 미 상원과 하원에 북한 최고인민위원회의 편지를 전달하여 내정간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375][376] 동시에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미국의 내정간섭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지원을 구하는 최고인민회의의 편지를 보냈다.[377] 1973년 5월 북한은 WHO에 가입하는 외교적 성공을 통해 유엔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이 유엔총회의 한국문제에서 미국과 남한에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남한은 유엔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지연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378]

1973년 6월 23일 수세에 몰린 박정희 정부는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379]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며 반전을 시도했다. 북한은 즉각 두 개의 한국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조국통일 5대강

---

372) Telegram from Istanbul to Bucharest, No. 037032. February 19,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18

373) Telegram from Beirut, No.015.088, Urgent, SECRET. April 02,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45

374) Telegram from Pyongyang, No.061.150, Urgent, SECRET. April 23,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53

375) Telegram from the First Directorate to Washington, DC, No.01/04493. May 05,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56

376) 편지는 북한의 적극적인 제안들에 대한 남한의 비협조적인 태도, 미국의 방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남한군의 현대화 사업,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전쟁 도발행위로 초래된 남북대화의 교착상태를 비난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해체, 대남군사원조 중단, 군사훈련과 전쟁준비 및 도발행위 중지 등에 대한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377) 로동신문 4월 6일.

378) Letters between Shail Upadhya and C.V. Narasimhan. June 05,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7595

379) 주요내용: 남북 간의 내정불간섭, 불가침, 남북대화의 지속, 남북 유엔동시가입 제안, 북한대표의 한국문제 토의 참석 인정, 할슈타인 독트린의 폐기

령'[380]을 발표했다. 남북 간의 외교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1973년 8월말 북한은 김대중 납치사건을 구실로 박정희 정권을 강하게 비난하며 남북대화의 중단을 선언했다. 북한은 남북대화 중단 발표 하루 전에 외교관을 통해 베이징에 있는 미국 연락사무소에 접촉하기도 했다.[381] 미중대화와 보조를 맞춰 시작되었던 남북대화의 중단과 북한의 직접 대미접촉 시도는 북중공조의 파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973년 9월 20일 제28차 UNCURK가 스스로 해체를 건의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북한에 동조하는 35개국은 지난 회기 공산 측이 제출했던 친북결의안(Creation of favourable conditions to accelerate the independent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을 다시 상정했다. 이 결의안은 UNCURK 해체,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 외국군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382] 원래 목표는 미군 철수지만 표를 더 얻기 위해 외국군 철수라는 표현을 쓴 것이었다.[383] 북한 대표는 6.23선언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안이 분단을 고착화시킨다고 비난하고, 정전체제가 군비경쟁과 안보불안을 부추겨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평화협정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384] 반면 UNCURK 보고서에 근거한 친한결의안은 남북대화 지속, UNCURK 해체,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제안, (정전협정과 한국문제 당사자들의 협의가 있을 때까지) 정전협정의 준수를 주장했다.[385] 1973년 11월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던 상황에서 UNCURK 문서는 중국 소식통을 통해 현상유지를 추구하

---

380) 1. 남북한 군사적 긴장해소(군비경쟁 중단, 외국군 철수, 군축, 무기수입 중단, 평화조약 체결) 2. 남북교류의 확대 3. 각계각층이 모인 남북정치협상 개최 4. 연방제 통일안 제의 5.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반대

381) 홍석률,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5: 1970년대 UN에서의 UNCURK 해체 문제』(서울: 경인문화사, 2020), p.88.

382) "Creation of favorable conditions to accelerate the independent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UNGA, A/9145, 1973.

38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편, 2015, pp.78~79.

384) United Nations (eds.), *The Year of the United Nations, 1973* (New York: United Nations, 1976), pp.152~153.

385)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GA, A/9146, 1973.

는 중국은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한미군 철수나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에 대해 개의치 않으며,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UNCURK 해체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386]

UNCURK의 예상대로 미중의 적극적인 중재 속에서 제 28차 유엔총회는 만장일치로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UNCURK 해체에 합의하는 안을 공동으로 선언한다. 북한은 중국의 설득에 마지못해 타협안을 수용했다.[387] 중국은 미중대화에서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의 손을 들어서 북한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련은 합의문 발표가 미중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이며, 미중이 한반도 문제에서 대립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협상을 했다고 보았다.[388] 결과적으로 제28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에서 외세의 간섭이 없는 자주적인 평화통일은 선언적인 언급에 그치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내용도 빠지게 되었다. 미국의 의도대로 표결도 논쟁도 없었던 조용한 합의안 채택은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 7. 북한의 대중소 레버리지와 비동맹외교의 성과

### 1 ) 유엔 내 비동맹 세력의 응집력 강화와 미국의 고립

비동맹 국가들은 알제리에서의 제4차 비동맹정상회의의 영향으로 1973년 제28차 유엔총회에서 강경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동맹국가들이 유엔 활동의 대부분을 장악할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만약 비동맹이 단합된 행동으로 의견을 주장한다면 많은 분야에서 비동맹과 대립하는 미국이 유엔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무시당할 것을 염려했다.[389] 특히 비동맹 정상회의의 결의안이 회원국들에게

---

386) Letter, Ahmet H. Ozbudun to Ismat Kittani, "UNGA Prospects on the Korean Question?" November 06,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7571

387) 홍석률, 2012, p.357.

388) Telegram from New York to Bucharest, SECRET, No. 052312. November 26,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78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미국은 주한 외국군 철수를 요구하는 비동맹 정상회의 결의에 반하는 한국문제 결의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알제리를 비롯한 비동맹세력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혀야만 했다.[390]

미국은 비동맹 내부에서 강경노선에 회의적인 국가들도 상당수 있지만, 알제리가 차기 유엔총회 의장직을 맡게 되면서 제29차 유엔총회에서도 비동맹의 단결과 강경노선이 강화될 것을 우려했다.[391] 미국은 자신들의 필수적인 관심사가 강대국에 의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비동맹의 집단화에 핵심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면서 사안에 따라서 소련과 중국도 비동맹에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392] 그리고 서유럽과 중남미 국가들이 비동맹과 충돌하기를 꺼리면서 향후 미국이 고립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393] 미국의 걱정은 1974년 제6차 유엔특별총회를 통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1974년 4월 9일부터 5월 2일까지 제6차 유엔특별총회가 열렸다. 1973년 12월 17일 제28차 유엔총회에서 결의 3171호를 통해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 이전에 경제개발과 국제경제협력에 대한 특별총회를 열기로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394] 1974년 1월 30일 부메디엔

---

389) "9. Telegram 4973 From the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o the Department of State, November 21, 1973, 1600Z," 『Documents on the United Nations,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4, Part 1.

390) "9. Telegram 4973 From the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o the Department of State, November 21, 1973, 1600Z," 『Documents on the United Nations,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4, Part 1.

391) "10. Telegram 250151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All Diplomatic Posts, December 26, 1973, 2137Z," 『Documents on the United Nations,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4, Part 1.

392) "11. Abstract of a Research Study Prepared in the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Washington, January 15, 1974," 『Documents on the United Nations,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4, Part 1.

393) "11. Abstract of a Research Study Prepared in the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Washington, January 15, 1974," 『Documents on the United Nations,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4, Part 1.

394) 대한민국 외교문서, "유엔(UN)특별총회, 제6차. New York, 1974.4.9-5.2. 전

알제리 대통령이 비동맹회의 의장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천연자원과 경제개발(Raw Materials and Development)' 문제로 유엔특별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3월 19~21일 알제리에서 개최된 비동맹 조정위원회는 경제문제 일반과 유엔특별총회에 대한 공동대책 등을 논의했다. 조정위원회는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을 주장하고, 천연자원 통제 및 이해확보를 위한 모든 국유화 조치를 지지하며, 불평등 국제경제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신경제질서를 구축하고, 기타 원자재 생산국이 산유국(OPEC)처럼 선진산업국에게서 가격협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결정했다.[395] 비동맹국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77그룹은 국제경제질서를 재편성하는 선언을 통해 선진국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자 했으며, 3월 28일 선언문 초안을 유엔 회원국에 배부했다.[396] 미국은 세계경제체제의 과격한 변혁을 추구하는 신경제질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397]

제6차 유엔특별총회는 선진산업국과 저개발국(77그룹) 간의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국가들은 신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을 나열한 선언문 제4항에 크게 반발했다. 이 조항은 보상이나 국제법의 제한이 없는 '국유화' 권리, 과거 외국의 점령, 식민지배 또는 인종차별에 의한 천연자원의 착취와 고갈에 대한 보상(권), 모든 형태의 신식민주의의 대상에게 원조를 확대하는 것, 저개발국의 천연자원의 수출가격과 기타 수입품의 가격 간의 공정하고 평등한 관계 등을 규정했다.[398] 수적 우위를 앞세운 비동맹과 77그룹에 의해 "신경제질서 수립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과 이를 위한 행동프로그램(Programme of Action)이 채택되었다.[399] 이들은 전원합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양국가들에게

---

2권(V.1)," (H-0028-06), 1974, p.204.

395) 대한민국 외교문서, "1974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Algiers(알제리) 1974.3.19-21," (F-0005-04), 1974, pp.62, 155, 230.

396) 대한민국 외교문서, "유엔(UN)특별총회, 제6차. New York, 1974.4.9-5.2. 전 2권(V.1)," (H-0028-06), 1974, p.207.

397) 대한민국 외교문서, "유엔(UN)특별총회, 제6차. New York, 1974.4.9-5.2. 전 2권(V.1)," (H-0028-06), 1974, p.206.

398)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UNGA, A/9559, 1974, Supp. No.1.

협의된 문서를 철회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협박을 통해 최종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400] 소련과 중공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제6차 유엔특별총회의 결정을 환영했다.[401] 반면 미국은 민족자결권, 인종차별, 자원분배 등 비동맹이 제기한 여러 현안에서 현상유지자로 점점 고립되고 있었으며, 정책 간의 이견이 컸기 때문에 비동맹 및 저개발국과의 관계개선에 한계를 느꼈다.[402]

제6차 유엔특별총회의 강경노선은 제29차 유엔총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자원빈국인 저개발국들이 자원부국인 저개발국들에게 분개하면서 단결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고 보았지만, 여전히 비동맹은 자신들에게 우리한 서약을 강요하기 위해 응집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의 때는 아니라고 분석했다.[403] 비동맹의 지배력이 커지는 가운데 미 국정부는 유엔에서 과거 선도적 정책을 대신하여 피해최소화 전략을 취하되 한국문제를 포함하여 미국의 국익에 해로운 부분은 비동맹에 맞서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404]

1974년 8월 16일 알제리, 중공, 소련 등 32개국이 제29차 유엔총회 의제로 “유엔기 아래 남한에 주둔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라는 안건을 제출했다. 9월 3일 미국, 일본 영국 등 6개국도 “한국문제에 관한 제

---

399) "16. Airgram A-4568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All Diplomatic Posts, Washington, June 5, 1974," 『Documents on the United Nations,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4, Part 1.

400) "14. Telegram 104050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All Diplomatic Posts, May 17, 1974, 2304Z," 『Documents on the United Nations,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4, Part 1.

401) 대한민국 외교문서, "유엔(UN)특별총회, 제6차. New York, 1974.4.9-5.2. 전2권(V.2)," (H-0029-01), 1974, p.212.

402) "13. Telegram 99106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Certain Diplomatic Posts, May 13, 1974, 2237Z," 『Documents on the United Nations,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4, Part 1.

403) "17. Telegram 184584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All Diplomatic Posts, August 22, 1974, 2013Z," 『Documents on the United Nations,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4, Part 1.

404) "17. Telegram 184584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All Diplomatic Posts, August 22, 1974, 2013Z," 『Documents on the United Nations,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4, Part 1.

28차 유엔총회의 전원합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긴급한 필요"라는 안건을 제출했다. 미국 측 결의안은 1973년 유엔총회의 합의성명을 재확인하고, 남북대화를 촉진하고,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평화체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토의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두 안건은 총회 본 회의에 한국문제라는 이름으로 함께 상정되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 가운데 제1위원회에서 친북 결의안은 찬성 48, 반대 48, 기권 38인 찬반동수의 결과로 부결되었고, 미국이 지지하는 한국문제 결의안은 찬성 61, 반대 42, 기권 32로 채택되었다.[405] 제29차 유엔총회의 표결 결과는 비록 부결되었지만 비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지지세가 급증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406] 지역적으로 친북결의안은 지지표의 약 2/3가 아프리카와 아랍에서 나왔고, 미국 측 결의안은 서유럽과 라틴아메리카가 약 2/3을 차지했다.[407] 또한 표결 후 1974년 12월 21일 알제리의 Bouteflika 외무장관은 키신저 미 국무장관을 만나 유엔총회에서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유엔군 철수를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고 북미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408] 이는 한국문제에서 북한에 대한 비동맹의 지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 2 ) 북한의 자주성 강화와 비동맹 가입

북한은 중소 사이에서 자주성을 강화하면서 진영을 초월하여 왕성

---

405) "Question of Korea: Report of the First Committee", UNGA, A/9973, 1974.

406) 당시 UN회원국 138개국 중 74개국이 비동맹 회원국으로 전체 53.62% 비중을 차지했다. 총 70개 비동맹 회원국이 한국문제 친북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34, 반대 10, 기권 26의 분포를 보였다. 미국 측 결의안에는 71개국이 참여하여 찬성 15, 반대 28, 기권 28의 분포를 보였다. 직전 표결(1970년)에서 비동맹국가들은 UNCURK 해체안에 55개국 중 찬성 20, 반대, 14, 기권 21, 유엔군 철수안에 56개국 중 찬성 21, 반대 12, 기권 23의 분포였다.

407) 대한민국 외교문서,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 기본대책 1 - 1975.1-2월)," (H-0030-06), 1975, p.9.

408) "18. Memorandum of Conversation, New York, December 21, 1974, 10:30 a.m," 『Documents on the United Nations,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4, Part 1.

한 비동맹외교를 보여준다. 1974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쁠럭불가담(비동맹)에 강한 연대성을 표시했다.

> "작년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 쁠럭불가담 국가수뇌자 회의에서는 미제와 남조선 당국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 책동을 규탄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했다. 또한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올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409]

1974년 북한은 알제리, 유고슬라비아, 캄보디아, 시리아 등 비동맹 회원국에 대한 방문/초청 외교를 통해서 적극적인 비동맹 외교를 이어갔다. 북한 문헌은 1년 동안 9명의 국가수반을 포함해 약 90여개의 나라에서 여러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약 60여개의 국가에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기록한다.[410] 조선로동당 기관지 『근로자』 등 북한 문헌에서도 비동맹을 옹호하는 글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한다.

> "미제가 핵공갈과 딸라의 힘으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과거 힘에 의거하는 방법으로는 혁명력량, 진보적력량에 정면으로 대결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온 세계를 지배하려는 침략야망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411]

> 3대륙의 신생독립국가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나라들이 굳게 단합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에 의해 가장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412]

---

409) 로동신문 1974년 1월 1일.

410)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75』(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5), pp.503~541.

411) 김화천,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단호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해야 한다", 『근로자』 제381호, (1974.1), pp.61~62.

412) 화천,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단호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해야 한다",

-『근로자』 1974년 1월호

1974년 2월 22일 김일성은 유고슬라비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4차 비동맹정상회의와 비동맹운동에 대한 강한 지지의사를 밝혔다.[413] 3월 4일 부메디엔 알제리 총리의 방북 환영연설에서도 제4차 비동맹정상회의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조했다.[414] 『근로자』 3월호는 1973년 알제리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비동맹 정상회의의 성과에 찬사를 보내면서, 제6차 유엔특별총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이 대외관계 분야에서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하고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3세계 인민들의 단결을 이룩하는 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데 높이 평가합니다.[415]

> 오늘 제3세계나라 인민들 속에서는 정치적 자주권을 수호할 뿐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제국주의 독림회사들의 경제적 기반을 허물어버리며 빼앗긴 자기나라 자연부원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후아리 부메디엔 알제리 내각총리가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의장으로서 연료 및 원료문제를 포함한 국제경제관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총회 특별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기한 것은 제3세계 인민들의 이익을 희생시켜온 이 문제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제3세계 인민들을 제멋대로 억압하고 약탈하며 그들의 운명을 가지고 막후에서 흥정하고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세계무대

---

『근로자』 제381호, (1974.1), p.64.

413) 김일성, "유고슬라비아 신문 <웨체르니에노보스띠>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74년)』(평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1975), pp.23~25.

414) 김일성,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근로자』, 제383호, 1974, pp.2~9.

415) 김일성, 1974, p.3.

에서 발언권이 압박받던 인민들에게 있습니다.[416]

-『근로자』 1974년 3월호

김일성은 제6차 유엔특별총회 결과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것은 제3세계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력사무대에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뚜렷한 실례로 됩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417] 그리고 제29차 유엔총회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1974년 7~8월 거듭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비동맹 국가들과의 연대성을 표시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반제자주의 기치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세계 수많은 나라 혁명적 인민들이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고 완전한 민족적 독립과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 있다."[418],

-『근로자』 1974년 7월호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역량인 제3세계 인민들과 단결하여 전진하고 있는 우리 인민은 완전한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제3세계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그들과 굳게 손잡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419]

-『근로자』 1974년 8월호

이 외에도 북한 문헌은 김일성이 페루, 파나마, 세네갈 등 여러 대표단 담화나 언론 인터뷰에서 비동맹운동과의 연대성 강화를 언급하는

416) 김일성, 1974, p.5.
417) 조선중앙통신사 편, 1975, pp.822~823.
418) 홍성락,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와 양풍양화의 썩어빠진 풍조", 『근로자』 제387호, (1974.7), pp.59~60.
419) 손필, "제3세계인민들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 『근로자』 제388호, (1974.8), p.64.

발언들을 전보다 빈번하게 등장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로동신문에서도 비동맹운동을 언급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준다.[420]

제29차 유엔총회가 진행 중이던 10월 중 당 기관지인 『근로자』는 비동맹운동과의 연대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우리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고 있는 신흥세력인 제3세계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 열강들이 국제문제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던 낡은 질서를 깨뜨리고 모든 문제를 제3세계인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제3세계 인민들의 단결된 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421]
>
> -『근로자』1974년 10월호

1975년 신년사에서도 김일성은 "그리고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의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한다.[422] 또한 1975년 『근로자』1월호에서는 비동맹운동과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글을 실었다.

> 제3세계 인민들은 현시대 위력한 반제혁명역량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연대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제3세계와의 단결과 협조가 어느때보다 강화되고 있다. 1973년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 쁠럭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에서 조국통일 5대방침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결의를 채택하고, 유엔총회

---

420) 1972년까지만 해도 로동신문 기사제목에서 뿔럭불가담운동에 대한 언급은 많아도 1년에 5회 내외에 그쳤지만, 1973, 1974년에는 각각 10~20회, 1975년에는 무려 100회가 넘게 다뤄졌다.

421) 김일성, "빠루조선친서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근로자』 제390호, (1974.10), p.24.

422) 로동신문 1975년 1월 1일.

제28차회의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지지하고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는 결의를 채택한 점에서 국제적 연대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423]

-『근로자』 1975년 1월호

비동맹운동과 북한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상황 속에서 1975년 3월 17~19일 쿠바 하바나에서 열린 비동맹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975년 3월 1일 김일성은 티토에게 북한이 비동맹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고슬라비아가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424] 남한 정부는 대사관 주재 비동맹 회원국에 접촉하여 북한의 비동맹 가입과 한국문제 토의를 저지하려고 시도했다.[425] 하지만 북한은 주최국인 쿠바의 도움과 그동안 쌓아온 민족해방운동 및 비동맹과의 연대성 덕분에 회원가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다.[426] 결국 하바나 비동맹 조정위원회는 북한의 비동맹가입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한국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대로 북한의 정책을 지지하여 외세개입 반대, 주한미군 철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반대 입장을 밝힌다.[427]

하바나 비동맹 조정위원회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후 『근로자』 5, 6월호는 제3세계 반제투쟁과의 연대성을 강조하고, 제30차 유엔총회에서 비동맹 회원국들의 지원에 대한 기대감과 제7차 유엔특별총회를 준비하는 비동맹국가들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

423) 김건환,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을 위한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한 방침”, 『근로자』 제393호, (1975.1), p.58.

424) "Message from the Presid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Il Sung, to the President of the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Josip Broz Tito," March 01,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208685

425) 대한민국 외교문서, “1975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Havana(쿠바) 1975.3.17-19,” (F-0007-05), 1975, pp.13~186.

426) 대한민국 외교문서, “1975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Havana(쿠바) 1975.3.17-19,” (F-0007-05), 1975, pp.214~216.

427) 대한민국 외교문서, “1975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Havana(쿠바) 1975.3.17-19,” (F-0007-05), 1975, p.269,

제3세계 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 밑에서 정치적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함께 경제분야에서도 제국주의 식민지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만든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국제관계와 경제질서를 발전시켜나가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다.

제3세계에 침투했던 제국주의 독점자본은 해당 나라들의 단호한 조치로 연이어 몰수되거나 쫓겨나고 있다. 실로 제3세계가 벌이는 반제공동투쟁은 제국주의의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투쟁이다.[428]

-『근로자』 1975년 5월호

"우리는 지난날 그러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유엔군의 간판 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연대성을 표시하여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429]

"오늘 알제리를 비롯한 제3세계 인민들은 나라의 자연부원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약탈과 착취를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4년 원료 및 개발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제6차특별회의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제3세계 나라들의 이익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확립에 관한 선언과 행동강령을 채택했습니다. 오늘날 반제자주의 기치 밑에 알제리를 비롯한 제3세계가 벌리는 투쟁은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며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입니다."[430]

-『근로자』 1975년 6월호

---

428) 김정기,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심각한 경제위기", 『근로자』 제397호, (1975.5), p.64.

429) 김일성, "꼬스따리까사회당 위원장이며 꼬스뜨리까기자동맹 위원장인 꼬스따리까 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근로자』 제398호, (1975.6), p.5.

430) 김일성,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기관지 엘 무쟈히드 신문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근로자』 제398호, (1975.6), p.14.

남한은 북한이 비동맹운동에 단독으로 가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리마 비동맹 외상회의에 가입신청을 고려한다.[431] 1975년 6월 남한이 정식으로 비동맹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만, 알제리·쿠바·유고슬라비아가 남한의 가입신청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다.[432] 북한도 남한의 비동맹 가입신청은 자국의 비동맹 가입을 방해하기 위한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남한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433] 그러나 말레이시아와 라이베리아의 강력한 지원 덕분에 남한의 비동맹 가입신청안도 리마 회의에 안건으로 회부된다.[434] 리마 비동맹 외상회의에서는 비동맹 회원가입을 둘러싼 남북한 대표단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진다. 알제리, 유고, 쿠바 등은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이 통과된 북한의 가입안만을 먼저 처리하려고 시도하지만, 한국을 지지하는 인도, 가이아나, 라이베리아 등이 반대하면서 무산된다.[435]

1975년 8월 25~26일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남북한 회원가입안이 다뤄졌다. 북한의 회원가입안은 하바나 조정위원회의 권고대로 무난하게 통과했지만, 남한의 가입신청은 쿠바, 알제리, 월남의 강력한 반대로 부결되었다.[436] 북한 비동맹외교의 기념비적인 승리였으며, 제30차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토의를 앞둔 상황에서 매우 큰 호재라고 할 수 있었다.

### 3 ) 제30차 유엔총회와 국제적 연대성 강화의 성공적 결과

---

431) 대한민국 외교문서,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2),” (F-0006-02) , 1975, pp.14~17.

432) 대한민국 외교문서,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3),” (F-0006-03), 1975, pp.97, 114.

433) 대한민국 외교문서,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3),” (F-0006-03), 1975, pp.143~144.

434) 대한민국 외교문서,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3),” (F-0006-03), 1975, p.231.

435) 대한민국 외교문서,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6),” (F-0007-01), 1975, p.246.

436) 대한민국 외교문서,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6),” (F-0007-01), 1975, pp.286~288.

리마 비동맹 외상회의는 북한의 회원가입을 승인 후 한국문제 결의에서도 다시 한 번 북한에 대한 비동맹 운동의 연대성을 표시한다. 리마회의의 한국문제 결의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 분단상황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외세개입 없는 북한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안을 지지하면서 남한에 주둔 중인 모든 외국군 철수를 요구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437]

남한 외교부는 리마 비동맹 외상회의의 한국문제 선언문이 하바나 선언문과 다르게 '한국민'이 아닌 '북한'의 자주적인 평화통일 정책이라고 쓴 부분,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국 및 모든 외국군'을 '모든 외국군'으로 변경한 문구 등을 인용하면서 교묘하게 평화통일이 북한의 정책인 것처럼 호도하고 제30차 유엔총회 표결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한 술책이라고 분석했다.[438]

1975년 8~9월 『근로자』는 리마회의 결과를 지지하면서, 제7차 유엔특별총회에 대한 비동맹의 노력을 응원하는 글을 싣는다.

>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우리공화국대표단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원료에 관한 회의에 정식성원으로 참가했으며, 또한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앞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쁠럭불가담국가회의에 참가시키는 것에 대한 찬성권고안이 채택되었다. 우리는 쁠럭불가담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사회주의 나라인민들과 제3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인민들과 단결하여 반제반식민주의 공동투쟁을 펼칠 것이다.[439]
>
> -『근로자』 1975년 8월호

현시기 제3세계 인민들의 투쟁은 이미 쟁취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

---

437) 대한민국 외교문서,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V.7)," (F-0007-02), 1975, pp.43~45.

438) 대한민국 외교문서,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V.7)," (F-0007-02), 1975, pp.5~7.

439) 리종목, "쁠럭불가담운동은 반제혁명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운동이다", 『근로자』 제400호, (1975.8), p.63.

히 하는 것과 함께 완전한 경제적 해방을 이룩하며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집단적인 공동투쟁에로 심화발전하고 있습니다.[440]

세계무대에서 제3세계는 제국주의자들이 제멋대로 만든 낡은 국제경제질서르 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 제국주의 약탈에서 자원을 지키고 경제를 민족적 이익에 부합되게 개발하고 교류하기 위한 공동투쟁에 나섰다. 제4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원료 및 개발 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제6차 특별회의, 유엔해양법회의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원료에 관한 회의, 석유수출국가기구수뇌자회의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들에서 제3세계는 제국주의를 끝장내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정치적 단결과 함께 경제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가기 위해 실제적 대책들을 취했다.[441]

우리 당과 공화국은 제3세계와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 것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제3세계에 알려주고 그들의 민족경제건설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것을 국제주의적 의무로 간주한다.[442]

-『근로자』 1975년 9월호

1975년 10월 10일 제30차 유엔총회 회기 중 김일성은 당 창건 30돐을 기념한 연설문에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강조하면서 비동맹에 대한 북한외교의 변합없는 지원을 재확인했다.[443]

1975년 9월 1일 제7차 유엔특별총회가 '개발과 국제경제협력(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주제로 소집되었다. 미국은 제7차 유엔특별총회 직후에 제30차 유엔총회가 열리

440) 최기봉, "경제기술적협조는 제3세계나라들의 공동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 제401호, (1975.9), p.62.

441) 최기봉, "경제기술적협조는 제3세계나라들의 공동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 제401호, (1975.9), p.63.

442) 최기봉, 1975. p.64.

443) 김일성,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한 보고",『김일성 저작선집 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8), pp.230~236.

기 때문에, 비동맹 국가들의 단결이 강조되면서 이들과 대립하는 미국에 대한 반감은 한국문제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했다.[444] 제7차 유엔특별총회에서 신국제경질서를 둘러싼 비동맹과 미국의 갈등은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제7차 유엔특별총회는 1974년 제29차 유엔총회에서 결의 3343호를 통해 제6차 유엔특별총회의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면서 소집된 것이었다.[445] 미국은 제6차 유엔특별총회처럼 저개발국과 비동맹국의 강압적인 전술을 예방하기 위해 석유산유국과 소비국 간의 긴장에 주목할 필요를 느낀다.[446] 그러나 미국 정부는 가능한 비동맹과 대결하기보다는 협력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447] 제7차 유엔특별총회의 실패할 경우 제30차 유엔정기총회의 다른 정치적 사안에서 분위기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미국은 소련과 동유럽, 중공이 개발도상국들과 연대를 표명할 것이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제적 공약은 피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맡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448]

제7차 유엔특별총회는 77그룹과 미국의 갈등으로 난항을 거듭하면서 원래 예정일보다 나흘이 늦어진 9월 16일에야 간신히 합의하고 폐회할 수 있었다.[449]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결의

---

444)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CONSUL JERUSALEM: US Policy on Korea at the UN and the UN COMM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 Korea (2),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445)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devoted to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UNGA, A/RES/3343, 1974.

446) "21. Telegram 75525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Certain Diplomatic Posts, April 3, 1975, 2044Z," 『Documents on the United Nations,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4, Part 1.

447) "24. Telegram 191465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All Diplomatic Posts, August 13, 1975, 1419Z," 『Documents on the United Nations,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4, Part 1.

448) "27. Summary of Intelligence Memorandum 0253/75 Prepared in the Office of Current Intelligenc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ashington, August 27, 1975," 『Documents on the United Nations,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4, Part 1.

449) 대한민국 외교문서, "유엔특별총회, 제7차(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국제협력) New York, 1975.9.1-16," (H-0034-07), 1975, pp.54~55.

안"은 77그룹의 제안을 기초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산업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요구에 작년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양보하면서 전원합의에 성공했다.[450] 하지만 미국은 끝까지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반대 및 불만을 표시했다.[451] 제7차 유엔특별총회는 선·후진국 간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도 제6차 유엔특별총회처럼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7차 유엔총회는 다시 한 번 미국과 비동맹 간의 의견차와 대결구도를 확인시키 주었고, 이는 리마 외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제30차 유엔총회에서 미국에 맞서 비동맹과 연대하는 북한이 한국문제에서 지지표를 얻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었다.

북한은 제30차 유엔총회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비동맹과의 연대성을 과시하는 글을 발표했다.

> 세계 인구와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 있는 제3세계 인민들이 광범위한 반제통일전선을 이룩하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 때 그것은 전반적 국제정세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반제반미투쟁은 서로 지지하는 관계에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특권을 보존하기 위해 각 지역에 남아있는 종족적, 종교적 차이 등을 이용하여 이 지역 인민들을 호상 이간질하고 반목하게 만들려고 한다. 김일성 동지는 현재 제3세계 인민들의 반제공동투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쁠럭불가담운동이라고 가르치시고 그것을 강화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
>
>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들은 우리 당이 일관되게 견지하는 자주적인 대내외정책의 원칙들과 일치한다. 국제관계분야에서 영토와 주권에 대한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을 기본

---

450) 대한민국 외교문서, "유엔특별총회, 제7차(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국제협력) New York, 1975.9.1-16," (H-0034-07), 1975, p.56.

451) 미국은 첫째, 선진국이 1970년대말까지 GNP의 0.7%를 개발도상국 원조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 둘째, 새로 창출하는 특별인출권의 일부를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발원조에 연계하자는 조항에 반대했다. 대한민국 외교문서, "유엔특별총회, 제7차(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국제협력) New York, 1975.9.1-16," (H-0034-07), 1975, p.127.

내용으로 하는 뿔럭불가담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한다.[452]

-『근로자』1975년 10월호

제국주의 세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미제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로부터 큰 타격을 받고 급속히 쇠퇴했습니다. 현재 역사상 유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진 제국주의는 안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은 사회주의 나라들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강화하며 피압박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과 모든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지지하며 제3세계 나라들을 비롯해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사회주의역량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혁명하는 제3세계 신흥세력과 단결과 협조를 발전시키고 그들과 함께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침략과 약탈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제3세계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 것은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해 중요한 조건입니다.[453]

-『근로자』1975년 11월호

제30차 유엔총회에서 미국은 알제리의 리더십 약화, 미국의 회유정책 등의 요인을 들어 비동맹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회원국들이 내부 갈등으로 지난 회기와 같은 응집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지만,[454]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다수가 한국문제에서 북한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었다. 남아공을 제외한 사하라 이남의 회원국들은 미국의 결의안에 찬성 8, 반대 24, 기권 9표를 던졌고, 북한의 결의안에 찬성 27, 반

452) 김영남,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은 현시대 국제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혁명적인 전위부대이다", 『근로자』 제402호, (1975.10), pp.84~85.

453) 김일성,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근로자』 제403호, (1975.11), p.20~.21.

454) "36. Telegram 3652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All African Diplomatic Posts, January 7, 1976, 2128Z," 『Documents on the United Nations,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4, Part 1.

대 7, 기권 7표의 분포를 보였다.[455] 또한 1975년 유엔 회원국 142개국에 포함된 전체 79개 비동맹 회원국들은 한국문제에서 미국 측 결의안에 찬성 14, 반대 37, 기권 23표를 던졌고, 북한 측 결의안에 찬성 37, 반대 6, 기권 31표의 분포를 보였다.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결의 3390B호가 총 투표수 143표 중 찬성 54, 반대 43, 기권 42표로 채택된 것을 고려하면 표결에서 비동맹국들의 지지가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 북한의 남북대화 중단과 공세적 전환

1973년 말 북중공조가 파열을 일으키면서 북한은 미중대화와 공명을 이뤘던 남북대화를 중단한다. 한반도에서는 남북대화 중단 후 남북이 상호 비방을 재개하면서 다시 데탕트 이전의 남북갈등이 재현되었다.[456] 남북 간의 긴장관계는 데탕트기 억눌렸던 북한 군부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었다.[457] 이는 중국과 별개로 NLL에 대한 불법침입을 시도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로 이어졌다.[458] 1973년 12월 1일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서해 5도 주변이 북측의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NLL을 항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또한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불특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했다.[459]

---

455) "36. Telegram 3652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All African Diplomatic Posts, January 7, 1976, 2128Z," 『Documents on the United Nations,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4, Part 1.

456)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SECRET, Regular, No. 061.497." November 03,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76

457)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SECRET, No. 061.465, Urgent." November 15,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77

458)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SECRET, No. 61.537." December 06, 1973.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80

459) "Memorandum for General Scowcroft, through W.R. Smyser, from John A. Froebe Jr., “Proposed WSAG Meeting on Korean Situation"," December 03, 1973.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15

미국은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합의가 발표된지 1주일도 안 되서 북한이 도발행위를 일으킨 것이 유엔총회 결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로 보았다.[460] 남한은 북한의 NLL 도발이 무력충돌을 유발시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유엔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461] 북한의 인위적인 군사적 긴장고조는 1960년대 말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청와대 습격사건, EC-121 격추사건 등 모험주의 전략을 펼치면서 동맹관계를 견인했던 과거를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1974~1975년 북한은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면서 직접적인 대미접촉을 시도하는 등 독자적으로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게 된다.

5 ) 북한의 중립정책과 대중·소 레버리지

데탕트기 북한은 북중관계와 북소관계가 서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60년대 북한은 자의반 타의반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어느 한 쪽과 척을 지면서 많은 손해를 봐야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0년 북한은 중국에게 관계정상화의 조건으로 내정불간섭 및 북소관계 불간섭을 내걸었다.[462] 중국은 북한의 조건을 수용했고, 북소관계가 유지하는 가운데 북중관계가 개선되었다. 그 결과 북중소 삼각관계에서 북한 중심의 중소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1970년대 전반기 북한은 공식적으로 중국이나 소련에 대한 비난을 금지하면서, 소련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

---

460) "Memorandum for Secretary Kissinger from Richard H. Solomon, “The Korean Situationand the China Element,” December 3,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14

461) 대한민국 외교문서, “북한의 서해안 5개 도서 접속수역 침범 사건, 1973.11.19-12.19. 전2권 V.1 기본문서,” (G-0034-06), p.72.

462) "On the Visit of a PRP Party and Parliamentary Delegation to the DPRK." July 16,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676

많은 관심을 쏟는 데 이것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회적으로 북소 관계를 유지하기 방법이었다.[463] 하지만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주재한 소련과 동구권 대사들의 회의내용은 북한의 대중 편향에 대한 우려를 잘 보여준다. 이들은 1973년 제24차 소련공산당 당대회와 제10차 중국공산당 당대회를 대하는 북한의 온도차, 수많은 중국 관련 출판물의 발간과 비교되는 소련 관련 출판물의 숫자 등을 근거로 북한의 대중편향성을 제시했다.[464] 북한으로서는 친소성향 공산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원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중국 관련 출판물에서 소련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과 공격은 모두 삭제하는 등 중소 사이에서 균형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었다.[465] 그러나 1973년 10월 불가리아 공산당의 Todor Zhivkov 제1서기는 김일성에게 직접 중소 사이에서 북한의 중립은 중국의 반소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승인이나 다름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북중과계에 불만을 표시했다.[466] 김일성은 Zhivkov에게 북한이 중국의 여러 정책을 반대하고, 중립정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강하게 해명했지만, 동시에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맞댄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467] 북한 주재 북베트남 대사도 동독대사와의 대화에서 북한이 안전한 배후지를 얻고 군사적 원조를 얻기 위해 친중노선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468] 실제로 북한은 중국이 민감하게 반

---

463) "On the Visit of a PRP Party and Parliamentary Delegation to the DPRK." July 16,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676

464) "Note On a Meeting in the Embassy of Czechoslovakia on 5 September 1973." September 13,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674

465) "Note On a Meeting in the Embassy of Czechoslovakia on 5 September 1973." September 13,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674

466) "Memorandum on the Conversation between Kim Il Sung and Todor Zhivkov." October 30,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533

467) "Memorandum on the Conversation between Kim Il Sung and Todor Zhivkov." October 30,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533

응할 수 있는 코메콘과 아시아집단안보에 관한 소련의 제안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1973년 10월 루마니아 외교문서는 소련이 북소관계에서 사상 최저로 떨어진 대표단 교류, 북한의 소극적인 반응에 불만스러워 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북한의 대소정책을 재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는 소련 외교관과의 대화문을 싣고 있다.[469] 이처럼 북한의 균형전략은 한국문제에서 중소의 지지를 얻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1973년 제28차 유엔총회 당시 UNCURK는 중소가 극한 대립 속에서도 한국문제에서만큼은 북한의 존재로 인해 쉽지 않은 휴전을 유지한다고 이야기했다.[470]

6 ) 미국의 유엔군사령부 해체 협상안과 북중소 삼각관계의 작용

1974년 1월호 조선로동당 기관지 『근로자』는 "유엔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을 전적으로 찬동하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를 결정한 조건에서 미제는 자기의 침략군대를 남조선에 남겨둘 아무런 이유와 구실도 없다."는 내용을 실으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향한 북한의 변함없는 대외정책 목표를 보여준다.[471]

1974년 미국은 대한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유엔군사령부의 지속가능성, 정전협정의 새로운 대안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472] 1974년 2월 미 국가안보회의의 수석회의는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군

468) "Conversation with the Ambassador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DRV)." OCTOBER 31, 197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277

469) "Telegram from Pyongyang, SECRET, No.061487, Urgent. October 30," 1973.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75

470) "Letters between Ahmet H. Ozbudun and Ismat Kittani. September 26," 1973.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7564

471) 김주영, "위대한 주체사상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적 번영을 담보하는 불멸의 가치", 『근로자』 제381호, (1974.1), p.58.

472) "248.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190, Washington, December 31," 『Documents on East and Southeast Ais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2.

사령부의 해체가 한국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며,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중국과 소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473] 미국은 NSSM190(미국의 대한정책)에서 3가지 협상안을 제시하지만, W. E. Colby CIA국장은 북한이 어느 협상안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결국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중국의 의지와 능력이 결정적이라고 분석했다.[474]

1974년 초 호주에 이어서 2월에 영국도 미국에게 몇 주 내로 북한에 무역사무소 개설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자, 미국은 공산권에서 남한에 대한 상호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수교국만 늘어나는 것을 보며 이것이 한국문제에 대한 북한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475] 1974년 3월 20일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남한의 김동주 외무장관과 만났다. 미국정부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남한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재 마련을 협상의 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476] 앞선 박정희 대통령과 Habib 주한 미국대사의 대화에서 박 대통령은 유엔군사령부 해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하길 바란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477] 미국은 유엔군사령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을

---

473) "Memorandum from W. R. Smyser, Richard H. Solomon to Secretary Kissinger: NSSM 190: Diplomatic Initiatives in Korea. SRG Meeting Korea 2/19/74.," SRG Meeting Korea 2. 19. 74.,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474) "Memorandum from W. E. Colby to Gerald R. Ford: Diplomatic Initiatives in Korea: NSSM-190," NSC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Staff Files Box 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475) "Memorandum from W. R. Smeyser to Secretary Kissinger: U.K. Plans to Expand Relations with North Korea.", Korea (3),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476) "Memorandum from W. R. Smeyser to Secretary Kissinger: Your meeting with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Kim on March 20, 1974.," Korea (3),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477) "Memorandum from EA-robert S. Ingersoll to the Secretary: Your meeting with ROK Foreign Minister Kim Wednesday, March 20.," Korea (3),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감축할 계획이 없으며, 중국과의 논의를 통해 한국문제에 대한 원만한 타협이 중요하다고 보았다.[478] Richard H. Solomon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 키신저에게 보내는 전보에서는 중국이 지난 제28차 유엔총회의 UNCURK 해체처럼 유엔군사령부 해체에서도 한국문제의 원만한 관리를 위해 협조해주길 기대하는 미 정책당국자들의 심리가 나타난다.[479] 키신저는 김동주 외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 협상안의 핵심은 정전협정의 지속과 미중의 효과적인 개입이라는 점을 전했다.[480]

미국은 NSSM 190을 검토한 결과(NSDM 251)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협상안을 정했다.

> 첫재, 미군과 한국군 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대체하여 정전협정의 서명자가 된다.
>
> 둘째, 단기적으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인정한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안정되면 궁극적으로 미군을 감축하고 철수하겠다.
>
> 셋째, 중소가 남한에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도 북한과의 접촉을 확대한다.
>
> 넷째, 남북 간의 불가침협정을 체결한다.
>
> 다섯째,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안보협정에 대한 합의된 패키지를 보증한다.
>
> 여섯째, 정전협정에서 다른 변화를 피한다.[481]

---

478) “Memorandum from EA-robert S. Ingersoll to the Secretary: Your meeting with ROK Foreign Minister Kim Wednesday, March 20.,” Korea (3),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479) "77. Memorandum From Richard H. Solomo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Secretary of State Kissinger," 『Chin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XVIII.

480)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RUEHCK/AMEMBASSY SEOUL: Discussions with ROKG on UN Command.,” NSDM 251, Richard Nixon Library.

481) “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251 to the Secretary of Defense: Termination of the U.N. Command in Korea.,” Korea (4),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미국은 위와 같이 현상유지를 강조하는 협상안을 기초로 '서울-평양'을 중심으로 '강대국들(미중일소)'이 보조하는 투트랙 협상전략을 제시했다. 이 협상안은 실질적으로 소련과 일본은 협상과정에 대한 정보는 제공받지만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과도기에 주한미군의 변화는 없도록 했다.[482] 한편 1974년 3월 20일 김동주 외무장관은 키신저 미 국무장관에게 협상의 시작단계에서는 미중, 미소채널이 주채널이 되어야 한다고 협상전략의 수정을 제시했다.[483] 그러나 미국은 협상의 주된 채널은 남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484]

1974년 3월 24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의 결정사항을 루마니아 대사관에 알렸다. 북한은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미국과의 직접접촉이 필요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북미 간의 직접접촉을 요청하며 북미평화조약 초안을 담은 서한을 채택해 미국 의회에 보냈다.[485][486] 허담 북한 외교부장은 루마니아 대사에게 북한의 대미접촉시도는 김일성의 지도 하에 북한 스스로 조국통일에 유리한 토대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487] 허담은

482) "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251 to the Secretary of Defense: Termination of the U.N. Command in Korea.," Korea (4),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483)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Discussion with FONMIN ON UN Command.," NSDM 251, Richard Nixon Library.

484) "Memorandum from W. R. Smyser to Secretary Kissinger: Temination of the U.N. Command in Korea.," NSDM 251, Richard Nixon Library.

485)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SECRET, Urgent, No. 060.127." March 24, 1974.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84

486) 북한이 제안한 북미평화협정 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미는 긴장과 무력충돌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며, 서로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둘째, 북미는 한국 영내에서 군비경쟁을 중단하고 외부에서 무기와 군사장비의 반입을 금지하기로 약속한다. 셋째, 남한에 주둔 중인 외국군이 보유한 유엔의 위임은 폐지되어야만 하며, 외국군은 가능한 빨리 한국에서 철수해야만 한다. 넷째,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이후 남한은 더 이상 군사기지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위한 작전의 장으로 변모해서도 안 된다.

487)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SECRET, Urgent, No.

만약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박정희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고, 만약 거절한다면 세계 여론 앞에서 스스로 비협조적인 입장을 노출하게 만들 것이라고 북한의 노림수를 말했다.[488]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북미평화협정 제안이 지난 1월 18일 남한이 불가침 협정을 제안하면서 잡은 정치적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고, 남한에서 미국의 군사적·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489] 미국은 북한의 직접적인 대미접촉은 중국의 대남접촉이 상호적인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유엔대표부는 서한을 미 의회에 전달해달라는 북한의 요청을 묵살했다.[490] 반면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북한이 '미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중대한 노력이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모든 외국군대가 남조선에서 철수'하는 것이 조선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는 인식에 동조했다.[491] 인민일보의 공식반응은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북중공조의 파열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여전히 북한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974년 1월 30일 르완다 주재 소련대사는 한국대사와의 대화에서 소련은 남북한이 동서독처럼 분단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중국의 대북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남북대화가 어떠한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한국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밝혔다.[492] 4월 4일 호주 주재 소련대사도 한국대사와의 대화에서

---

060.180." April 22, 1974.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85

488)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SECRET, Urgent, No. 060.180." April 22, 1974.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85

489) "Korea: DPRK proposed direct peace talks with United Sates," Korea (4),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490) "77. Memorandum From Richard H. Solomo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Secretary of State Kissinger," 『Chin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XVIII.

491) "『인민일보』 1974년 3월 28일, 5면,"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 사료집 66: 인민일보(1973.1.14 ~ 1985.10.26)』,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9), pp.70~71.

소련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반대하고, 북한이 소련과 적대적인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친중노선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남한과의 외교관계에는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493] 6월 24~27일 소련을 포함한 8개 사회주의 정당의 국제부 회의가 마오이즘에 대한 투쟁을 주제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Oleg Rakhmanin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제1부부장은 북한의 친중정책등을 강하게 비판하지만, 그래도 북한과 협력하는 것이 소련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494] 소련은 북중관계를 견제하면서 자신의 현상유지책에 부합하는 대남접촉에도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는 자칫 소련이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 북소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었다.

1974년 5월 28일 미국은 Habib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남한 정부에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으며, 현재 한국문제 합의를 위해 중국과 협의 중이라고 알렸다.[495] 미국은 여전히 제29차 유엔총회에서 중국과 유엔군사령부 해체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496] 하지만 미국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한국문제에서 중국의 대북지원은 강경한 어조로 나타났다. 1974년 6월 25일 『인민일보』는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기사에서 지난해 6월 23일 발표된 북한의 조국통일 5대강령과 올

492) "Meeting between Minister Hong and the Soviet Ambassador to Rwanda." January 30, 1974.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582

493) "Report of Meeting with the Soviet Diplomat (Summary)." April 04, 1974.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583

494) "Note from the Eighth Meeting of the Deputy Heads of the CC International Departments of Eight Parties in Ulaanbaatar devoted to the Struggle with Maoism," June, 1974.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240

495) "254. Memorandum of Conversation, Washington, May 28, 1974, 2:05-3:05 p.m." 『Documents on East and Southeast Ais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2.

496) "254. Memorandum of Conversation, Washington, May 28, 1974, 2:05-3:05 p.m." 『Documents on East and Southeast Ais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2..

해 3월 북한 최고인민위원회가 미 의회에 보낸 편지를 지지하면서, 미국에게 주한미군의 철수와 대한 군사원조 중단을 촉구했다.[497] 남북공동성명 2주년인 1974년 7월 4일에도 『인민일보』는 반복해서 한반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은 즉시 철수하고 남한에 대한 일체 군사원조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498] 이런 반응은 중국과의 원만한 합의를 원하던 미국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었다.

김일성은 제29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1974년 6월 수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미국이 우리의 정당한 제안을 거부한다면 세계 인민들 앞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평화의 원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고 주장했다.[499]

1974년 7월 루마니아 외교문서는 "북한이 중소분쟁 속에서 가능한 독자노선을 강화하고, 중소갈등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북한은 한반도의 남과 북에 정당하고 비적대적인 정책을 펼치는 자본주의 국가들을 포함해서 가능한 많은 국가들과 친선우호관계를 수립"하며 "현재 북한이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는 대략 70개국에 달했고 경제교류를 하는 국가는 80개국을 넘어서고 있다."고 평가했다.[500] 비동맹외교의 성과를 통해 향상된 북한의 외교적 위상과 자주성은 북중소 삼각관계에서 북한의 대중소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요소였다.

1974년 7월 30일~8월 4일 루마니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을 공식 방문했다. 허담 북한 외교부장은 미 의회에 최고인민회의의 편지를 전달

---

497) "『인민일보』 1974년 6월 25일, 1면,"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 사료집 66: 인민일보(1973.1.14 ~ 1985.10.26)』,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9), pp.76~78.

498) "『인민일보』 1974년 7월 4일, 1면,"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 사료집 66: 인민일보(1973.1.14 ~ 1985.10.26)』,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9), pp.78~80.

499) 김일성, "수단정부기관지 알 싸하파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근로자』, 제385호, (1974.6), p.5.

500) "The Foreign Polic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its Position towards the Main International Matters." July 18, 1974.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87

해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한국문제에 대해 논의했다.[501] 허담은 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남한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엔군 철수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미군철수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적으로 큰 성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502]

1974년 7월 31일 미국은 중국과 NDSM 251의 협상안을 가지고 접촉했다. 중국은 미국의 제안이 빈껍데기나 다름없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이용해서 남북불가침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하라는 것으로서 사실상 한반도 통일을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503] 중국이 "한국의 분단을 영속화하는 어떤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응했지만, 미국은 단순히 평양을 만족시키기 위한 원칙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였다.[504] 미국은 중국이 주둔미군의 임시주둔과 남북불가침협정을 거부했지만, 핵심내용인 정전협정의 지속에 대해 추가적인 협상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하고 2개항을 제외한 단축된 협상안을 다시 제시하기로 결정한다.[505] 그리고 조용한 합의 및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제29차 유엔총회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토의를 촉발시키지 않

---

501) "The Official Visit Paid b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Romania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ugust 19, 1974,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88

502) "The Official Visit Paid b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Romania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ugust 19, 1974,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88

503)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USLO Peking: Korea," Peoples Republic of China - State Department Telegrams From SECSTATE - NODIS (1),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04)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RUMJSL/AMEMBASSY Seoul: Furthr Response to PRC on UNC Proposal," Korea - State Department Telegrams From SECSTATE - NODIS (1),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05)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Furthr Response to PRC on UNC Proposal," Korea - State Department Telegrams From SECSTATE - NODIS (1),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도록 북한의 지지자들을 자제시켜달라고 요청하기로 한다.[506]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북한과의 직접 접촉은 피했다. 중국이 북한을 의식하여 대남접촉을 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남한이 외교적으로 배제되거나 고립되는 것을 꺼렸다. 1974년 9월 주인도네시아 북한외교관들이 한국어에 능통한 현지 미국대사관 직원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지만, 미 대사관 직원은 즉시 자리를 피하면서 북한외교관들과의 대화를 거부했다.[507]

1974년 8월 16일 알제리, 중국, 소련을 포함한 32개국이 "유엔기 아래 남한에 주둔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A/9703)를 총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9월 3일 미국, 영국, 일본을 포함한 6개국은 "한국문제에 관한 제28차 유엔총회의 전원합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총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제29차 유엔총회 운영위원회는 두 안건을 한국문제라는 대명제 아래 결합하여 총회 의제로 상정할 것을 권고했다. 9월 21일 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권고를 만장일치로 수용하고, 9월 25일 남북한 대표단의 한국문제 토의 참여를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제29차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토의가 안건으로 제출된 가운데 조선로동당 당 기관지 『근로자』는 "박정희도당은 남북공동성명에 서명하자마자 이 몇 장의 성명에 우리의 운명을 점칠 수 없다고 하면서 공동성명에 명시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을 노골적으로 유린하며 배신하는 길에 들어섰다."[508]고 남한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1974년 9월 9일 중국공산당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국 건국 26주년을 기념하는 기사에서 북한의 통일정책을

---

506)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Furthr Response to PRC on UNC Proposal," Korea - State Department Telegrams From SECSTATE - NODIS (1),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07) "Memorandum from the Situation Room to Henry A. Kissinger: Additional Information items, September 10, 1974," Presidential Daily Briefing, September 10, 1974,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08) 김창형, "남조선괴뢰도당은 극악무도한 파쑈교형리이며 천추에 용서못할 매국배족의 무리이다", 『근로자』 제389호, (1974.9), pp.50~51.

옹호하고 미국이 “조건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지해야 하고 반드시 그들 전부의 침략군대와 무기장비들을 남조선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09] 또한 10월 3일 제29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중국대표는 “미국 등이 제출한 조선문제에 관한 비망록과 결의초안에서 유엔의 기치를 든 미국군대는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상식에 대한 풍자이다. 수만 명의 미국군대의 존재가 남조선 통치자에 대하여 담을 키워주는 작용조차 일으키지 않는단 말인가?..... 이번 유엔대회가 마땅히 알제리 등이 제출한, 유엔의 명의로 남조선에 주둔한 일체 외국군대를 모두 철수시킬 데 관한 제안을 토론하고 통과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510]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중국의 공개적인 지지발언은 미국의 기대처럼 제29차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에 대한 조용한 합의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1974년 9월 동독 외교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동독대표단에게 주한미군철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유엔총회를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동독이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511] 북한의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우방국들을 통해 한국문제 결의안을 제출하자 중국과의 조용한 협상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유엔총회에서의 대결을 준비하기 시작한다.[512] 10월 2일 키신저는 뉴욕에서 차오관화 중국 외교부부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자신들이 미국의 제안을 북한에 전달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고, 이미 유엔총회에

509) “『인민일보』 1974년 9월 9일, 1면,“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 사료집 66: 인민일보(1973.1.14 ~ 1985.10.26)』,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9), pp.83~85.

510) “『인민일보』 1974년 10월 3일, 2면,”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 사료집 66: 인민일보(1973.1.14 ~ 1985.10.26)』,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9), pp.88~90.

511) "Information about a Visit by Comrades Gericke and Stritzke to the DPRK." September 09, 1974.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279

512)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RUMJSL/AMEMBASSY Seoul: Statement to PRC on Korea and UNC,” Peoples Republic of China - State Department Telegrams From SECSTATE - NODIS (1),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안건에 상정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견해를 존중해야만 한다고 답했다.[513] 키신저는 지속적으로 협상가능성을 타진하지만 차오관화는 미국과 북한의 견해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514] 중국 측은 유엔총회에서의 대결은 중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북한의 입장과 북중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한다.[515] 미국은 중국이 유엔군사령부와 정전협정에 대한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제29차 유엔총회에서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표결을 통해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마음먹는다.[516] 미국은 중국의 실망스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한국문제에서 충분히 여유롭게 표결을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517]

1974년 10월 제29차 유엔총회 회기 중 브레즈네르 소련 서기장은 주북한 소련대사를 통해 김일성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듭 김일성을 소련에 초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518] 김일성은 소련대사에게 브레즈네프 서기장의 초대에 감사를 표하면서 자신이 지금 바로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긴장된 정세 때문이라고 답했다.[519]

---

513) “87. Memorandum of Conversation,” 『Chin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XVIII.

514) “87. Memorandum of Conversation,” 『Chin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XVIII.

515) “87. Memorandum of Conversation,” 『Chin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XVIII.

516)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RuMJSL/AMEMBA SSY Seoul: PRC Views on UNC,” Peoples Republic of China - State Department Telegrams From SECSTATE - NODIS (1),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17)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Korean Question at UN, October 6, 1974,” Korea - State Department Telegrams To SECSTATE - NODIS (1),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18) "Conversation with Comrade Pimenov, Counselor at USSR Embassy, on 29 October 1974." November 04, 1974.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281

519) "Conversation with Comrade Pimenov, Counselor at USSR Embassy, on 29 October 1974." November 04, 1974.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281

1974년 10월 7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한국문제에 대한 친한 결의안(A/C.1/ L.676)과 친북결의안(A/C.1/L.677)이 제출되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28개국이 제출한 친한 결의안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A/C.1/L.676) 유엔총회는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한국의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달성을 향한 진보가 이뤄지기를 바라며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성명을 공표한 것과 남북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남북한 모두의 의사를 선언한 것에 대한 만족을 상기하며

그러나 한국의 긴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자각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향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서 유엔이 한반도에서 이 목적의 달성을 보장할 지속적인 책임을 지닌다는 것을 인정하며

첫째, 1973년 11월 2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전원합의문에서 나타난 유엔총회 회원국들의 희망을 재차 확인하고, 남북한이 한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남북대화를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안전보장이사회가, 정전협정을 지속적으로 고수하는 것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완전히 유지하는 것을 보장할 필요성을 명심하고, 적절한 때에 직접당사자들과 협의 하에 한국문제에서 유엔군사령부의 미래를 포함한 안보리의 관할에 속하는 측면들을 심의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현한다.[520]

알제리, 중국, 소련 등 42개국이 공동으로 제출한 친북결의안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

520) "Question of Korea: urgent need to implement fully the consensus of the 28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Korean question and to maintai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UNGA, A/C.1/L.676, 1974.

(A/C.1/L.677) 유엔총회는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 29년이 지나고, 한국에서 정전이 실현된 지 2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의 통일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1973년 11월 28일 제28차 유엔총회가 1972년 7월 4일 공동성명의 정신에서 남북한이 남북대화를 지속하고, 한국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기 바라는 희망을 표현하면서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즉각적인 해체를 결정했던 것을 생각하며

그러나 당시 유엔총회 결정에서 나타난 유엔 회원국들의 바람이 실현되지 못한 것을 주목하며

남한에 주둔한 외국군대의 지속적인 주둔과 한국 내정에 대한 외세의 지속적인 간섭이 한국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화를 촉진하고 한국의 정전을 항구적인 평화로 전환하는 길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한국에서 외세의 간섭을 끝내고, 남북공동성명에서 명시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서 남북대화의 성공적인 촉진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완전한 실현을 고무하고, 이것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유엔헌장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믿으며

첫째, 유엔기 아래 남한에 주둔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가 필요한 것을 고려한다.

둘째, 직접당사자들이 유엔기 아래 주한에 주둔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에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다[521].

제1위원회는 1974년 11월 25~26일 남북한 대표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 한국문제에 대한 심의를 유엔총회 토의 마지막날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국문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한국문제 토의는 양측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진행되었다.

521) "Question of Korea: withdrawal of all foreign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under the flag of the United Nations", UNGA, A/C.1/L.677, 1974.

미국은 유엔군사령부의 존재의미가 정전협정의 운영과 관련있으며 기본적으로 유엔군에 속한 모든 외국군은 철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낭비되는 자산으로 바라보았다.[522] 따라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정전협정의 지속과 연계된 유엔군사령부 해체안을 중국과 협상하려고 하지만, 북한의 반대로 중국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523]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미국이 한반도의 안정을 우려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북한은 1973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서해안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고,[524] 1974년 7월에는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간첩 침투용 보트가 발견되기도 했다.[525] 또한 DMZ에서 발견된 대규모 지하터널은 북한에 대한 남한의 안보불안을 자극했다.[526] 미국은 북한의 대화시도는 긴장완화가 아니라 오로지 주한미군 철수를 촉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직접 접촉하기 보다 소련과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호전성을 억제하고 외교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믿었다.[527]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고위급 남북회담이 재개되길 원했으며, 북한과의 직접대화는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소련과 중국 같은 사회주의 강대

---

522) “Issues/Taking Points: UNC Alternatives,” November 1974 - Japan, Korea and USSR - Briefing Book - Seoul (2),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23) “Issues/Taking Points: UNC Alternatives,” November 1974 - Japan, Korea and USSR - Briefing Book - Seoul (2),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24) “255. National Intelligence Analytical Memorandum 14.2-1-74, Washington, July 15, 1974,” 『Documents on East and Southeast Ais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2.

525) “Memorandum from Henry A. Kissinger to Gerald R. Ford: Information Items, December 16, 1974,” Presidential Daily Briefing, December 16, 1974,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26) “258. Memorandum of Conversation, Seoul, November 22, 1974, 3 p.m,” 『Documents on East and Southeast Ais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2.

527) “258. Memorandum of Conversation, Seoul, November 22, 1974, 3 p.m,” 『Documents on East and Southeast Ais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2.

국들이 남한을 인정하지 않는 한 북한을 인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528]

그리고 미국은 주한미군이 남한에 대한 안보공약의 핵심으로서 북한을 억제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안정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다.[529] 공개적인 발언과 다르게 소련과 중공은 주한미군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주한미군의 주둔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북한만이 적화통일을 위해 주한미군에 반대한다고 보았다.[530] 또한 북한은 남한에 주둔 중인 유엔군 철수가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주장하지만,[531] 미국은 주한미군이 기술적으로 유엔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별개라고 생각했다.

김일성은 유엔군과 주한미군의 주둔은 별개라는 미국의 논리가 궤변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문제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완전히 철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수리아를 포함한 35개 유엔회원국들의 공동발기에 의하여 유엔의 깃발 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기로 되었습니다. 미제는 형세가 불리하자 미군이 유엔군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남조선에 주둔한 군대라느니 유엔군을 철거하면 전쟁이 다시 일어날 위험이 있다느니 궤변을 떠들고 있습니다.

---

528) “Issues/ Talking Points: North Korea,” November 1974 - Japan, Korea and USSR - Briefing Book - Seoul (2),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29) “Issues/ Talking Points: US Forces in Korea,” November 1974 - Japan, Korea and USSR - Briefing Book - Seoul (2),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30) “Issues/ Talking Points: US Forces in Korea,” November 1974 - Japan, Korea and USSR - Briefing Book - Seoul (2),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31) “The Korean Question on the United Nations,” November 1974 - Japan, Korea and USSR - Briefing Book - Seoul (3),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해 유엔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때에는 유엔군이라고 떠들고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 불리하면 유엔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미제가 언제나 쓰는 강도적 논법 그대로입니다. 또한 정전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어떤 담보조건없이 유엔군이 남조선에서 나간다면 전쟁위험을 증대시키게 된다는 논리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상시적인 전쟁위험을 낳는 외국군대가 유엔총회의 결정으로 물러가게 된다면 그 자체가 조선에서 평화유지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외국군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면 직접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이 협의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한 만큼 여기에서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당국자들이 평화협정 제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이 미군철수와 관련한 담보만 떠드는 것은 조선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남조선만이라도 틀어쥐고 있으려는 것입니다.[532]

-『근로자』 1974년 11월호

제29차 유엔총회 기간 한국문제 토의에서 북미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결국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대한 미중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12월 9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는 한국문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다. 이날 쿠바 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친북 결의안(A/C.1/L.677)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533] 이는 미국 측의 결의안이 먼저 통과하게 될 경우에 상충되는 친북결의안 투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쿠바 대표의 제안은 투표에서 부결되었고, 미국 측 결의안이 먼저 찬성 61, 반대 42, 기권 23으로 채택되었다. 북한 측 결의안은 찬성 48, 반대 48, 기권 38이라는 가부동수 결과로 최종 부결되었다.[534] 제1위원회에서의 승리 후

532) 김일성,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 『근로자』 제391호, (1974.11), pp.4~5.

533) "Question of Korea: Report of he First Committee", UNGA, A/9973, 1974.

534) 본회의 투표는 가부동수일 경우에 재투표가 이뤄지지만, 제1위원회 투표에서 가부동수는 부결을 의미했다.

미국의 Scali 유엔대사는 본 회의에 앞서 전원합의를 위해 결의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일부 국가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점을 남한 측에 약속했다.[535] 스웨덴과 덴마크 대표부는 본회의에서 가능한 한국문제에 대한 전원합의를 성사시키는 문제를 한국과 미국에 제안했었다.[536] 실무협의회에서 캐나다, 네덜란드 등 많은 우방국들이 찬성하면서 전원합의문이 새롭게 논의되었지만, 남한 대표부는 본국의 결정에 따라 반대하면서 전원합의문에 대한 이야기는 없던 일이 되었다.[537] 최종적으로 12월 17일 본회의에서 미국 측의 친한 결의안만 총회결의 3333호로 채택되었다.

유엔총회에 참석한 황화 중국대표는 제1위원회의 표결이 끝나고 북한과 같은 논조로 "당초에 미국군대가 유엔의 기치를 들고 조선에 침입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20여년 이래 그들은 줄곧 유엔의 기호를 내려놓은 일이 없는데 무슨 미국한국 쌍무조약을 들고 나와서 그들의 수만 명의 군대가 본래는 유엔군 사령부에 속하지 않고 본래부터 유엔군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미국을 비판했다.[538] 12월 12일 『인민일보』에서도 "미국정부는 반드시 그들이 남조선에 주둔한 군대를 철수하고 박정희 집단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지해야 하며 남조선 당국을 종용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대하여 도발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39] 12월

---

535) "Telegram from USIMISSION USUN New York to SECSTATE WashDC: Korea in 29th GA: SCAL -KIM Conversation DEC 10," USUN (U.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O SECSTATE, EXDIS (1), 9. 11. 74. - 2. 28. 7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36) "Telegram from USIMISSION USUN New York to SECSTATE WashDC: Korea in 29th GA: December 13 SITREP," USUN (U.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O SECSTATE, EXDIS (1), 9. 11. 74. - 2. 28. 7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37) "Telegram from USIMISSION USUN New York to SECSTATE WashDC: Korea in 29th GA: December 13 SITREP," USUN (U.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O SECSTATE, EXDIS (1), 9. 11. 74. - 2. 28. 7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38) "『인민일보』 1974년 12월 1일, 6면,"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 사료집 66: 인민일보(1973.1.14 ~ 1985.10.26)』,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9), pp.95~99.

17일 본 회의 표결에서도 황화 중국대표는 “미국이 남조선에 장기적으로 군대를 주둔시키고 조선내정을 간섭하는 것은 조선인민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주요한 장애”이며, “중국인민은 시종 변함없이 조선인민의 편에 서서 어깨 나란히 하고 함께 전투하고 그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였다.”고 발언했다.[540] 중국의 거친 발언은 제28차 유엔총회와 다르게 한국문제에 대한 미중대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1973~1975년 외무부 UN과장을 역임했던 이시영 전 UN대사는 제29차 유엔총회 결과에 대해 공산측과 한국문제에 대한 합의가 어려웠던 이유로 소련을 꼽는다. 이시영 전 대사에 따르면 소련은 중공과 달리 북한 측 결의안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해서 북한과 동조세력을 부추겼다고 말한다.[541] 만약 소련이 북한의 결의안에 그만큼 적극적이었다면, 중공도 북소관계를 견제하기 위해 자신의 실제 생각과 상관없이 북한의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소는 제29차 유엔총회 중에도 서로를 비난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했었다. 1974년 11월 10일 『인민일보』 기사는 소련에서 중공이 남한과 무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지만, 이것은 북중관계를 해치려는 소련의 이간질이라고 비판한다.[542] 그리고 정작 박정희 정권과 결탁하여 조선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것은 소련이라고 반발했다.[543]

1974년 12월 20일 허담 북한 외교부장은 평양을 방문한 린친(L.

---

539) “『인민일보』 1974년 12월 12일, 5면,”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 사료집 66: 인민일보(1973.1.14 ~ 1985.10.26)』,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9), pp.100~102.

540) “『인민일보』 1974년 12월 19일, 5면,”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 사료집 66: 인민일보(1973.1.14 ~ 1985.10.26)』,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9), pp.103~104.

54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편, 2015, p.93.

542) “『인민일보』 1974년 11월 10일, 5면,”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 사료집 66: 인민일보(1973.1.14 ~ 1985.10.26)』,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9), pp.91~95.

543)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9, pp.91~95.

RINCHIN) 몽골 외교부장과 양국관계와 대외정책에 대해 토의했다. 허담은 북한이 중국과 소련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몽골을 포함한 사회주의 진영이 단결하여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해주기를 호소했다.[544] 다음날 김일성은 린친 몽골 외교부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양국관계에 어떠한 불일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통해 북한이 중국에 치우친다는 몽골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했다.[545] 북한은 중소갈등으로 인한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이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1975년 1월 동독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자주노선을 부추기면서 소련 및 소련의 위성국가로부터 북한을 분리시키려고 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무조건적으로 북한의 모든 정치의제를 지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한다.[546] 한편 북한 지도부는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북중관계를 이용하고, 비동맹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았다.[547] 소련이 북중관계의 진전을 경계하면서 중국의 대북영향력을 차단하고 북소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양국협력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려고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548] 또한 소련은 지속적으로 중공이 반제투쟁에 대한 미사여구와 다르게 실제 행동과 정체성에서 북한과 다르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549] 1975년 1월 주북한 동독대사관은 소련대사관을 통해

544) "Record of Discussion between Foreign Ministers of North Korea and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December 20, 1974.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5250

545) "Record of a Meeting between Kim Il Sung and L. Rinchin." December 21, 1974.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5929

546) "Note from GDR Embassy in Pyongyang to Comrade Liebermann." January 14, 1975.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719

547) "Note from GDR Embassy in Pyongyang to Comrade Liebermann." January 14, 1975.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719

548) "Note from GDR Embassy in Pyongyang to Comrade Liebermann." January 14, 1975.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719

549) "Note from GDR Embassy in Pyongyang to Comrade Liebermann." January 14, 1975.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719

북한이 1974년 10월 미소 정상회의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미소합의가 있었는지 우려했지만, 이는 근거없는 낭설이라는 정보를 들었다. 북한은 중소가 미국과 결탁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5년 1월 미국 유엔대표부는 키신저에게 보내는 전보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실제적인 진전이 없다면 다음 유엔총회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550] 실제로 2월 주유엔 오스트리아 대표부에서는 북한대표부와의 통화사실을 공개하면서 주유엔 미국대사에게 제30차 유엔총회 전에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대체하고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의 관여를 끝내는 데 앞장서지 않는다면 대결보다 합의에 기초한 결의안이나 성명을 준비하는 일에 다른 중립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551] 한국 외교부는 중국과의 합의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보고, 미국에게 6월이나 7월에 결의안 초안을 먼저 제출하여 주도권을 쥘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아직 중국과의 교섭을 포기하는 것은 이르다고 판단했다.[552]

미국 공개문서에 따르면 1975년 초 북한은 미국이 한소, 한중관계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동맹국들의 충성심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553] 하지만 북한의 우려와 다르게 중소는 한국문제에서 북한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다. 1975년 2월 코시긴 소련 정부수반은 호주 수상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문제를 토론했다. 여기서 호주수상은 남북유엔동시가입을 주장했지만, 코시긴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상 남한을 북한과 동등한 독립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북

550) “Telegram from USIMISSION USUN New York to SECSTATE WashDC: Korea and KHMER,” USUN (U.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O SECSTATE, EXDIS (1), 9. 11. 74. - 2. 28. 7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51) “Telegram from USIMISSION USUN New York to SECSTATE WashDC: Korea,” People's Republic of China - Korea (2),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52)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Korean item in UNGA,” People's Republic of China - Korea (2),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53) “Korea - Pyongyang Shows Concern over Loyalty of Communist Allies,” NSC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Saff Files Box 8,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한의 입장을 두둔했다.[554] 또한 코시긴은 자신이 평양에 가고 싶어도 맘대로 초청받을 수 없으며 오직 북한이 초청해야만 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소련이 북한을 설득할 수 없다는 점을 암시했다.[555] 1975년 3월 저우난 주유엔 중국대사도 일본 오카다 장관과의 대화에서 한국문제를 논의했다. 중국대사는 오카다 장관에게 만약 어떤 식으로든 작년 한국문제 결의의 지지자들이 안보리에 한국문제를 제기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556]

1975년 3월 NSC 활동보고서는 유엔과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미국의 대한정책을 정리하고 있다. 미국의 이익이 한반도의 현상유지에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정전협정의 보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각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미중소 간의 암묵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자신을 둘러싼 중소 간의 라이벌 관계를 이용해서 중소가 자신에게 불리한 데탕트를 강요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한다.[557] 단기적으로 미국의 목표는 중소가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과연 중소가 북한이 타협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었다.[558] 또한 제3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은 중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소의

554)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WHITLAM-KOSYGIN Disscussion on Korea,” Korea - State Department Telegrams To SECSTATE - NODIS (3),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55)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WHITLAM-KOSYGIN Disscussion on Korea,” Korea - State Department Telegrams To SECSTATE - NODIS (3),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56) “Telegram from USIMISSION USUN New York to SECSTATE WashDC: Korea in Security Council Chinese View,” People's Republic of China - Korea (2),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57)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CONSUL JERUSALEM: US Policy on Korea at the UN and the UN COMM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 Korea (2),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58)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CONSUL JERUSALEM: US Policy on Korea at the UN and the UN COMM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 Korea (2),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라이벌 관계에 의지하면서, 제3세계의 지지를 확대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전망했다.[559] 미국의 행동 방침은 중국에 미중대화를 먼저 제안한 후 협상이 무산될 경우에 유엔군사령부를 정전협정과 직결되는 부분만 남기는 방식으로 축소하는 안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이었다.[560] 하지만 키신저가 중국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약세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바로 유엔군사령부를 축소하는 방안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561]

1975년 3월 27일 Sneider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문제에 대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가기로 한 결정사항을 한국에 알렸다.[562] 다음날 키신저는 김동조 외무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제30차 유엔총회의 전망을 토의했다. 두 사람은 비동맹을 포함해서 북한의 외교관계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것을 걱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한다.[563] 그리고 1975년 4월 남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공산화는 미국에게 대한반도 안보공약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564]

1975년 4월 18일 김일성이 북한 당정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공

---

559)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CONSUL JERUSALEM: US Policy on Korea at the UN and the UN COMM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 Korea (2),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60)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CONSUL JERUSALEM: US Policy on Korea at the UN and the UN COMM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 Korea (2),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61) “Telegram from SECSTATE to SECSTATE WASH DC: US Policy on Korea at the UN and the UN Comm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 Korea (2),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62)“265. Memorandum of Conversation, Washington, March 27, 1975, 5 p.m,” 『Documents on East and Southeast Ais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2.

563) “266. Memorandum of Conversation, Washington, March 28, 1975, 11 a.m,” 『Documents on East and Southeast Ais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2.

564) "54. Memorandum From the Counselor of the Department of State (Sonnenfeldt) and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Hyland) to Secretary of State Kissinger," 『Foundations of Foreign Policy,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XXXVIII.

식방문했다. 미국은 김일성의 방북에 대해 중국의 데탕트 전략에 대한 불만 또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가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했다.[565] 중국공산당은 북한이 대남정책에서 폭력적인 전술로 되돌아가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였다.[566] 남한은 김일성의 베이징 방문이 한반도의 현상유지에 불만을 품은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염려했지만, 미국은 4월 10일 연설에서 포드 대통령이 재확인한 미국의 대한 공약을 북한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567] 또한 북한이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한국통일정책에서 중국이 강경노선을 지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568] 미국 공개문서는 김일성이 무력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요청했지만, 마오가 극도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569] 그렇지만 4월 19일 등소평은 환영연회에서 "중국공산당, 중국정부와 중국인민은 일관되게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을 쟁취하는 투쟁을 지지하고 김일성 주석이 제출한 원칙과 강령을 지지하였으며 미국군대가 전부 남조선에서 철수하고 조선인민 자신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조선인민을 지지하였습니다."면서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570] 1975년 5월 Habib 미 국무부 차관보는

565) "Memorandum from the Situation Room to Henry A. Kissinger: Additional Information Items, April 17, 1975," Presidential Daily Briefing, April 17, 197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66) "Memorandum from the Situation Room to Henry A. Kissinger: Additional Information Items, April 17, 1975," Presidential Daily Briefing, April 17, 197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67)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Visit of Kim Il-sung to Peking," Korea - State Department Telegrams To SECSTATE - NODIS (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68) "Memorandum from the Situation Room to Henry A. Kissinger: Additional Information Items, April 19, 1975," Presidential Daily Briefing, April 19, 197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69) "Memorandum from the Situation Room to Henry A. Kissinger: Additional Information Items, April 26, 1975," Presidential Daily Briefing, April 26, 197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570) "『인민일보』 1975년 4월 19일, 3~4면,"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 사료집 66: 인민일보(1973.1.14 ~ 1985.10.26)』,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9), pp.109~115.

주미 한국대사와 김일성의 중국방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Habib 차관보는 북중공동성명이 주로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유엔총회를 대비한 대외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571]

1975년 4월 29일 동독 외교문서는 대남정책 조율이 김일성의 중공 방문의 주된 관심사라고 보았다. 김일성은 베이징 방문 첫 공식일정에서 “조선인민이 잃을 것은 오직 분계선뿐이고 통일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미국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며 매우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572] 비록 북중은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말과 다르게 공동선언문에 답방초청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점에서 각자의 입장을 고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은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북한을 반소련적 입장에 묶어두기 위해 노력했다.[573] 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지만, 북한의 대미, 대남 대결정책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으로 분석되었다.[574] 1975년 5월 동독 외교문서에서도 북한 지도부가 던진 대남정책에 대한 군사적인 측면과 고민에 대해 중국이 일관적으로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하면서 남한의 두 개의 조선 정책을 비난했다고 적고 있다.[575] 전명수 북한 외교부부장은 주북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사들에게 김일성의 중국방문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북

---

571) "South Korean Telegrams on Visit to China by North Korean Leader Kim Il Sung." May,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589

572) "On the Visit of a DPRK Party and Government Delegation Headed by Kim Il Sung to the PR China from 18 to 26 April 1975." April 29,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124

573) "On the Visit of a DPRK Party and Government Delegation Headed by Kim Il Sung to the PR China from 18 to 26 April 1975." April 29,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124

574) "On the Visit of a DPRK Party and Government Delegation Headed by Kim Il Sung to the PR China from 18 to 26 April 1975." April 29,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124

575) "Summarized Evaluation of Kim Il Sung's Visit to the PR China (18 to 26 April 1975)." May 06,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125

중은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박정희를 권좌에서 몰아낼 때까지 한국문제에 평화노선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576] 5월 12일 최상묵 북한 외교부 제2부부장은 동독 대사와 만나 김일성의 중국방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상묵 부부장에 따르면 김일성은 중국 지도부에 미제의 남조선 점령이 장기화되고 박정희 정권이 분단을 지속시키려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577] 중국지도부는 북한의 평화공세와 제3세계와의 연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대북원조 확대를 약속했다고 한다.[578]

1975년 4월경 대한민국 외교문서에 따르면 김일성은 소련 방문 계획도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정부는 김일성의 방소목적을 5가지[579]로 추측하면서, 시기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 직후에 중공 방문과 연이어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신경을 예민하게 세우고 있었다.[580] 그러나 한국정부는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이 기본적으로 현상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공으로 기우는 것을 방지하고 소련으로 유인하기 위해 경제적·군사적 대북지원을 강화하더라도 북한의 군사적인 대남혁명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했다.[581] 또한 소련은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군사령부 해체에 부정적이지

576)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SECRET, No. 059.156," May 10, 1975.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96

577) "Note concerning a Conversation between Ambassador Everhartz with the Head of Department II in the DPRK Foreign Ministry, Comrade Choe Sang-muk, about the Visit by Comrade Kim Il Sung to the PR China," May 12, 1975.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127

578) "Note concerning a Conversation between Ambassador Everhartz with the Head of Department II in the DPRK Foreign Ministry, Comrade Choe Sang-muk, about the Visit by Comrade Kim Il Sung to the PR China," May 12, 1975.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127

579) 첫째, 북한의 대남혁명에 대한 지원요청이다. 둘째, 대남 공산화 통일에 대한 외교적 지지요청이다. 셋째, 군사적·경제적 지원요청이다. 넷째, 김일성의 중공방문에 대한 설명이다. 다섯째, 북소 간의 동맹과 협력에 관한 상호원조 조약의 연장이다.

580) "South Korean Report on Kim Il Sung's Attempt to Visit the USSR in 1975," April, 1975.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588

581) "South Korean Report on Kim Il Sung's Attempt to Visit the USSR in 1975," April, 1975.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588

만, 북중관계를 견제하기 위해 충분히 외교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낼 것으로 전망했다.[582] 기본적으로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현상유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무력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1975년 중소에게 대남혁명과 무력통일에 대한 지지한 호소한 김일성의 움직임이 자신의 외교적 레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바라보기도 한다.[583] 1975년 초 한중, 한소관계에 대한 루머로 한국문제에서 중소의 충성심에 대해 북한이 불안해 했다는 미국 측 기록과 그 해 6월 불가리아를 방문한 김일성의 발언을 보면[584]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관점으로 보인다.

1975년 5월 9일 황첸 주유엔 중국대사와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만났다. 미국은 회담에 앞서 중국이 미중관계의 발전을 통해 이익을 보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585] 하지만 중국이 소련에 맞서면서 북한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교묘하게 행동해야만 하는 한계로 인해 한국문제에서 미국에 냉담하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이해했다.[586] 키신저 장관은 중국이 북한의 군사

---

582) "South Korean Report on Kim Il Sung's Attempt to Visit the USSR in 1975," April, 1975.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588

583) Christian F. Ostermann and James F. Person (eds.), 2011, p.71.

584) 1975년 5~6월 동유럽과 중동을 순방 중이던 김일성은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지브코브 불가리아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지브코브에게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인도차이나 반도와 다르게 한반도에서 무력통일이 어려운 요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Bernd Schaefer, "Overconfidence Shattered - North Korean Unification Policy, 1971-1975",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 Project: Working Papers #2* (December, 2010), pp,25~28.

585) "Memorandum From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Habib), the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Gleysteen), the Director of the Policy Planning Staff (Lord), and Richard H. Solomo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Secretary of State Kissinger1" 『Chin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XVIII.

586) "Memorandum From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Habib), the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Gleysteen), the Director of the Policy Planning Staff (Lord), and Richard H. Solomo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행동을 억제할 것을 요구했고, 황첸 대사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박정희 정권과 미국이라고 응수했다.[587] 하지만 키신저가 다시 한 번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취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하자, 황첸은 중국이 북한을 대신해서 한국문제를 논의할 입장이 아니라고 회피했다.[588]

1975년 5월 27일 미국의 NSSM 226 문서는 미국의 대한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을 다뤘다. 이 문서는 북한이 중국과 소련 및 제3세계 국가에서 얻는 지원의 정도, 주한미군의 주둔과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방안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권고했다.[589] 1975년 6월 12일 백악관 회의에서는 한국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낼 편지에서 남한과의 협의를 통해 1976년 1월부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의사가 있으며 이미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및 규모를 축소할 준비가 되었다는 점을 전달하기로 했다.[590] 미국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를 대체하는 조직을 만들고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부분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해체 전에 미리 유엔의 존재를 나타내는 깃발 및 다른 상징물을 없애는 조치 등을 통해서 유엔에서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591] 미국은 중국이 유엔에서 북한을 강력히 지지하지만, 유엔군사령부만 해체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지

---

Staff to Secretary of State Kissinger1" 『Chin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XVIII.

587) "109. Memorandum of Conversation," 『Chin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XVIII.

588) "109. Memorandum of Conversation," 『Chin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XVIII.

589) "268.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226, Washington, May 27, 1975," 『Documents on East and Southeast Ais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2.

590) "269. Memorandum of Conversation, Washington, June 12, 1975, 4 p.m," Documents on East and Southeast Ais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2.

591) "269. Memorandum of Conversation, Washington, June 12, 1975, 4 p.m," Documents on East and Southeast Ais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2.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592]

1975년 5월 9일 주미 루마니아 대사관에서 본국에 보낸 전보는 북한 측의 부탁에 따라서 미국과 접촉한 사실에 대해 적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총회결의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유엔군 사령부 토의를 앞두고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했던 것으로 추측된다.[593] 5월 19일 주러시아 루마니아 대사관은 북한이 조국통일을 위해 3가지 방안(평화적 방안, 군사적 방안, 혁명적 방안)을 각각 모색 중이라는 북한대사의 이야기를 전한다.[594] 5월 23일에는 루마니아를 방문한 김일성이 차우체스쿠와 한국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일성은 남한이 미국의 허락없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남북대화 중단의 책임을 남한에게 돌리는 발언을 했다.[595] 그는 소련의 묵인 하에 유고슬라비아 등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고 주한미군을 쫓아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596]

1975년 5월 하반기 김일성은 소련도 방문하고자 했지만, 소련 지도부와 일정이 어긋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방소일정이 다시 한 번 무산되었다.[597] 헝가리 외교문서는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의사가 북한이 중소 사이에서 균형을 계속해서 추구하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598]

---

592) "269. Memorandum of Conversation, Washington, June 12, 1975, 4 p.m," Documents on East and Southeast Ais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2.

593) "Telegram from New York to Bucharest, No. 052.467." May 09,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95

594) "Telegram from Moscow to Bucharest, SECRET, No. 050.572." MAY 19, 1975.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97

595) "Minutes of Conversation taken on the Occasion of the Romanian - Korean Discussions from May 23, 1975," May 23,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128

596) "Minutes of Conversation taken on the Occasion of the Romanian - Korean Discussions from May 23, 1975," May 23,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128

597)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July 30,"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1468

598)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그리고 헝가리 정부는 중소의 정보원을 통해 김일성이 한국문제의 군사적 해법 가능성을 타진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중국이 만류한 덕분에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분석했다.[599]

1975년 6월 2~5일 불가리아를 방문한 김일성은 지프코브 불가리아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일성은 남북대화 중단의 책임을 '두 개의 조선' 정책을 펼치는 남한에게 돌리고, 북한의 남침에 대한 소문은 박정희가 날조한 것이며 국내적으로 반공주의를 강화하고 남한을 미군기지화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600] 김일성은 북한이 평화적 외교를 통한 조국통일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세계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601] 그리고 주한미군과 남한군이 북한군보다 숫자나 장비 면에서 월등하고, 베트남이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이웃한 것과 다르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포위와 고립의 위험이 크고 게릴라전에 필요한 비옥한 땅도 없으므로 통일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602]

조선로동당 기관지 『근로자』는 남한과 주한미군의 군비증강을 비난하고, 이러한 조치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세계도처에서 울려퍼지는 때에 미제침략자들이 침략무력을 증강하고 군사기지를 새로

---

Ministry. July 30,"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1468

599)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July 30,"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1468.

600) "Letter From GDR Ambassador Wenning to Bulgarian Member of the Politburo and Secretary of SED Central Committee Comrade Hermann Axen," June 18,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780

601) "Letter From GDR Ambassador Wenning to Bulgarian Member of the Politburo and Secretary of SED Central Committee Comrade Hermann Axen," June 18,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780

602) "Information on the Talks between Kim Il Sung and Todor Zhivkov." June 18, 1975.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282

확장하며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끌어들이는 것은 그들이야말로 조선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침략전쟁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른바 유엔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 그리고 미8군사령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지휘체계를 단일화했다. 또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땅과 바다, 하늘에서 끊임없일 벌이는 각종 전쟁연습소동과 군사도발은 그들의 전쟁광증이 어느 지경인지를 보여준다.[603]

-『근로자』 1975년 6월호

1975년 6월 27일 주유엔 미국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편지를 보내 한국문제에 대한 제29차 유엔총회의 결의 3333호를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604] 총회 결의 3333호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때에 직접 당사자들과 상의를 거쳐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합의와 함께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포함한 한국문제를 다룰 것을 희망했다. 이 편지에서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준비가 되었고, 북중이 유엔군사령부 해체 전에 정전협정을 계속 강제하겠다는 사전합의에 동의한다면,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을 강제하고 이행을 보장하는 임무를 계승할 사령관을 임명하겠다고 알렸다.[605]

1975년 7월 1일 주유엔 루마니아 대사관 기록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들은 미국이 안보리의장에게 보낸 편지는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전술적인 속임수라고 주장했다.[606]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제안에 대한 대화에서 소련 외교관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나타내기를 꺼리면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607] 그리

603) 리두찬, "새 전쟁 도발책동에 매달리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파멸을 면치 못한다", 『근로자』 제398호, (1975.6), p.60.

604) "Letter, John Scali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June 27,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7542

605) Statement by the Minsister of Foreign Affairs concerning the inplementation of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333 on the Question of Korea. June 27, 1975.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7541

606) "Telegram from New York to Bucharest, No. 052648," July 01,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99

607) "Telegram from New York to Bucharest, No. 052648," July 01, 1975.

고 미국의 제안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강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한국문제 유일한 해법은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밖에 없다고 했다.[608] 북한의 허담 부총리는 주북한 루마니아 대사와의 대화에서 미국의 유엔군사령부 해체안을 언급하며 중국을 참여시키고 한미가 정전협정의 책임을 대신하겠다는 것은 강대국의 내정간섭을 수용하라는 뜻이며 북한의 자주성과 주권침해를 의미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609] 허담은 미국이 유엔총회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미끼로 교묘한 술책을 부린다고 생각했다.[610]

조선로동당 기관지『근로자』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주한미군이며, 평화협정에 소극적인 미국을 비판하는 김일성의 발언을 소개한다.

> 미제국주의는 억지로 30년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앞잡이들을 시켜 조선을 두개 조선으로 분렬시키고 남조선을 계속 식민지 군사기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미국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남침위협에 대해 자꾸 떠들고 있습니다. 공화국은 벌써 여러 번 남침을 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에 대해서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제의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611]
>
> -『근로자』1975년 7월호

---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99

608)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No. 01/06647," July 04,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098

609)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No. 059/219," July 15,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100

610)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No. 059/219," July 15,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100

611) 김일성, "프랑스 프레스 통신자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근로자』 제399호, (1975.7), p.3.

1975년 6월 25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조국해방전쟁 25주년을 기념한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북중 간의 역사적인 친선관계를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군사령부 해체의 당위성을 주장했다.[612] 하지만 1975년 7월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McCloskey 하원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한미군을 철수해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한미군이 철수할까봐 불안해한다고 답했다.[613]

1975년 7월 24일 주미 루마니아 대사관이 본국에 보내는 전보에 따르면 미국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북한정치를 고려하면 유엔군사령부 해체가 반드시 정전협정 유지에 대한 합의를 동반해야 한다고 믿었다.[614] 그리고 남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북한의 공세적인 프로파간다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했다.[615] 1975년 8월 북한은 평양을 방문한 토쿠마 우츠노미야 의원을 통해 미키 수상에게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바라고, 남북한의 지속적인 분단에 반대하며,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북미평화협정을 원한다는 사실을 미국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616] 미국은 북한의 대화제의와 평화공세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한미일 관계에 불화를 촉진하고 비동맹국가와 유엔에서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617] 일본 언론은 미키 수상이 워싱턴 방문 중 맨스필드 의원에 대한 평양의 방북초청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지

---

612) "『인민일보』 1975년 6월 25일, 1면,"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 사료집 66: 인민일보(1973.1.14 ~ 1985.10.26)』,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9), pp.129~132.

613) "115. Memorandum of Conversation," 『Chin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XVIII.

614) "Telegram from Washington to Bucharest, No. 074.783," July 24,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102

615) "Telegram from Washington to Bucharest, No. 074.783," July 24,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102

616) "Telegram from Tokyo to Bucharest, No. 069.711," August 15,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103

617) "Memorandum from the Situation Room to Henry A. Kissinger: Additional Information Items, August 1, 1975," Presidential Daily Briefing, August 1, 197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만, 미국은 그런 메시지를 들은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618] 남한이 해당 기사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 중이던 맨스필드 미 상원의원은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고, 남한정부에도 방북초청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했다.[619] 8월 27일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대표단과의 회담기록을 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공약과 남한의 내부단결 때문에 북한이 좌절했으며 더 이상의 직접적인 대남공격을 하지 않고 다시 평화공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한다.[620]

1975년 9월 1일 주북한 동독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북한과 소련 및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는 소련과 위성국가들의 주북한 대사들이 모여서 회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소련 및 위성국가들의 대사들은 북한이 소련과 친소국가들을 상대적으로 소외시키면서 중공과 비동맹국가들을 우대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621] 그래도 정치, 경제적으로 소련과의 협력이 중요한 북한이 장기적으로 완전히 중공으로 돌아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소 사이에서 펼치는 북한의 균형정책에서 냉각된 북소관계는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다.[622]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는 미국 측이 먼저 6월 27일 안전보장이사회 편지를 보내고, 총회 안건을 상정하면서 시작되었다. 1975년 6월 27일 미국, 영국, 일본 등 6개국이 유엔사무총장에게 제30차 유엔총회 의제로 “한국문제에 대한 제28차 유엔총회 전원합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긴급한 필요”라는 안

---

618) "Memorandum from the Situation Room to Henry A. Kissinger: Noon Notes, August 12, 1975," Noon and Evening Notes, June 3, 197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619) "Memorandum from the Situation Room to Henry A. Kissinger: Noon Notes, August 12, 1975," Noon and Evening Notes, June 3, 197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620) "271. Memorandum of Conversation, Seoul, August 27, 1975," 『Documents on East and Southeast Ais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2.

621) Report from the GDR Embassy in the DPRK. September 01,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284

622) Report from the GDR Embassy in the DPRK. September 01,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284.

건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는 편지(A/10142)를 보냈다. 북한 측은 8월 8일 알제리, 중국, 소련 등 35개국의 공동명의로 유엔사무총장에게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가속하고 한국에서 정전을 항구적인 평화로 전환하는 데 유리한 환경의 조성”이라는 안건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는 편지(A/10191)를 보냈다. 미국은 북한 측의 결의안이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 외국군 철수’,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실상 정전체제의 종료를 암시하면서 평화협정을 위한 북미양자대화를 강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봤다.[623]

9월 17일 유엔총회 운영위원회는 두 안건을 한국문제라는 명제 아래 제1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권고안을 채택했다. 9월 19일 본회의는 한국문제 안건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채택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총 20개국이 발의한 한국문제 결의안의 초안은 다음과 같다.

(A/C.1/L.708) 유엔총회는

한국인의 자유롭게 표현된 의사에 기초해서 한국의 평화통일 목표가 달성되는 데 진전이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남북한이 선언한 남북대화의 지속의사와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의 공동선언문 발표에 대한 만족감을 기억하며

1953년 8월 28일에 채택된 총회결의 711호를 통해 유엔총회가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을 승인한다고 언급했던 것과, 1954년 12월 11일의 총회결의 811호에서 유엔총회는 분명하게 상호 허용할 수 있는 개정과 추가내용에 의해 또는 남북한의 정치적 차원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절한 합의조항에 의해 정전협정이 대체될 때까지 협정의 효력이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는 정전협정 조문에 주목했던 것을 추가로 상기하며

1974년 12월 17일의 총회결의 3333호에서 표현된, 안전보장이사회가 관할에 속한 한국문제의 측면들을 심의할 것에 대한 유엔총회의 희망을 명심하며

그러나 한국의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정전협정이 한반

623) "Memorandum from the Situation Room to Henry A. Kissinger: Noon Notes, August 12, 1975," Noon and Evening Notes, June 3, 197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도의 평화와 안보유지에 필수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자각하며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앞서서 다른 직접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들을 계속 시행 중인 것으로 여기는 데 동의하면, 미국은 1976년 1월 1일에 남한과 함께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현재 유엔군사령부의 총사령관의 책임인 모든 정전협정 조항들의 강제를 보장하는 지휘권에 대해여 한국과 미국의 군장교를 후계로 지명할 준비가 되었다고 확언하는, 미국정부가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한 6월 27일의 편지(S/11737)를 언급하며

남한정부가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상기 합의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확언하는 1975년 6월 27일의 발언을 주목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유지에 관하여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서 유엔이 한반도에서 해당 목적의 달성을 보장할 지속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첫째, 1973년 11월 2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전원합의원에서 표현된 유엔 회원국들의 소원을 재확인하고 남북한 모두에게 한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남한대화를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정전협정의 지속적인 고수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완전한 보존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를 명심하고, 직접당사자들이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에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적절한 합의와 연계하여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논의에 착수하도록 적절하게 격려할 것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다.

셋째, 이런 논의들이 완료되고 유엔군사령부가 1976년 1월 1일에 해체되기 위해 정전협정의 보존에 대한 대안적 합의들이 만들어질 것에 대한 추가적인 희망을 표현한다.[624]

알제리, 중국, 소련 등 총 43개국이 발의한 한국문제 결의안의 초안은 다음과 같다.

(A/C.1/L.709) 유엔총회는

624) "Urgent need to implement fully the consensus of the twrenty-eigh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Korean question and to maintain peace and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UNGA, A/C.1/L.708, 1975.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된지 30년이 지나고 한국에서 정전이 성립한지 2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통일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평등과 민족자결의 원칙에 대한 존중, 내정불간섭을 규정하는 유엔헌장에 따라서 국가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상기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한국인들이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에 한국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성취하도록 격려하고 이것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유엔헌장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남북한이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의 정신과, 공동성명을 환영했던 1973년 11월 28일 제28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했던 결정에 따라서 한국의 통일을 가속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촉진할 것을 희망하며

현 정전상태가 한국에서 그대로 지속되는 한, 항구적인 평화는 기대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며

한국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가속하기 위해서 한국의 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중단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해소하고,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결정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숙고하며

첫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기 아래 남한에 주둔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유엔기 아래 남한에 주둔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의 맥락 속에서 정전협정의 실제당사자들이 긴장을 해소하고 한국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공고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국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다.

셋째, 남북한이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준수하고, 군비강화를 중단하고 각자의 군대를 극적으로 동등한 수준까지 감축하고 무력충돌을 예방하고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국에서 군사적 대결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존한다.[625)]

---

625) "Creation of favourable conditions for converting the armistice into a durable peace in Korea and accelerating the independent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UNGA, A/C.1/L.709, 1975.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양측의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975년 9월 19일 Gromyko 소련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한국문제에서 미국이 제시하는 유일한 방안은 유엔군사령부가 폐지될 경우에 직접당사자인 4자회담(북중한미)이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합의를 이루는 것 뿐이라면서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626] 조선로동당 기관지 『근로자』에 실린 글은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노골화되는 남조선 영구강점과 민족분렬 책동에 대처하여 얼마 전 37개 유엔성원국들은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데 대하여라는 문제를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토의할 것을 제기하고 그에 따르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내놓았다. 결의안은 조선에 대한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여 유엔군 깃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킬 것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중요한 요구로 제기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지금 유엔총회에서의 조선문제 토의와 관련하여 조건부적인 유엔군사령부 해체라는 기만적인 겨르이안을 서둘러 꾸며냄으로써 우리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저들의 새로운 아세아방위구상을 실현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627]

9월 19일 주유엔 미국대표부는 우방국의 실무그룹 대표자들에게 정전협정의 직접당사자인 북한, 중국, 한국, 미국으로 구성된 4자회담에 대한 제안을 알려주었다.[628] 9월 22일 중국대표단도 방북하면서 한국문

---

626) "195. Memorandum of Conversation,"『Soviet Union, August 1974 – December 1976』, FRUS, 1969-1976, VOLUME XVI.

627) 김필헌,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교활한 영구강점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근로자』 제401호, (1975.9), p.53.

628) “Telegram from USIMISSION USUN New York to SECSTATE WashDC: US-ROK Initiative on Korean Question at UN, Proposed French Amendments to Friendly resolution on Korea,” USUN (U.S. Mission to the

제에 대한 전략을 북한과 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629] 9월 28일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Chiao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을 가진다. Chiao는 키신저에게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만나볼 것을 제안한다.[630] 하지만 키신저는 남한을 제외한 북미회담은 있을 수 없다고 응수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폐지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전협정의 유지방안인데 북한이 4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631] 키신저는 중국이 한국문제 해결보다 소련의 움직임과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더 신경쓰고 있다고 느꼈다.[632] 키신저는 만약 미중이 소련의 패권에 맞선 암묵적 동맹이라면 미중 양자관계에서 중국이 협력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했다.[633] 하지만 9월 9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27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의 비동맹 가입을 축하하고,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사설을 실었다.[634] 또한 유엔 전체회의 발언에서 중

---

United Nations) TO SECSTATE, NODIS (5), 8. 1. 75. - 9. 30. 7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629) "Memorandum from the Situation Room to Henry A. Kissinger: Additional Information Items, September 22, 1975," Presidential Daily Briefing, September 22, 197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630) "Memorandum of Conversation: The Soviet Union; CSCE; Europe; Japan; Angola; Indochia; the President's China Trip; the Global Strategic Situation; Korea," September 28, 1975 - Kissingers Meeting with PRC Officials in New York,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631) "Memorandum of Conversation: The Soviet Union; CSCE; Europe; Japan; Angola; Indochia; the President's China Trip; the Global Strategic Situation; Korea," September 28, 1975 - Kissingers Meeting with PRC Officials in New York,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632) "Memorandum from Brent Scowcroft to Gerald R. Ford. September 29, 1975," September 21-25, 1975 and September 28 - October 1, 1975 - United Nations - HAK Messages for the President,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633) "Memorandum from Brent Scowcroft to Gerald R. Ford. September 29, 1975," September 21-25, 1975 and September 28 - October 1, 1975 - United Nations - HAK Messages for the President,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634) "『인민일보』 1975년 9월 9일, 2면,"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 사료집 66: 인민일보(1973.1.14 ~ 1985.10.26)』,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9),

국대표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알제리의 결의초안을 지지하고 북한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였다.[635]

1975년 9월 26일 프랑스가 결의초안(A/C.1/L.708)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 후에 벨기에, 감비아, 이탈리아가 공동발의국에 추가되었다. 9월 30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남북한 대표단이 투표권 없이 한국문제에 대한 토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결정을 했다. 10월 10일 미국 측 결의초안(A/C.1/L.708)의 공동발의국들은 프랑스가 제출한 개정안을 수용했다. 개정안은 결의초안에 합병되었고, 이것은 A/C.1/L.708/Rev.1이라는 문서로 재발행되었다. 이 수정된 결의초안은 총 28개국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A/C.1/L.708/Rev.1)유엔총회는

1974년 12월 17일의 총회결의 3333호에서 유엔총회가 표현한 희망을 유념하며

한국인의 자유롭게 표현된 의사에 기초해서 한국의 평화통일 목표가 달성되는 데 진전이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남북한이 선언한 남북대화의 지속의사와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의 공동선언문 발표에 대한 만족감을 기억하며

1953년 8월 28일에 채택된 총회결의 711호를 통해 유엔총회가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을 승인한다고 언급했던 것과, 1954년 12월 11일의 총회결의 811호에서 유엔총회는 분명하게 상호 허용할 수 있는 개정과 추가내용에 의해 또는 남북한의 정치적 차원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절한 합의조항에 의해 정전협정이 대체될 때까지 협정의 효력이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는 정전협정 조문에 주목했던 것을 추가로 상기하며

그러나 한국의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정전협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유지에 필수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자각하며

다른 직접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상호인정할 수 있는 대안협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면 1976년 1월 1일에 유엔군

---

pp.132~135.

635) "『인민일보』 1975년 9월 27일, 3면,"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 사료집 66: 인민일보(1973.1.14 ~ 1985.10.26)』,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9), pp.144~148.

사령부를 해체할 준비가 되었다고 확언하는, 미국정부가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한 6월 27일의 편지(S/11737)를 언급하며

남한정부가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합의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확언하는 1975년 6월 27일의 발언을 주목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유지에 관하여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서 유엔이 한반도에서 해당 목적의 달성을 보장할 지속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첫째, 1973년 11월 2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전원합의원에서 표현된 유엔 회원국들의 소원을 재확인하고 남북한 모두에게 한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남한대화를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모든 직접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을 교체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합의에 대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것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다.

셋째, 모든 직접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의 지속적인 준수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완전하게 보존하는 것을 보장할 필요를 명심하고,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합의와 동시에 해체될 수 있도록 첫번째 조치로서 가능한 빨리 대화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유엔군사령부가 1976년 1월 1일에 해체되고, 해당일까지 남한에서 유엔기 아래 군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의 논의들이 완료되고 정전협정의 보존에 대한 대안적 합의들이 만들어질 것에 대한 추가적인 희망을 표현한다.[636]

1975년 10월 11일 주유엔 루마니아 대표부에서 본국에 보낸 전보에서는 한국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기록에서 루마니아는 한국문제 결의안은 미국의 위신이 달려있는 문제로서 베트남의 공산화로 인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보았다.[637] 그러나 키신저가 유엔군사령부 해체조건으로 제안한 4자회담에 중국은 매우 냉

636) ""Urgent need to implement fully the consensus of the twrenty-eigh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Korean question and to maintain peace and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UNGA, A/C.1/L.708/Rev.1, 1975.

637) "Telegram from Washington to Bucharest, No. 075119," October 11,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104

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중소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북한의 대중소정책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638]

10월 13일 북한 외교부부장은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과 한국문제 토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친북결의안이 과반수의 표를 확보할 것에 자신감을 표시하면서, 북한이 북미협상과 남북협상을 병렬로 진행하길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639] 북한은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을 통해서 미국에게 비밀리에 북미 간의 예비접촉을 가질 것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640] 키신저는 남한이 동의한다는 가정 하에 북한이 회담의 비밀을 보장하고 한국의 안보문제에 관한 협상에서 남한이 참여하는 것을 북한이 이해한다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다면, 유엔총회 투표 이후 협상절차를 정하기 위해 북한과 예비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달하기로 했다.[641] 그리고 미국은 한국문제에 대하여 정전협정의 유지를 위한 협상을 중국에 지속적으로 제안하되, 원한다면 남한을 포함한 상태에서 4자보다 더 확대된 회담은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642] 미국은 중국이 진지한 반응을 보일 경우에 제시할 9가지 합의 내용을 정리했지만, 현상유지를 지향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643]

---

638) "Telegram from Washington to Bucharest, No. 075119," October 11,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104

639) "Telegram from USIMISSION USUN New York to SECSTAT WashDC: North Korean Approach to Waldheim," USUN (U.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O SECSTATE, NODIS (6), 10. 1. 75. - 12. 31. 7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640) “Telegram from USIMISSION USUN New York to SECSTATE WashDC: Letter from Secretary General to Secretary,” USUN (U.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O SECSTATE, NODIS (6), 10. 1. 75. - 12. 31. 7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641) "Memorandum from Thomas J Barnes to Henry A. Kissinger: Follow-Up tp Our Korean Strategy in the U.N," Korea (13),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642) "Memorandum from Thomas J Barnes to Henry A. Kissinger: Follow-Up tp Our Korean Strategy in the U.N," Korea (13),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643) ① 남북한이 평화통일과 무력불용에 서약한다. ② 제도적으로 한국의 통일을 상징하지만 정치적인 힘은 없는 한국연합을 수립한다. (남북한 사이의 문화적 교

키신저는 한국문제 투표에 관하여 다른 나라의 외무장관들에게 한국문제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투표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644]

키신저는 차오관화 중국 외교부장이 유엔연설과 자신과의 회담에서 보여준 중국의 한국문제에 대한 입장이 미국과 큰 차이를 보였지만, 여전히 미중은 한반도 평화유지라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주한미군의 갑작스런 철수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믿었다.[645] 중국은 말로만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할 뿐 그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었다. 키신저는 1973년 UNCURK 해체에 관한 합의 이후 중국의 입장이 점점 더 강경해졌지만,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고 북한도 그렇다는 점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는 정황상 중국이 북한에 묶인 손으로도 한국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계속 분투하고 있다고 여겼다.[646] 그는 중국이 한국문제에 관한 협상에서 북한을 설득하는 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혹여라도 북한이 중국에 불만을 품고 소련에 접근할 경우 소련의 대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647] 실제로 중국은 북소관계를 견제하기 위해

---

류와 경제적 연계를 촉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③ 모든 외국군대를 (최소 5년 이상의) 구체적인 시간 내에 철수하겠다고 약속한다. ④ 일본을 포함한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해 보장하고, 군사적 균형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⑤ 한미상호방위조약, 북중조약, 북소조약을 지속한다. ⑥ 유엔군사령부를 해산한다. ⑦ 한국에서 존중되어 왔던 임시적인 분계선을 인정한다. ⑧ 미국, 중국, 소련, 일본 4대 강대국들이 남북한에서 서로의 존재에 대한 몇 가지 형식을 수립한다. ⑨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한다.

644) “Telegram from USDEL Secretary Aircraft to SECSTATE WashDC: Secretary's Actions,” October 19-23, 1975 - Peoples Republic of China - SECTO (1),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645) “Korean Question Issues and Talking Points,” October 19-23, People's Republic of China - Briefing Book for China - Third Country Issues (2),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646) “Korean Question Issues and Talking Points,” October 19-23, People's Republic of China - Briefing Book for China - Third Country Issues (2),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647) “Korea,” Nov. 28-Dec. 7, 1975-Far East International Issues Presidents Copy (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지속적으로 소련이 미국이나 박정희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반대하면서도 마지못해 평양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련의 한국정책이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648] 북한이 비동맹외교에서 거둔 성과도 중국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북한이 비동맹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제3세계의 지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굳이 북한의 외교정책을 뒤집으려고 애쓰는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649] 결정적으로 키신저는 중국이 현재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자신에게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북한에게 압력을 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다.[650]

제30차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북지원은 확고했다. 10월 10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조선로동당 창건 3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651] 그리고 10월 11일 주중국 북한대사관에서 개최한 연회에서 장춘교 중국부총리는 마오쩌둥을 대신하여 조선로동당 창건 30주년을 축하하고 북중 간의 연대의식을 표시했다.[652] 10월 25일 『인민일보』는 조선인민지원군의 조선전쟁 참전 25주년을 기념하는 사설에서 "중국인민은 영원히 조선전우들과 단결하여 함께 전투할 것이다."고 선언하면서 북중연대를 강조했다.[653] 다음날 『인민일

648) "Telegram from AMCONSULHong Kong to SECSTATE WashDC: China marks 25th Anniversary of the CPV Entry into war," Peoples Republic of China - Korea (6),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649) "Korean Question Issues and Talking Points," October 19-23, People's Republic of China - Briefing Book for China - Third Country Issues (2),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650) "Korea," Nov. 28-Dec. 7, 1975-Far East International Issues Presidents Copy (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651) "『인민일보』 1975년 10월 10일, 1면,"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 사료집 66: 인민일보(1973.1.14 ~ 1985.10.26)』,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9), pp.149~152.

652) "『인민일보』 1975년 10월 11일, 1면,"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 사료집 66: 인민일보(1973.1.14 ~ 1985.10.26)』,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9), pp.153~154.

보』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진석련 중국부총리의 발언이 언급되었다.[654]

1975년 10월 19~23일 중국을 방문한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덩샤오핑 부주석, 차오관화 외교부장과 한국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덩샤오핑은 키신저에게 북미직접대화를 제안하고, 차오관화는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더라도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으로 대체되면 한국문제의 해결은 어렵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655] 하지만 키신저는 남한을 배제한 채 북한과 별도의 대화를 하는 것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유엔군사령부가 평화협정 전에 폐지된다면 한반도에 무법적 상태가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656]

1975년 21~29일 제30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는 한국문제가 심의되었다. 10월 29일에는 제1위원회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다. 먼저 친한 결의안(A/C.1/L.708/Rev.1)은 찬성59, 반대51, 기권29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나서 제1위원회는 친북 결의안(A/C.1/L.709)에 대한 투표를 했다. 친북결의안은 찬성51, 반대38, 기권50으로 채택되었다.

7 ) 소결

북한은 자신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동맹국인 중소의 동상이몽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신의 의지대로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653) “『인민일보』 1975년 10월 25일, 1면,”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 사료집 66: 인민일보(1973.1.14 ~ 1985.10.26)』,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9), pp.156~159.

654) “『인민일보』 1974년 10월 25일, 1면,”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 사료집 66: 인민일보(1973.1.14 ~ 1985.10.26)』,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9), pp.155~156.

655) "Memorandum of Conversation: The President's Visit and Communique; Bilateral Relations; Indochina MIA; Korea; South Asia," October 19-23, 1975 - Kissingers Trip (4),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656) “Korea: October 1975 talks,” Nov. 28-Dec. 7, 1975-Far East International Issues Presidents Copy (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토의에서 자신의 주장을 담은 친북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이변을 일으킨다. 미국과 남한의 입장을 반영한 유엔총회 결의 3390A호가 정전체제의 유지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에 방점을 두는 반면,[657] 북한이 지지한 유엔총회 결의 3390B호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남한에 주둔한 모든 외국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통한 정전체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북한 측 결의안의 통과를 저지하려고 했으나, 1975년 북한은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북한이 한국문제에서 미중, 미소 간의 타협을 저지하고, 중소의 강력한 견고한 지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소갈등이 크게 작용했다. 중요한 양대동맹의 갈등이 도리어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까닭은 삼각관계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북중소 삼각관계 속에서 중소갈등을 활용하여 중국과 소련을 상대로 외교적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었다. 덕분에 약소국인 북한은 짐멜이 삼자관계 연구에서 이야기한 어부지리의 이득을 누릴 수 있었다.[658]

최종적으로 제30차 유엔총회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결의안도 동시에 통과시켰다. 모순적인 결과로 인해 UN에서의 한국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미국 공개문서에서 인정하듯이 유엔총회 결의 3390B호의 통과는 1950년 남침으로 규탄받았던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다수의 표를 확보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정치적 승리(at least qualified victory)라고 평가할 수 있다.[659] 북한의 입장에서도 역사상 최초로 유엔에서 자신의 입장을 반영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소기

---

657) 대한민국 외교문서,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V.13 결과보고 1)," (H-0031-08), 1975, pp.50~52.

658) 어부지리로 취하는 이익은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갈등하는 양자(dyad)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상황 속에서 제3자를 거의 신경쓰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반사이익이고, 둘째는 갈등하는 양자(dyad)가 서로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제3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면서 생기는 이익이다. 두 가지 모두 제3자가 의지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수동적인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삼자(triad)관계는 양자(dyad) 간의 갈등보다 제3자의 지지가 필요한 특정상황에서의 경쟁이 선행되기도 한다.

659) “Korea,” Nov. 28-Dec. 7, 1975-Far East International Issues Presidents Copy (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의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만족할 만한 결과였다.[660] 반면 미국과 남한의 입장에서는 차기 총회의 한국문제 토의가 더욱 염려될 수밖에 없었다.

660)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편, 2015, pp.113~114.

# Ⅴ. 결론

1970년대 전반기 아시아와 한반도의 데탕트는 강대국들(미중소)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 특히 미중은 관계정상화에서 1973년 UNCURK 해체 시까지 상호협의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비록 소련은 미중대화에서 소외되었지만, 남북대화와 독일식 상호인정을 통한 한반도의 현상유지와 안정을 원했다는 점에서 미중과 비슷한 입장이었다.

미중소는 한반도의 평화와 현상유지라는 공동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1974~1975년 유엔에서 벌어진 한국문제 토의에서 치열한 표대결을 펼쳐야만 했다. 이들이 한국문제에서 서로 타협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북한이었다. 중국은 북한이 반대했기 때문에 UNCURK 해체 이후 더 이상 미국에 협력할 수 없었고, 소련은 북한이 원했기 때문에 원수나 다름없이 생각하던 중국과 유엔에서 공동으로 한국문제 결의안을 발의해야만 했다. 북한은 중소분쟁이라는 국제정치적 현실과 제약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중국과 소련은 북한이 자신들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알면서도 북한에 당해야만 했다.

중국과 소련은 1950년 공동의 적인 미국을 상대로 뭉쳤던 사회주의 진영으로 단결했었다. 하지만 데탕트기 중소는 서로를 주적으로 생각하면서 미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과거 1950년대 중소의 지원으로 유엔군을 막아내고 전후복구에 성공했던 북한은 1960년대 전반기 친중노선과, 후반기 친소노선을 경험하면서 어느 한 쪽에 쏠리는 것이 가져오는 막대한 손실을 뼈아프게 경험했다. 그래서 1970년 전반기 북한은 중소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중립을 지키며 중국과 소련을 상대로 자신의 외교력을 펼쳤다. 북한이 북중소 삼각관계에서 외교적 레버리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중국과 소련이 서로 화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은 극동지역에서 중소와 동시에 국경을 맞대는 북한이 지닌 절묘한 지정학적 위치와 북한의 자주성이었다.

본 논문이 북한의 자주성 측면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북한의 비동맹 외교였다. 초창기 북한외교는 사회주의 진영과 이념적 측면에 종속되었지만,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중소의 내정간섭을 겪었던 경험은 김일성과 북한 지도부에게 자주성을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게 했다. 특히 중소 간의 치열한 이념다툼은 사회주의 진영의 내부분열을 초래하고 응집성을 약화시켰다. 그 틈에서 북한은 자신의 독자노선을 계발했고, 1960년대 후반기 개화하기 시작한 북한의 자주외교는 데탕트기 비동맹 외교에서 많은 결실을 맺었다. 북한은 이념을 초월한 실리외교를 통해 중소에게서 독립적인 외교무대로서 비동맹 외교를 확보할 수 있었고,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도 양자관계 중심의 1대1 외교활동을 통해 중소분쟁에서 한 발자국 비켜나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북한은 자신의 취약성 때문에 중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기에 중소는 북한을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이 물러나면 북한이 상대방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1960년대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북한이 완전히 소련에게 넘어가서 소련의 다른 위성국가처럼 코메콘과 아시아집단안보구상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반대로 소련은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봉쇄하기를 원했다. 북한은 양쪽의 생각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듯이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과 반제투쟁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강조하며 비동맹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자주성을 키웠다.

북한의 비동맹 외교는 비동맹운동의 좌경화와 빈부갈등처럼 국제사회의 흐름을 잘 이용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에게 반제투쟁을 연결고리로 비동맹과 제3세계에게 다가가는 전략적 선택과 노력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외교적 노력 덕분에 북한은 소련, 중국과의 군사동맹에도 불구하고 남한보다 먼저 비동맹 회원이 될 수 있었다. 약소국인 북한은 국제정치적 체계를 구성하거나 변화시킬 능력이 없었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시대적 변화와 기회를 잘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데탕트기 북한 외교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중소갈등, 북중소 삼각관계의 역학관계, 비동맹 세력의 좌경화, 미국과 비동맹의 대립,

비동맹의 단결력 강화 등 자신에게 주어진 국제환경을 최적화된 방법으로 이용했지만, 주어진 체계나 조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었다. 일부 이견이 존재하지만, 1975년 인도차이나의 공산화 직후 북한은 무력통일을 잠재적 대안 중에 하나로 고려했다. 하지만 한국전쟁 때처럼 중공과 소련의 지지를 얻을 수는 없었다. 물론 북한 스스로도 남한의 경제적·군사적 발전, 한미군사동맹, 주한미군을 고려하면 현실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기에 군사행동을 진지하게 고려했던 것 같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유엔에서 외교적 방식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압박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려면 미국의 방해를 극복해야만했다. 북한은 지속적인 평화공세와 비동맹외교를 통해 유엔에서 미국을 고립시키고, 미국의 대중국 협상시도를 북중소 삼각관계 속에서 봉쇄하는 데 성공했다. 결국 1971, 1972년 한국문제 토의연기, 1973년 UNCURK 해체합의, 1974년 가부동수 부결이라는 실패를 겪었지만, 1975년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를 자신이 적대하던 유엔의 이름으로 발표할 수 있었다.

북한은 1973년 WHO 가입으로 유엔대표부를 개설하고, 처음으로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토의에 참가하는 데 성공하면서 1947년 한국문제 상정 후 유엔에서 처음 진전을 이뤘다. 그리고 유엔에서 약 2년간 미국과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비록 그 성과는 이듬해 판문점도끼만행사건 등으로 국제여론의 역풍이 불면서 한반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 결의 3390B호의 채택과정은 초강대국들을 상대로 약소국인 북한이 성공을 거둔 외교사례로서 대북외교의 측면에서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1970년대 전반 북한의 대중소외교는 약소국인 북한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국익을 극대화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면서 동시에 국제정치에서 삼각관계의 분석틀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 연구는 삼각관계의 체계적인 적용에서 미흡하지만, 삼각관계의 측면에서 데탕트기 한국문제의 이면을 조명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1. 1차 문헌

### 1 ) 북한 문헌


김일성, 1967,『김일성 저작선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68,『김일성 저작선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72,『김일성 저작선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74,『김일성 저작선집』, 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78,『김일성 저작선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75,『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74년)』, 평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_____, 1982,『김일성 저작집』, 19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_____, 1984,『김일성 저작집』, 26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조선중앙통신사 편, 1965,『조선중앙년감 1965』,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_____, 1967,『조선중앙년감: 1966~196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_____, 1970,『조선중앙년감: 1970』,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_____, 1973,『조선중앙년감: 197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_____, 1974,『조선중앙년감: 1974』,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_____, 1975,『조선중앙년감: 1975』,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박태호, 1987,『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관계사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근로자』

『로동신문』


### 2 ) FRUS

『United Nations 1969-1972』, FRUS, 1969~1976, Volume V.
『Soviet Union, October 1971-May 1972』, FRUS, 1969-1976, Volume XIV.
『Soviet Union, June 1972-August 1974』, FRUS, 1969-1976, Volume XV.
『Soviet Union, August 1974 - December 1976』, FRUS, 1969-1976, VOLUME XVI.
『CHINA, 1969-1972』, FRUS, 1969-1976, VOLUME XVII.
『Chin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XVIII.
『Korea』, FRU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Foundations of Foreign Policy,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XXXVIII.
『Documents on East and Southeast Aisa, 1973~1976』, FRUS, 1969-1976, Volume E-12.
『Untied Nations 1973 ~1976』, FRUS, 1969~1976, Volume E-14, Part 1.

### 3 ) 대통령기록관 해외기록물 수집자료

"Memorandum for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NSSM 171 Follow-On--Analysis of the Role of the Army Division in Korea," SRG Meeting Korea 2/19/74, Richard Nixon Library.
“Memorandum from W. R. Smyser to Secretary Kissinger: Temination of the U.N. Command in Korea.,” NSDM 251, Richard Nixon Library.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Discussion with FONMIN ON UN Command.,” NSDM 251, Richard Nixon Library.

“Telegram from Brent Scowcoft to Henry A. Kissinger,” HAK Trip - Mid East, Islamabad, Peking, Tokyo, Seoul HAKTO 1-17, Richard Nixon Library.

“Issues/ Talking Points: North Korea,” November 1974 - Japan, Korea and USSR - Briefing Book - Seoul (2), Gerald R. Ford Library.

“Issues/Taking Points: UNC Alternatives,” November 1974 - Japan, Korea and USSR - Briefing Book - Seoul (2), Gerald R. Ford Library.

“Korea: DPRK proposed direct peace talks with United Sates,” Korea (4), Gerald R. Ford Library.

"Korea: February Talks. Nov. 28-Dec. 7, 1975," Far East International Issues Presidents Copy (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Korea: June Talks. Nov. 28-Dec. 7, 1975," Far East International Issues Presidents Copy (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Korea,” Nov. 28-Dec. 7, 1975-Far East International Issues Presidents Copy (5), Gerald R. Ford Library.

“Korea: November 1973 talks,” Nov. 28-Dec. 7, 1975-Far East International Issues Presidents Copy (5), Gerald R. Ford Library.

“Korea: October 1975 talks,” Nov. 28-Dec. 7, 1975-Far East International Issues Presidents Copy (5), Gerald R. Ford Library.

“Korea - Pyongyang Shows Concern over Loyalty of Communist Allies,” NSC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Saff Files Box 8, Gerald R. Ford Library.

“Korean Question Issues and Talking Points,” October 19-23, People's Republic of China - Briefing Book for China - Third Country Issues (2), Gerald R. Ford Library.

"Memorandum from Brent Scowcroft to Gerald R. Ford. September 29, 1975," September 21-25, 1975 and September 28 - October 1, 1975 - United Nations - HAK Messages for the President, Gerald R. Ford Library.

"Memorandum from EA-robert S. Ingersoll to the Secretary: Your meeting with ROK Foreign Minister Kim Wednesday, March 20.," Korea (3),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Memorandum from Henry A. Kissinger to Gerald R. Ford: Information Items, December 16, 1974," Presidential Daily Briefing, December 16, 1974, Gerald R. Ford Library.

"Memorandum from the Situation Room to Henry A. Kissinger: Additional Information items, September 10, 1974," Presidential Daily Briefing, September 10, 1974, Gerald R. Ford Library.

"Memorandum from the Situation Room to Henry A. Kissinger: Additional Information Items, April 17, 1975," Presidential Daily Briefing, April 17, 1975, Gerald R. Ford Library.

"Memorandum from the Situation Room to Henry A. Kissinger: Additional Information Items, April 19, 1975," Presidential Daily Briefing, April 19, 1975, Gerald R. Ford Library.

"Memorandum from the Situation Room to Henry A. Kissinger: Additional Information Items, April 26, 1975," Presidential Daily Briefing, April 26, 1975, Gerald R. Ford Library.

"Memorandum from the Situation Room to Henry A. Kissinger: Additional Information Items, August 1, 1975," Presidential Daily Briefing, August 1, 1975,, Gerald R. Ford Library.

"Memorandum from the Situation Room to Henry A. Kissinger: Additional Information Items, September 22, 1975," Presidential Daily Briefing, September 22, 1975, Gerald R. Ford Library.

"Memorandum from the Situation Room to Henry A. Kissinger: Noon Notes, August 12, 1975," Noon and Evening Notes, June

3, 1975, Gerald R. Ford Library.
"Memorandum of Conversation: The President's Visit and Communique; Bilateral Relations; Indochina MIA; Korea; South Asia," October 19-23, 1975 - Kissingers Trip (4), Gerald R. Ford Library.
"Memorandum of Conversation: The Soviet Union; CSCE; Europe; Japan; Angola; Indochia; the President's China Trip; the Global Strategic Situation; Korea," September 28, 1975 - Kissingers Meeting with PRC Officials in New York, Gerald R. Ford Library.
"Memorandum from Thomas J Barnes to Henry A. Kissinger: Follow-Up tp Our Korean Strategy in the U.N," Korea (13), Gerald R. Ford Library.
“Memorandum from W. E. Colby to Gerald R. Ford: Diplomatic Initiatives in Korea: NSSM-190,” NSC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Staff Files Box 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Memorandum from W. R. Smyser, Richard H. Solomon to Secretary Kissinger: NSSM 190: Diplomatic Initiatives in Korea. SRG Meeting Korea 2/19/74.,” SRG Meeting Korea 2. 19. 74.,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Memorandum from W. R. Smeyser to Secretary Kissinger: U.K. Plans to Expand Relations with North Korea.”, Korea (3),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Memorandum from W. R. Smeyser to Secretary Kissinger: Your meeting with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Kim on March 20, 1974.,” Korea (3),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251 to the Secretary of Defense: Termination of the U.N. Command in Korea.,” Korea (4), Gerald R. Ford Library.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Korean item in UNGA," People's Republic of China - Korea (2), Gerald R. Ford Library.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Korean Question at UN, October 6, 1974," Korea - State Department Telegrams To SECSTATE - NODIS (1), Gerald R. Ford Library.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Visit of Kim Il-sung to Peking," Korea - State Department Telegrams To SECSTATE - NODIS (5), Gerald R. Ford Library.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WHITLAM-KOSYGIN Disscussion on Korea," Korea - State Department Telegrams To SECSTATE - NODIS (3), Gerald R. Ford Library.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CONSUL JERUSALEM: US Policy on Korea at the UN and the UN COMM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 Korea (2),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Telegram from SECSTATE to SECSTATE WASH DC: US Policy on Korea at the UN and the UN Comm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 Korea (2), Gerald R. Ford Library.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RUEHCK/AMEMBASSY SEOUL: Discussions with ROKG on UN Command.," NSDM 251, Nixon Presidential Library.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RUMJSL/AMEMBASSY Seoul: Furthr Response to PRC on UNC Proposal," Korea - State Department Telegrams From SECSTATE - NODIS (1), Gerald R. Ford Library.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RUMJSL/AMEMBASSY Seoul: Statement to PRC on Korea and UNC," Peoples Republic of China - State Department Telegrams From SECSTATE -

NODIS (1), Gerald R. Ford Library.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RuMJSL/AMEMBA SSY Seoul: PRC Views on UNC,” Peoples Republic of China - State Department Telegrams From SECSTATE - NODIS (1), Gerald R. Ford Library.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USLO Peking: Korea,” Peoples Republic of China - State Department Telegrams From SECSTATE - NODIS (1), Gerald R. Ford Library.
“Telegram from USDEL Secretary Aircraft to SECSTATE WashDC: Secretary's Actions,” October 19-23, 1975 - Peoples Republic of China - SECTO (1), Gerald R. Ford Library.
“Telegram from USIMISSION USUN New York to SECSTATE WashDC: Korea,” People's Republic of China - Korea (2), Gerald R. Ford Library.
“Telegram from USIMISSION USUN New York to SECSTATE WashDC: Korea and KHMER,” USUN (U.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O SECSTATE, EXDIS (1), 9. 11. 74. - 2. 28. 75, Gerald R. Ford Library.
“Telegram from USIMISSION USUN New York to SECSTATE WashDC: Letter from Secretary General to Secretary,” USUN (U.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O SECSTATE, NODIS (6), 10. 1. 75. - 12. 31. 75., Gerald R. Ford Library.
"Telegram from USIMISSION USUN New York to SECSTAT WashDC: North Korean Approach to Waldheim," USUN (U.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O SECSTATE, NODIS (6), 10. 1. 75. - 12. 31. 75., Gerald R. Ford Library.
“Telegram from USIMISSION USUN New York to SECSTATE WashDC: Korea in Security Council Chinese View,” People's Republic of China - Korea (2), Gerald R. Ford Library.
“Telegram from USIMISSION USUN New York to SECSTATE

WashDC: Korea in 29th GA: December 13 SITREP," USUN (U.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O SECSTATE, EXDIS (1), 9. 11. 74. - 2. 28. 75, Gerald R. Ford Library.

"Telegram from USIMISSION USUN New York to SECSTATE WashDC: Korea in 29th GA: SCAL -KIM Conversation DEC 10," USUN (U.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O SECSTATE, EXDIS (1), 9. 11. 74. - 2. 28. 75, Gerald R. Ford Library.

"Telegram from USIMISSION USUN New York to SECSTATE WashDC: US-ROK Initiative on Korean Question at UN, Proposed French Amendments to Friendly resolution on Korea," USUN (U.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O SECSTATE, NODIS (5), 8. 1. 75. - 9. 30. 75., Gerald R. Ford Library.

"The Korean Question on the United Nations," November 1974 - Japan, Korea and USSR - Briefing Book - Seoul (3), Gerald R. Ford Library.

"Korea," Nov. 28-Dec. 7, 1975-Far East International Issues Presidents Copy (5),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Telegram from AMCONSULHong Kong to SECSTATE WashDC: China marks 25th Anniversary of the CPV Entry into war," Peoples Republic of China - Korea (6),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 4 ) 우드로 윌슨 센터 디지털 아카이브(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Soviet Ambassador to North Korea Vasily Moskovsky and Romanian Ambassador to North Korea [M.] Bodnaras [1]," August 22, 1963.

"Record of Conversation between Vice-Foreign Minister Qiao Guanhua and North Korean Ambassador in China Pak

Se-chang," October 11, 1965.
"Record of Second Conversation of Premier Zhou Enlai and Vice Premier Chen Yi with Foreign Minister Pak Seong-cheol," November 11, 1965.
"Note on a Conversation with the 1st Secretary of the Soviet Embassy, Comrade Zvetkov, on 15 March 1967," March 16, 1967.
""Col. Mieczysław Białek, 'Record of Conversation of the Marshall of the Soviet Union Com. Zakharov with Com. Kim Il Sung during Com. Zakharov's Visit in the DPRK'," June 10, 1970.
"Telegram,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September 05, 1970.
"Minutes of Conversation on the Occasion of the Party and Government Delegation on behalf of the Romanian Socialist Republic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une 10, 1971.
"Telegram, Embassy of Hungary in Chin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September 24, 1971.
"Telegram,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November 01, 1971.
"Telegram,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December 20, 1971.
"Letters between Ahmet H. Ozbudun and C.V. Narasimhan," March 08, 1972.
"From the Journal of N.G. Sudarikov, 'Record Of A Conversation with Kim Il Sung, General Secretary of the KWP CC and Chairman of the DPRK Cabinet of Ministers, 19 June 1972'," July 06, 1972.
"Report from Etre Sándor, 'Discussion with Comrade Sebestyén. Comrade Sebestyén's assessment of the situation.'," September

28, 1972.
"A. Putintsev and V. Gorovoy, 'Key Aspects of Korean-Chinese relations in 1972'," December 08, 1972.
"Note on a Conversation with USSR Embassy Counselor Comrade Denisov on 22 January 1973 in the USSR Embassy ," February 01, 1973.
"Theses On the Present State of Relations between DPRK and PRC," February 01, 1973.
"Telegram from Beijing to Bucharest, SECRET, Urgent, No. 059.139," February 13, 1973.
"Telegram from Istanbul to Bucharest, No. 037032." February 19, 1973.
"Letters between Ahmet H. Ozbudun, C.V. Narasimhan, and Robert Muller," February 23, 1973
"Note on the Meeting with Comrade O.B. Rakhmanin, Deputy Head of International Department of CC," February 28, 1973.
"Minutes of Conversation Taken on the Occasion of the Audience Granted by Comrade Nicolae Ceausescu to the Delegat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March 08, 1973.
"Note On a Conversation with Comrade Kurbatov, 1st Secretary of the USSR Embassy, on 26 March 1973 in the USSR Embassy." March 28, 1973.
"Telegram from Beirut, No.015.088, Urgent, SECRET." April 02, 1973.
"Hungarian Embassy in Ethiopia, Telegram, 6 April 1973. Subject: DPRK-Ethiopian relations.," April 06, 1973.
"Telegram from Pyongyang, No.061.119, Urgent, SECRET." April 11, 1973.
"Telegram from Pyongyang, No.061.150, Urgent, SECRET." April

23, 1973.
"Telegram from the First Directorate to Washington, DC, No.01/04493." May 05, 1973.
"Letters between Shail Upadhya and C.V. Narasimhan." June 05, 1973.
"Message from the Presiden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Il Sung, to the President of the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Josip Broz Tito," July 07, 1973.
"On the Visit of a PRP Party and Parliamentary Delegation to the DPRK." July 16, 1973
"Telegram from New York to Bucharest, SECRET, No. 091.722, Normal," July 31, 1973
"Note On a Meeting in the Embassy of Czechoslovakia on 5 September 1973." September 13, 1973.
"Letters between Ahmet H. Ozbudun and Ismat Kittani. September 26," 1973.
"Hungarian Embassy in the DPRK, Report, 27 September 1973. Subject: The DPRK and the Non-Aligned Summit in Algiers," September 27, 1973.
"Memorandum on the Conversation between Kim Il Sung and Todor Zhivkov." October 30, 1973.
"Telegram from Pyongyang, SECRET, No.061487, Urgent. October 30," 1973.
"Conversation with the Ambassador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DRV)." OCTOBER 31, 1973.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SECRET, Regular, No. 061.497." November 03, 1973.
"Letter, Ahmet H. Ozbudun to Ismat Kittani, "UNGA Prospects on the Korean Question?"," November 06, 1973.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SECRET, No. 061.465,

Urgent." November 15, 1973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November 22, 1973.
"Telegram from New York to Bucharest, SECRET, No. 052312." November 26, 1973.
"Memorandum for General Scowcroft, through W.R. Smyser, from John A. Froebe Jr., "Proposed WSAG Meeting on Korean Situation"," December 03, 1973
"Memorandum for Secretary Kissinger from Richard H. Solomon, "The Korean Situationand the China Element," December 3, 1973.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SECRET, No. 61.537." December 06, 1973
"Meeting between Minister Hong and the Soviet Ambassador to Rwanda." January 30, 1974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SECRET, Urgent, No. 060.127." March 24, 1974.
"Report of Meeting with the Soviet Diplomat (Summary)." April 04, 1974.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SECRET, Urgent, No. 060.180." April 22, 1974
"Note from the Eighth Meeting of the Deputy Heads of the CC International Departments of Eight Parties in Ulaanbaatar devoted to the Struggle with Maoism," June, 1974.
"The Foreign Polic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its Position towards the Main International Matters." July 18, 1974.
"The Official Visit Paid b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Romania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ugust 19, 1974,

"Information about a Visit by Comrades Gericke and Stritzke to the DPRK." September 09, 1974
"Conversation with Comrade Pimenov, Counselor at USSR Embassy, on 29 October 1974." November 04, 1974.
"Record of Discussion between Foreign Ministers of North Korea and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December 20, 1974.
"Record of a Meeting between Kim Il Sung and L. Rinchin." December 21, 1974.
"Note from GDR Embassy in Pyongyang to Comrade Liebermann." January 14, 1975
"Message from the Presid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Il Sung, to the President of the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Josip Broz Tito," March 01, 1975.
"South Korean Report on Kim Il Sung's Attempt to Visit the USSR in 1975," April, 1975
"On the Visit of a DPRK Party and Government Delegation Headed by Kim Il Sung to the PR China from 18 to 26 April 1975." April 29, 1975.
"South Korean Telegrams on Visit to China by North Korean Leader Kim Il Sung." May, 1975
"Summarized Evaluation of Kim Il Sung's Visit to the PR China (18 to 26 April 1975)." May 06, 1975.
"Telegram from New York to Bucharest, No. 052.467." May 09, 1975.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SECRET, No. 059.156," May 10, 1975.
"Note concerning a Conversation between Ambassador Everhartz with the Head of Department II in the DPRK Foreign Ministry, Comrade Choe Sang-muk, about the Visit by Comrade Kim Il

Sung to the PR China," May 12, 1975.
"Telegram from Moscow to Bucharest, SECRET, No. 050.572." MAY 19, 1975.
"Minutes of Conversation taken on the Occasion of the Romanian - Korean Discussions from May 23, 1975
"Letter From GDR Ambassador Wenning to Bulgarian Member of the Politburo and Secretary of SED Central Committee Comrade Hermann Axen," June 18, 1975.
"Information on the Talks between Kim Il Sung and Todor Zhivkov." June 18, 1975.
"Letter, John Scali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June 27, 1975.
“Statement by the Minsister of Foreign Affairs concerning the inplementation of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333 on the Question of Korea.” June 27, 1975.
"Telegram from New York to Bucharest, No. 052648," July 01, 1975.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No. 01/06647," July 04, 1975.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No. 059/219," July 15, 1975.
"Telegram from Washington to Bucharest, No. 074.783," July 24, 1975.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July 30,
"Telegram from Tokyo to Bucharest, No. 069.711," August 15, 1975.
“Report from the GDR Embassy in the DPRK.” September 01, 1975,
"Telegram from Washington to Bucharest, No. 075119," October

11, 1975.

### 5 ) 대한민국 외교문서

“소련의 대외정책, 1972”, (E-0009-05).
"비동맹 외상회의, 제4차. Georgetwon(가이아나) 1972.8.8-12." (F-0003-01
"비동맹 정상회의, 제4차. Algiers(알제리) 1973.9.5-9. 전3권 V.1 기본대책," (F-0004-01),
“비동맹 정상회의, 제4차. Algiers(알제리) 1973.9.5-9. 전3권 V.2 우리입장 지지교섭,” (F-0004-02).
"비동맹 정상회의, 제4차. Algiers(알제리) 1973.9.5-9. 전3권 V.3 회의경과," (F-0004-03).
"비동맹 외상회의, 제4차. Georgetwon(가이아나) 1972.8.8-12. 전3권 (V.2)," (F-0005-02)
"비동맹 외상회의, 제4차. Georgetwon(가이아나) 1972.8.8-12. 전3권 (V.3)," (F-0005-03),
“1974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Algiers(알제리) 1974.3.19-21,” (F-0005-04)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V.2),” (F-0006-02)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V.3),” (F-0006-03)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V.6),” (F-0007-01)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V.7),” (F-0007-02),
“1975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Havana(쿠바) 1975.3.17-19,” (F-0007-05)
"소련의 아시아집단안보구상, 1972~73," (G-0031-09).

“북한의 서해안 5개 도서 접속수역 침범 사건, 1973.11.19-12.19. 전2권 V.1 기본문서,” (G-0034-06),
“UN(유엔) 총회, 제26차. New York, 1971.9.21-12.22: 제1권 기본대책 Ⅰ," (H-0015-04).
"UN(유엔) 총회, 제26차. New York, 1971.9.21-12.22: 제3권 한국문제 토의대비 전략 및 결과,“ (H-0015-06).
”유엔(UN)특별총회, 제6차. New York, 1974.4.9-5.2. 전2권(V.1),” (H-0028-06).
"유엔(UN)특별총회, 제6차. New York, 1974.4.9-5.2. 전2권(V.2)," (H-0029-01),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V.1 기본대책 1 - 1975.1-2월)," (H-0030-06),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V.13 결과보고 1)," (H-0031-08).
"유엔특별총회, 제7차(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국제협력) New York, 1975.9.1-16," (H-0034-07),
"소련의 대한정책 및 우방국을 통한 한, 소련개선 1973~74," (2010-87-02),

### 6 ) 유엔 문서 (https://www.un.org/library)

- 결의안

"Complaint of aggression upon the Republic of Korea," UNSC, S/RES/83.
“Complaint of aggression upon the Republic of Korea”, UNSC, S/RES/84.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UNGA, A/RES/112 (Ⅱ), 1947.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UNGA, A/RES/195(III).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UNGA, A/RES/293(IV).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UNGA, A/RES/376(V).
“The Korean question”, UNGA, A/RES/811(IX)
“The Korean question”, UNGA, A/RES/1740(XVI)
“The Korean question”, UNGA, A/RES/2466(XXIII)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devoted to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UNGA, A/RES/3343(XXIX)

- 총회 문서
"Creation of favorable conditions to accelerate the independent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UNGA, A/9145.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GA, A/9146.
"Documents of the Fourth Conference of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of Non-Aligned Countries," UNGA, A/9330.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UNGA, A/9559, Supp. No.1.
"Question of Korea: Report of he First Committee", UNGA, A/9973.

- 제1위원회 문서
“Question of Korea: urgent need to implement fully the consensus of the 28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Korean question and to maintai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UNGA, A/C.1/L.676.
"Question of Korea: withdrawal of all foreign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under the flag of the United Nations", UNGA, A/C.1/L.677.

“Urgent need to implement fully the consensus of the twrenty-eigh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Korean question and to maintain peace and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UNGA, A/C.1/L.708.

"Urgent need to implement fully the consensus of the twrenty-eigh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Korean question and to maintain peace and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UNGA, A/C.1/L.708/Rev.1.

"Creation of favourable conditions for converting the armistice into a durable peace in Korea and accelerating the independent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UNGA, A/C.1/L.709.

- 유엔년감

United Nations (eds.), 1949, *The Year of the United Nations, 1947~1948*, New York: United Nations.

_____, 1950, *The Year of the United Nations, 1948~1949,* New York: United Nations.

_____, 1951, *The Year of the United Nations*, *1950,* New York: United Nations.

_____, 1955, *The Year of the United Nations, 1954,* New York: UNited Nations.

_____, 1961, *The Year of the United Nations, 1960*, New York: United Nations.

_____, 1963, *The Year of the United Nations, 1961,* New York: United Nations.

_____, 1974, *The Year of the United Nations, 1971*, New York: United Nations.

_____, 1975, *The Year of the United Nations, 1972,* New York: United Nations.

_____, 1976, *The Year of the United Nations, 1973,* New York: United Nations.

7 ) 기타

국가기록원, “정부수립과 유엔: 한국문제의 UN상정 및 총선거 결의”, 『한국과 유엔』
https://theme.archives.go.kr/next/unKorea/resolution.do(검색일: 2021년 7월 22일)
_____, “휴전협정 원문”, 『한국과 유엔』.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Y&archiveEventId=0049272219#1(검색일: 2021년 7월 22일)
"남북한 수교 현황(연, 1948~2021)," 수교국/미수교국 현황,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77. (검색일: 2021년 7월 30일)
“Charter of Algiers,”(Algiers, Algeria, 10-25 October 1967), http://www.g77.org/doc/algier~1.htm.(검색일: 2021년 7월 29일)“
“Lusaka Declaration on Peace, Independence,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emocratis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adopted by the Third Conference of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of Non-Aligned Countries, September 10, 1970. https://ris.org.in/documents-non-aligned-movement
The New China Policy: Its Impact on the United States and Asia,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ouse of Representatives. 92nd Congress, Session,” May 2, 3, 4, 16 and 17, 1972, Selected Historical Materials in the Library of Congress Relating to Korea: Congressional Record.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철 AUS159_00_00C0006)

## 2. 2차 문헌

### 1 ) 국내 출판물

( 1 ) 단행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편, 2015,『한국외교와 외교관: 이시영 전 주UN대사』, 서울: 국립외교원.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9,『북한관계사료집』, 65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_____, 2009,『북한관계사료집』, 66권, 과천: 국가편찬위원회.

국토통일원 편, 1988,『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3권, 서울: 국토통일원.

김광운, 2003,『북한정치사연구: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 서울: 선인.

김계동, 2002,『북한의 외교정책: 벼랑에 선 줄타기외교의 선택』, 서울: 백산서당.

김보미, 2019,『김일성과 중소분쟁: 북한 자주외교의 기원과 형성(1953~1966)』,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리 즈수이, 1995,『모택동의 사생활 ②』, 손풍삼 옮김, 서울:고려원.

박명림, 1996,『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서울: 나남.

박승무, 송봉헌, 이광재, 홍승목 편, 2017,『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72년』, 서울: 외교부.

박재규 편, 1986,『북한의 대외정책』,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비자이, 프리샤드, 2015,『갈색의 세계사: 새로 쓴 제3세계 인민의 역사』, 박소현 옮김, 서울: 뿌리와 이파리.

빅터 차, 2004,『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김일영, 문순보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서동진, 박소현 편, 2020,『비동맹 독본』, 서울: 현실문화연구.

시모토마이 노부오, 2006,『북한 정권 탄생의 진실』, 이혁재 옮김, 서울: 기파랑.

양성철, 강성학 편, 1995,『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이종석, 2000,『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정규섭, 1997,『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일신사,
정진위, 1985,『북방삼각관계』, 서울: 법문사.
중국 중앙공산당사연구실, 2014,『중국공산당역사 (중)』, 홍순도ㆍ홍광훈 옮김, 서울: 서교출판사.
지양사 편집부 편, 1985,『비동맹운동』, 서울: 지양사.
최명해, 2009,『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홍석률, 2012,『분단의 히스테리: 공개문서로 보는 미중관계와 한반도』, 서울: 창비
_____, 2020,『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5: 1970년대 UN에서의 UNCURK 해체 문제』, 서울: 경인문화사.
황장엽, 2010,『황장엽 :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시대정신.
G. F. 허드슨, 리차드 로웬탈, 로데릭 맥화퀴, 2004,『중소분쟁: 자료와 분석』, 김유 옮김, 고양: 인간과 사회.

( 2 ) 학위논문

김도민, 2020,『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정성윤, 2007,『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과 미국의 위기정책결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종기, 1972,『국제연합과 한국: 한국문제 토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 학술논문

강윤희, 2014, “미중 데탕트와 소련: 국제정세 인식과 대응,”『EAI 워킹페이퍼』.
권오중, 2005, "제네바 한국평화회담(1954)의 진행, 결과, 그리고 의미: 한반도 6자회담의 원형",『통일정책연구』, vol.14, no.2.
기광서, 2010, "훈령으로 본 소련의 미소공동위원회 전략."『역사문제연

구』, vol. 24.
김보미, 2013, "중소분쟁시기 북방삼각관계가 조소,조중동맹의 체결에 미친 영향(1957~1961)," 『북한연구학회보』, Vol.17, No.2.
김보영, 2008, “한국전쟁 휴전회담 협상전략과 지휘체계”, 『사학연구』, vol.90.
_____, 2015,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과 외국군 철수 의제”, 『군사지』, vol. 95.
김선경, 1975, “한국의 대「유엔」외교정책,” 『녹우연구논집』, Vol.17.
김용서. 2012, “1960년대 중반 북한의 자주외교노선 채택에 관한 연구.” 『세계정치』, Vol. 16.
김창진, 2019, “냉전 시기 소련-북한의 비대칭동맹과 북한의 자주외교.” 『슬라브 연구』, Vol. 35, No. 4.
김태균, 이일청, 2018, “반둥 이후: 제3세계론의 쇠퇴와 남남협력의 정치세력화”, 『국제정치논총』, Vol.58, No.3.
도지인, 2014, “의도하지 않은 휴전: 중소분열에서의 미국요인과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LTBT), 1962-1963.” 『중소연구』, Vol. 37, No. 4.
모춘흥, 은용수, 2016, “1960년대 북한의 병진노선 채택과 군사적 모험주의에 관한 역사적 분석.” 『통일문제연구』, Vol. 28, No. 1.
박봉식, 1980, “중립주의정치의 동태 - 비동맹운동의 성격변화와 관련하여 북괴(北傀)의 비동맹노선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Vol. 6, No. 1.
박시영, 2016, “북한의 위협인식과 전략적 선택의 메커니즘 연구.” 『현대북한연구』, Vol. 19, No. 1.
박영희, 1974, “유엔과 한국문제,” 『행정학보』, Vol.2.
박종철, 2008, "중소분쟁 초기 북한·중국의 연대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1.
_____, 2009, “북한의 종파사건과 중국.” 『민주주의와 인권』, Vol. 9, No. 3.
_____, 2011, "중소분쟁과 북중관계(1961~1964년)에 대한 고찰," 『한중사회과학연구』, Vol.9, No.2.

박치영, 1994, “한국문제와 유엔결의 분석,”『사회과학논총』, Vol.12.
박홍서, 2013, “냉전기 중국의 대소련 동맹딜레마와 군사 행태,”『현대중국연구』, Vol. 15, No. 1.
신종훈. 2016, "1945년 여름, 포츠담."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vol.38, no. 1.
안치영, 2015, “중소관계와 한국전쟁의 결정.”『중앙사론』, Vol. 42, No. 42.
엄정식, 2013, “푸에블로호 사건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접근.”『군사』, No.86.
옥창준, 2020, "냉전기 북한의 상상 지리와 평양 선언", 『통일과 평화』, Vol.12, No.1.
유지아, 2017, "한국문제 유엔이관 이후: 유엔총회에서 미소양군 철수문제 논의과정", 『중앙사론』, vol. 46,
이기종, 1997, “북한의 대 제 3 세계 비동맹 외교 정책.”『시민정치학회보』, Vol. 1.
이동률, 2014, “중국의 1972년 대미 데탕트: 배경, 전략, 역사적 함의,”『국가전략』, Vol.20, No.3.,
이미경. 2000, “한국전 후 북한과 중국 , 소련의 관계 : 협력속의 균열.”『중소연구』, Vol. 24, No. 4.
_____, 2003(a), “1950-60년대 북한·중국·소련 삼각관계의 형성과 균열,”『중소연구』, Vol.26, No.4.
_____, 2003(b),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자주노선 정립: 1960년대 시기를 중심으로.”『한국국제정치학회』, Vol. 43, No. 2.
이상숙, 2007, “1960년대 중반 북한 -중국의 갈등과 북한의 자주노선”, 『북한학연구』, Vol.3, No.2.
_____, 2008, “데탕트 시기 북중관계의 비대칭갈등과 그 영향,”『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3,
이우영, 1979, "남북한의 대비동맹국 외교경합 분석", 『통일문제연구』, Vol.8.
이한기, 1976, "한국통일문제와 UN의 권능", 『국제법학회논총』, Vol.21,

No.1·2.
임방순, 한 마크 만균. 2016, “중,소 분쟁 격화기 중,소의 대북한 원조경쟁과 북한의 자주노선: 1961~1967.”『사회과학연구』, Vol. 24, No. 1.
전재성, 2005, “1960년대와 1970년대 세계적 데땅뜨의 내부 구조: 지역적 주도권의 변화과정 분석,”『국제정치논총』, Vol.45, No.3.
최명해, 2008, “1960년대 북한의 대중국 동맹딜레마와 ‘계산된 모험주의.’” 한국국제정치학회, vol. 48, no. 3.
최종기, 1983, “국제연합과 한국문제 - 소련 및 공산제국의 주장을 중심으로,”『행정논총』, vol.21, no.2.
하경근, 1980, “비동맹운동과 한국.”『국제정치논총』, Vol. 20.
홍석률, 2004, “1970년대 전반 북미관계: 남북대화, 미중관계 개선과의 관련 하에서”,『국제정치논총』, Vol.44, No.2.
홍순남, 1986, "비동맹 회의와 아프리카의 정치", 『한국아프리카학회지』, Vol.1.
홍용표, 2006, “1954년 제네바회의와 한국전쟁의 정치적 종결 모색”,『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8, no.1.
홍종욱, 2018, “1950년대 북한의 반둥회의와 비동맹운동 인식 -잡지『국제생활』기사를 중심으로,”『동북아역사논총』, Vol.61.
황동하, 2003, “스탈린과 한국전쟁의 발발 -중,소 관계를 중심으로.”『서양사론』, Vol. 79.

## 2 ) 해외 출판물

### ( 1 ) 단행본

A. W. Singham and Shirley Hune, 1986, *Non-Alignment in an age of alignments, Westport*, Conn.: L. Hill; London: Zed Books.
Chen Jian, 2001, *Mao's China and the Cold War*,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Christian F. Ostermann and James F. Person (eds.), 2011, *The*

*rise and fall of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874*, Washington: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

Jürgen Dinkel, 2019, *The Non-Aligned Movement: Genesis, Organization and Politics(1927-1992),* Translated by Alex Skinner, Leiden, Boston: Brill.

Lowell Dittmer, 1992, *Sino-Soviet Normalization and Its International Implications, 1945-1990,*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Odd Arne Westad (eds.), 1998, *Brothers in Arms: the rise and fall of the Sino-Soviet alliance, 1945-1963*,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Peter Willetts, 1978, *The Non-Aligned Movement: The Origins of a Third World Alliance,* London: Frances Pinter; New York: Nichols Pub. Co.

Philippe Braillard and Mohammad-Reza Djalili, 1984, *The Third World and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Frances Pinter; Boulder, Colo.: Lynne Rienner Publishers.

Robert A. Mortimer, 1984, *The Third World Coali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Boulder Colo.: Westview Press.

Robert Jervis, 1997, *System Effects: Complexity in Political and Social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Sandra Bott et al (eds.), 2016, *Neutrality and Neutralism in the Global Cold War: Between or Within the Blocs?*, London, New York : Routledge.

Zubok, et al, 1996, *Inside the Kremlin's Cold War: from Stalin to Khrushchev*,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2 ) 학술논문

Bernd Schaefer, 2010, "Overconfidence Shattered - North Korean Unification Policy, 1971-1975",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 Project: Working Papers #2.*

Georg Simmel, 1902, “The Number of Members as Determining the Sociological form of the Group Ⅰ”.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8, No.1.

Georg Simmel, 1902, “The Number of Members as Determining the Sociological form of the Group Ⅱ”.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8, No.2.

Lowell Dittmer, 1981, “The Stratef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Vol.33, No.4.

Nooteboom, B, 2006, “Simmel’s Treatise on the Triad”. *Journal of Institutional Economics*, Vol.2, No.3.

T. Caplow, 1956, "A Theory of Coalitions in the Tria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21, No.4.

Zhang Shu Guang and Chen Jian, 1995-1996, "The Emerging Disputes between Beijing and Moscow: The New Available Chinese Document, 1956-1958,"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No.6/7 (Winter 1995~Spring 1996).

# Abstract

## A study on the Passage of the Resolution on the 'Question of Korea' by North Korea at the 30th UN General Assembly
### : Focusing on North Korea's China-Soviet Bargaining Leverage and Non-Aligned Diplomacy



Ikjei Choi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general, power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great powers control the weaker powers by force,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is formed through compromises/agreements between the great powers. Inevitably, the weaker countries cannot be free from the pressure and influence of the great powers, and in many cases have no choice but to comply with the demands of the great powers. A weaker power seeks to borrow the power of another great power to pursue its own ends in conflict with the great power. However, when consensus between great powers are established according to strategic interests, the interests of the weaker powers between the great powers are easy to ignore. However,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se myths may not be fully applied under certain conditions. In other words,

it analyzes diplomatic cases in which weak countries use international relations to offset the power gap with great powers and maximize their autonomy. Ultimately, it explores the possibility that the weaker countries can achieve their diplomatic goals in the face of friction with the great powers.

Specifically, this study deals with the passage of Resolution 3390B on Korean issues at the 30th UN General Assembly in 1975. At that time, North Korea, a weak country, was able to exert diplomatic autonomy and influence by passing a resolution on the Korean issue against United Nations. The resolution required the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Korea at the UN General Assembly. It was an exceptional case during detente among great powers. What was the factor that allowed North Korea, a weaker country, to pass a resolution on the Korean issue calling for the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Korea in a détente situation where the neighboring powers wanted to maintain the status quo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olitical victory of North Korea's diplomacy in the diplomatic battle over the UN's resolution on the Korean issue in 1975 was the result of North Korea's leveragef for Soviet Union and Chian as well as non-aligned diplomacy working successfully at the UN in the first half of the 1970s. The Korean issue was first brought up to the United Nations by the United States at the 2nd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1947, and during the Korean War, the United Nations intervention was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and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Reunification of Korea (UNCURK). Until 1972, due to the strong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Nations, the passage of pro-North Korea resolutions on the Korean issue failed every time.

In the triangular Sino-Soviet-North Korea relationship formed during Korean War, the Sino-Soviet cooperation acted as a strong shackle and control over North Korea. However, in the late 1950s, Sino-Soivet control over North Korea was loosened as the Sino-Soviet conflict surfaced. However, in the 1960s, North Korea soon became involved in Sino-Soivet disputes and faced many difficulties. During this period, North Korea, which experienced both Soviet and Chinese sanctions, continuously strives to strengthen its independence among China and Soviet Union. In the end, while the Sino-Soviet conflict in the 1970s escalated, North Korea succeeded in restoring friendly relations with both China and the Soviet Union. If you look at diplomatic documents from the Communist bloc and declassified documents from the United States, you can see how North Korea was maximizing its autonomy by strategically using the Sino-Soviet dispute at that time. China and the Soviet Union had no choice but to actively cooperate in North Korean diplomac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le competing with each other for North Korean support. This change in Sino-Soivet-North Kora triangle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pivot concept of the triangle proposed by Jervis and Dietmer.

The strengthening of North Korea's independence is also reflected in the process of how North Korea's diplomacy broke out of camp diplomacy in the 1950s and expanded independent diplomacy in the late 1960s, leading to non-aligned diplomacy. In addition, North Korean public documents and South Korean diplomatic documents show the process of North Korea's success in joining the non-aligned movement despite being a socialist country with the support of friendly countries such as Algeria and Cuba, while actively riding on the left-wing phenomenon of the

non-aligned movement in the first half of the 1970s. In particular,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non-aligned powers over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n the first half of the 1970s provided an advantageous space for North Korea to gain support from non-aligned countries on the Korean issue at the United Nations. The FRUS data shows the sense of isolation that the United States felt within the United Nations amid confrontation with non-aligned forces. As a result, most of the non-aligned countries supported North Korea at the 30th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Korea in 1975.

In summary, despite the common goal of maintaining peace and maintaining the status quo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S, China and the Soviet Union had to fight fiercely in the 1974-1975 debate on the Korean issue at the United Nations. The reason they were unable to compromise on the Korean issue was North Korea. North Korea was able to enjoy an advantage as a pivot by exploiting the reality that China and the Soviet Union could not reconcile with each other in the Sino-Soviet-North Korea triangle. Therefore, it succeeded in blocking the U.S. attempt to negotiate with China in the Sion-Soivet-North Korea triangular relationship. In addition, North Korea's independence has yielded many fruits in non-aligned diplomacy during the détente period. North Korea's non-aligned diplomacy was successful because it made good use of international trends, such as the leftist non-aligned movement and conflict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However,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strategic choices and efforts for North Korea to reach the non-aligned and third world through the anti-imperialist struggle. As a result, North Korea has isolated the United States from the UN through continuous peaceful offensive and non-aligned diplomacy. In the end, in 1975, North Korea was

able to press the UN to withdraw US forces from Korea and dismantle the UN Command by issuing a resolution calling for the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Korea in the name of the UN, which he had been hostile to.

Keywords: Question of Korea, détente, Sino-Soviet disputes, North Korea, Non-aligned diplomacy, 30th UN General Assembly, USFK(Unitied States Forces Korea)

Student Number: 2017-22441